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



2023년 모니터 보고서

한국사회와 고령장애인



발간사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1996년부터 장애 관련 언론 모니터를 시작으로 장애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용어를 발굴·보급하여 장애인 인권 향상과 긍정적인 대중매체 환경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언론 매체 뿐 아니라, 방송과 인터넷 포털 등 다양한 매체의 모니터를 통해 대중의 장애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결과로 언론의 장애비하용어 사용량이 점차 줄어들었으며, 장애 관련 용어 캠페인 활동을 통해 장애(인) 차별 표현 사용의 주의를 촉구하고 바른 표현 사용을 안내하여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는 '2023 모니터 보고서 - 한국사회와 고령장애인'을 발간하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고령장애인 인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니터 보고서에는 초고령사회의 진입과 고령장애인의 증가에 따른 국내 현실을 인식하고, 고령장애인이 언론에서 어떻게 기사화되고 다뤄지는지 분석하며 바람직한 정책대안 마련에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장애 관련 이슈에 대해서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어 올바른 장애인식과 사고를 갖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모니터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넘어 차별 없는 세상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2023년 12월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사장 이수성

2023년 모니터 보고서

한국사회와 고령장애인



CONTENTS

발간사 1

I. 2023년 장애 관련 이슈와 언론 보도의 흐름 / 김현정 5

II. '2023년 이달의 좋은 기사&올해의 좋은 방송&올해의 좋은 크리에이터' / 사무국 19

III. 2023년 장애인 비하 용어 모니터링 분석 / 서문원 37

IV. 기획모니터 1

 1. 고령장애인과 언론 보도 : 2018~2023년 뉴스 <빅카인즈> 분석 / 송경재 59

 2. 2023 고령 장애인 관련 보도내용 분석 기획모니터 / 신재민 73

V. 기획모니터 2

 3. 제43회 '장애인의 날' 언론모니터 / 김철환 87

 4. 언론에 비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 이용석 105

 5.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언론 보도 분석 / 김현식 121

부록

 1. 장애인먼저실천운동 소개 139

 2. 장애인먼저실천 100대 에티켓 143

 3. 장애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 150

2023년 장애 관련 이슈와 언론 보도의 흐름

김현정

前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

I. 들어가는 말

2023년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학대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장애인학대 관련 보도에서 학대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표현 혹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묘사를 하거나 피해자와 주변인의 사생활이 노출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주기도 하였다.

이런 보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정부가 장애인 학대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권고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23년 9월 방송 3사의 장애인과 관련된 뉴스의 보도 영상을 분석한 연구¹⁾를 바탕으로 '장애인보도 영상 가이드'를 제작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보도 내용과 관계없는 증증장애인의 모습이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장애 특성에 대한 과잉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2023년은 장애인 인권을 존중하고 중립적인 시선이 담긴 보도의 필요성과

1) 불편함과 과잉 정보를 제공하는 장애인 보도 영상 분석(한국장애인개발원, (2022) 장애인 정책 연구 공모사업 결과보고서 60p)

구체적인 이행 방향이 제시되기 시작한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해본다. 2023년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장애 관련 이슈에 대해 어떤 관점에서 보도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장애 관련 이슈 보도

2023년 10대 종합일간지²⁾는 장애와 관련된 뉴스를 얼마나 보도했는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검색 서비스 ‘빅카인즈(BIG KINDS)’를 통해 장애인을 키워드로 검색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대 중앙일간지에서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는 12,929건이었다. 이는 2022년에 ‘장애인’ 단어가 포함된 기사 13,108건과 비교하면 약 0.97%가 감소하여, 2022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장애인’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종합일간지에 보도된 장애인 관련 기사는 다음 표와 같다.

〈표〉 주요 10대 종합일간지 ‘장애인’ 관련(키워드 포함) 기사 보도 추이

(단위: 건, %)

연도별 \ 기사별	전체 기사	전년 대비 증감률
2021	11,705	-
2022	13,108	11.98
2023	12,929	▲ 0.97

빅카인즈의 ‘장애인’ 키워드 관련 뉴스와 연관성(가중치, 키워드 빈도수)이 높은 상위 100개의 뉴스를 가중치³⁾를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이하 전장연)·보건복지부·탈시설·고용노동부·전수조사 등이 장애인과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다.

가장 가중치가 높았던 ‘전장연’과 관련된 보도를 살펴보면 지하철 탑승 시위 관련 기사가 주를 이루었으며, 탈시설 정책과 탈시설 장애인(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립한

2)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가나다순)

3) 토픽랭크 알고리즘에 기반해 출력된 결과를 말함. 토픽랭크는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어에 기반하여 검색한 결과에 대해 공시적 분석과 워드 클러스터링을 하여 동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semantic network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출처: 빅카인즈 www.bigkinds.or.kr)

장애인) 전수조사와 관련된 이슈도 함께 다뤄졌다. 두 번째로 가중치가 높았던 보건복지부의 경우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 정책 관련된 기사가 주로 보도되었으며, 고용노동부와 관련해서는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 공개, 장애인표준사업장, 고용부담금 등이 연관 키워드로 나타났다.

〈표〉 주요 10대 종합일간지 ‘장애인’ 관련 연관어 분석(가중치 4이상)

(단위 : 건)

순위	키워드	가중치	키워드 빈도수
1	전장연	16.73	88
2	보건복지부	6.72	26
3	탈시설	6.69	164
4	고용노동부	4.94	10
5	전수조사	4.8	30

〈그림〉 주요 10대 종합일간지 ‘장애인’ 관련 연관어 분석도



그렇다면, 2023년 장애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인 탈시설, 장애인 노동권, 장애아동학대, II(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고령장애인에 대해 주요 10대 일간지의 관심도와 보도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주요 10대 일간지 장애 관련 이슈 보도량⁴⁾

(단위 : 건)

일간지 이슈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계
탈시설	65	28	12	19	23	62	25	16	47	8	305
장애인 노동권	39	3	1	0	4	8	0	4	21	7	87
장애아동학대	32	25	13	17	30	57	19	33	11	21	258
IL센터 법제화	0	1	0	0	0	0	0	0	0	0	1
고령 장애인	18	10	7	3	9	11	5	8	9	8	88
계	154	67	33	39	66	138	49	61	88	44	739

Ⅲ. 이슈별 보도 흐름

1. 탈시설 정책

탈시설 정책은 2023년 관심이 높은 이슈 중 하나이며, ‘장애인’과 관련하여 연관도가 높은 키워드였다. 2023년 3월 확정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는 ‘탈시설’이 아닌 시설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과 본인 의사에 따라 거주환경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거 자립결정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거주시설에서 주거할 수 있는 선택권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 19조에 따른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 및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발표한 탈시설가이드라인(2022.9.)에 따른

4) 주요 10대 언론사를 중심으로 해당 키워드 또는 해당 키워드 및 연관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하였음. 키워드별 검색어로는 ‘탈시설(탈시설)’, ‘장애인 노동권(장애인AND노동권, 동료지원가)’, ‘장애아동학대(장애인AND아동학대, 특수교사)’, ‘IL센터 법제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AND법제화)’, ‘고령장애인(장애인AND고령, 노인)’이 포함됨

의무이행을 위한 정책 시행을 요구하는 ‘전장연,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 앞두고 “우려”(2023.3.9., 에이블뉴스)’, ‘탈시설가이드라인, 한국 이행상황 0%(2023.4.7., 비마이너)’ 장애계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다.

주요 10대 일간지에서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탈시설 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았으며,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현재 시범사업을 토대로 중장기 로드맵을 보완하고 2025년 본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탈시설 로드맵’ 대신 ‘거주지 전환, 서비스 고도화’란 표현을 썼다. 5)는 형태의 보도만 확인할 수 있었다. 2023년 탈시설 정책과 관련하여 어떠한 보도를 했는지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첫 번째는 탈시설을 경험한 당사자의 인터뷰, 사례를 바탕으로 한 탈시설 정책 방향 및 제도, 해외 사례 등에 대한 보도이다. 이러한 보도는 탈시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기사였다고 생각된다.

- ‘사적 자유’ 얻었지만 ‘이동 주거권’은 숙제...탈시설 7~9년차 장애인의 ‘탈시설 그 후’ 2023.1.1., 경향신문
- 입구에도 출구에도 내 ‘의지’는 없었다 2023.1.16., 경향신문
- “밖에 나가서 숨만 쉬는 것도 좋았다” 탈시설 그 후, ‘시설 밖’의 기쁨과 슬픔 2023.1.18., 경향신문
- “자립은 발달장애인에 꿈같은 말 부모 희생만으로는 감당이 안돼” 2023.2.21., 문화일보
- 탈시설 장애인 자립 도움 “조금씩 값으며 살 겁니다” 2023.5.15., 한겨레
- "오빠야, 나가 살까" 용기낸 성희씨 첫 탈시설 장애인의 결혼식 2023.5.21., 중앙일보
- "집에서 돌봄 받을 수 있어야"... 미국, 10년 재판 끝에 '장애아동 탈시설' 판결 2023.7.20., 한국일보
- 혼자 사는 캐나다 장애청년 한국이었다면 집조차 못 구했다 2023.10.12., 중앙일보

반면, 탈시설 정책과 관련한 반수 이상의 기사는 전장연과 서울시의 대립, 지하철 탑승 시위로 인한 지하철 지연 등에 집중되어 있다. ‘탈시설’을 키워드로 기사의 제목을 분석해 보면 전장연 192건·시위 93건·지하철 82건·오세훈 69건 등이 많이 사용되었고, 이와 연관된 키워드로는 폭행·손해배상·피해·대치·불법 등이 사용되었다.

5) 4월부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개시...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주요 내용은 2023.3.9., 경향신문

- 전장연, 지하철역 바닥에 래커칠 제지하자 몸싸움 벌였다 2023.2.13., 조선일보
- 주거 선택권 뺏는 ‘탈시설’... 최중증 장애인까지 ‘벼랑끝’ 내몰려 2023.2.21., 문화일보
- ‘탈시설 장애인 첫 전수조사’ 나선 서울시...전장연과 전면전? 2023.2.22., 세계일보
-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불법전단에 60대 청소 직원 피해” 손해배상 검토 2023.2.26., 문화일보
- 지하철서 전단물 붙이던 전장연 활동가, 저지하는 보안관 폭행해 입건 2023.3.9., 세계일보
- 전장연, 23일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1, 2호선 중심으로” 2023.3.20., 동아일보
- 전장연 23일 지하철 시위 재개...“서울시 표적 조사 멈춰라” 2023.3.20., 한겨레
- 전장연, 시청역서 지하철 탑승 시도 승강장서 대치 중 2023.3.23., 서울신문
- 전장연 또 혜화역에서 집회, 불법 스티커 100장 붙여 2023.4.24., 조선일보
- 서울시, 전장연 보조금 3배로 부풀려 국힘에 제출했다 2023.7.10., 한겨레
- 탈시설 장애인 38명 조사해보니.. 29명은 의사소통 ‘곤란’·3명은 시설 복귀 희망 2023.7.18., 조선일보
- 서울시 “효과적 탈시설 정책 수립하겠다”...탈시설 장애인 700명 전수조사 2023.7.18., 경향신문
-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700명 전수조사...“문항 부적절” 비판도 2023.7.18., 한겨레
- 서울시 “전장연 극단 시위, 영향력 축소 불안 두려움 때문” 2023.7.20., 세계일보
-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절차 개선 추진...전장연 “인권 침해” 2023.11.16., 서울신문
- 전장연, 두 달 만에 지하철 탑승시위 재개 2023.11.20., 서울신문
- 56일 만에 시위 재개한 전장연 서울시 “명분없는 시위” 2023.11.20., 중앙일보
- 오세훈, 장애인 ‘탈시설’ 예산도 19억 삭감...“유엔 협약 위반” 2023.11.22., 한겨레

탈시설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목을 끄는 자극적인 이슈로 사용되며, 장애 관련 이슈 전반에 대한 피로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은 우려되는 점이다. 2024년에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한 논의가 담긴 기사들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2. 장애인 노동권

2023년 9월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의 2024년 예산(23억)이 전액 삭감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187명이 2023년 12월 31자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태를 맞았다.

이에, 9월 18일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비장애인 지원가들은 사업 폐지를 막기 위한 시위가 열렸고, 시위가 시작된 지 반나절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참여자 27명이 경찰에 강제 연행되었다.

해당 사건은 기사화되었고, 경찰의 강제 연행에 대한 우려 지점을 보도한 기사 ‘집시법 신고 대상도 아닌데…경찰, 실내 집회에 ‘공동퇴거불응죄’ 마구잡이식 적용(2023.10.6., 경향신문)’도 눈에 띄었다.

- “동료지원가 예산 복구해야”…경찰, 장애인공단 점거한 27명 연행 2023.9.18., 경향신문
-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없애다니…” 전장연 27명 농성 중 연행 2023.9.18., 한겨레
- 전장연, 장애인고용공단 점거했다가 27명 전원 연행 2023.9.18., 한국일보
- 중증장애인이 문고리에 스스로 수갑을 채운 이유 2023.9.24., 한겨레

해당 보도를 통해, 동료지원가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해 발언을 하는 등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본 사건의 당사자인 동료지원가들의 인터뷰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 “장애인 동료 도우며 자신감 얻었는데… 예산 삭감에 막막” 2023.10.4., 세계일보
- “삶을 빼앗지 말라”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가 말하는 ‘일의 기쁨과 슬픔’ 2023.10.8., 경향신문
- 내년 예산 '0원'… 해고 앞둔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들 2023.10.21., 한국일보
- 발달장애인 문석영씨가 국감 나선 이유…“쓸모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 2023.10.23., 경향신문

한편, 서울시는 2020년부터 시작된 권리중심 일자리가 집회·시위 등 캠페인 위주의 선전·선동 활동에 편중되면서 장애인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일자리가 오히려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여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을 위한 개편⁶⁾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 참여 당사자인 장애인과 관련 단체는 서울시가 계획 중인 일자리는 권리중심 일자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고 일부 언론에서 이를 보도하였다.

- 서울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무력화...“장애인 기본권 침해한 위헌” 비판도 2023.8.10., 한겨레
- 장애인 400명 직업 뺏는 서울시...“월급 75만원도 끝” 2023.11.10., 한겨레
- 장애인끼리 '일자리 경쟁' 붙이나...“중증장애인 해고 밀어낸 서울시” 2023.12.27., 한겨레

중증장애인의 노동권과 관련한 사건과 이슈가 언론에 보도되며, 많은 사람들이 해당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정 사건 외에도 [장애인 일자리가 없다] 기업을 고용 장벽에... '생존 벼랑' 내몰리는 장애인(2023.4.6., 한국일보), '평균 월급 37만원... 최저임금 따위 없는 '그들이 일하는 세상'(2023.4.11., 경향신문) 장애인의 노동권과 관련한 보도를 통해 관련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관련된 이슈가 다루어졌다.

3. 장애아동학대

2023년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 이슈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던 시기, 유명 웹툰 작가가 장애가 있는 자녀를 학대한 특수교사를 고소해 재판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각종 매체에서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해당 사건은 '교권침해' 이슈와 맞물리며 장애가 있는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부모의 행위에 대한 비판과 특수교사의 발언 등이 보도되었다.

- "진짜 밍상이네, 너 싫어죽겠어" 주호민 아들이 교사에 들은 말, 2023.8.2., 중앙일보
- "진짜 밍상이네, 너 정말 싫어"...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2023.8.2., 한국일보
- 주호민 아들 교사 공소장에 "밍상, 싫어죽겠네"... 교사측 "부정적 말만 짜깁기" 2023.8.2., 조선일보
- 특수교사, 주호민 아들에 "진짜 밍상.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아동학대 공소장 공개돼 2023.8.2., 조선일보

6) [해명자료]“죄송, 불합격입니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구직난 시작됐다 관련 2024.1.29., 서울특별시 대변인 참고

- 주호민이 문제삼은 교사발언 “진짜 밋상 너 정말 싫어” 2023.8.2., 국민일보
-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발언 공개 교사 측 “악의적 짜깁기” 2023.8.2., 서울신문
- 주호민 “특수교사 신고, 분리조치 유일한 선택지 선처 탄원서 낼 것” 2023.8.2., 경향신문
- “진짜 밋상, 너 싫어” 주호민 무단 녹음 논란에 교총 “증거 인정하면 안돼” 2023.8.2., 동아일보

또, 사건의 교사가 작성한 경위서가 공개되며 장애 학생의 돌발행동을 학교폭력이라며 비난하는 댓글이 이어졌고, 장애 학생을 특수학교로 보내야 한다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이후, 사건의 중심에 있던 학생의 전학이 또 다른 이슈로 떠올랐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서 특수학급 증설을 추진했으나, 일부 학부모의 반대로 무산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장애에 대한 혐오를 멈추자는 사회의 목소리도 높아져 갔다.

- 전학 전 특수학급 증설 추진했지만 “장애인 많아져” 일부 학부모 반대 2023.8.13. 경향신문
- “학교에 장애인 많아진다”...주호민자 전학 배경 사실 이랬다 2023.8.13. 중앙일보
- 주호민자 전학 속사정 보니 “장애아 늘어난다” 특수학급 증설 반대한 학부모들 2023.8.14., 세계일보
- 주호민 아들 전학 이유 “장애인 많아져” 반발 있었다 2023.8.14., 국민일보
- 주호민 자녀 전학 이유는... ‘특수학급 늘리지 말라’는 학부모 민원? 2023.8.14., 한국일보
- 특수 학생 20% 증가 “교권침해 논란, 장애혐오 돼선 안 돼” 2023.8.28., 동아일보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특수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었다. 이러한 보도는 해당 사건을 교권침해나 장애 학생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교육시스템의 부재와 장애 혐오를 지적하며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며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을 하였다.

- “통합교육은 장애 비장애 ‘차별의 벽’ 넘는 시도이자 세계적 흐름” 2023.8.3., 경향신문
- ‘주호민 논란’이 보여주는 자폐혐오 우영우만 받아들일 순 없다 2023.8.3.. 경향신문
- 세계적 흐름인 통합교육, 국내법도 보장 “차별의 벽 넘는 시도” 2023.8.3., 경향신문
- 통합교육 늘어나지만 문제학생 생기면 ‘특수반’ 책임 2023.8.4., 한국일보
- 특수교사 한부모 “장애아동 아닌 교육시스템 문제” 2023.8.7., 경향신문

- “졸업 후 갈 곳 없다” ‘주호민 사건’에 속타는 장애 학부모들 2023.8.10., 중앙일보
- “원인은 인력부족” 특수교사들이 본 ‘주호민 논란’ 2023.8.13., 경향신문
- 특수학생은 늘지만, 교사는 부족...법정 기준 충족 지역 1곳뿐 2023.8.20., 세계일보
- 특수교사 증원 대신 장애학생 묶어두는 ‘결박의자’ 재등장? 2023.8.21., 한겨레
- 교사 채용 축소... 열악해진 장애인 특수교육 2023.9.26., 경향신문
- 통합교육 성공 위해선 ‘교사 불안’ 덜어야 2023.10.9., 한겨레

피해 아동의 부모가 유명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사건은 시작부터 재판 진행 과정까지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는 상황 속에서 피해 아동과 주변인의 인권은 제대로 보호되었는지 돌아보게 된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 안에서 특수교사와 장애아동이 처한 현실을 어떻게 개선해나갈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4. II센터 법제화

2023년 1월 26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I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여 II센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II센터 양대 단체(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II센터의 법적 지위가 마련되지 않아 의무를 다했음에도 대우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반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II센터가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를 토대로 운영되기에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하위법령이 적용되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센터 설립과 운영, 참여에 장벽을 높여 당사자를 배제 경향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차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고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 시행되게 된다.

해당 법안의 심사가 통과에 반대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의원실
접거 관련한 기사 1건 ‘한자협에 의원실 접거된 이종성 “면담 아닌 테러”(2023.11.22.,
국민일보)’ 만이 보도되었을 뿐이다. (주요 10대 일간지 기준)

IL센터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스스로 주체적인 힘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하며, 기존의 복지서비스와는 다른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장애인이 서비스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며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왔기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언론의 관심과 보도가
이어지길 바란다.

5. 고령장애인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97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해 초고령화사회⁷⁾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OECD 평균인 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⁸⁾

2022년 등록장애인현황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비율이 전체
등록장애인의 5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고령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빅카인즈의 주요 10대 일간지를 기준으로 한 고령장애인(장애인·고령·노인)의 기사량은
88건으로 ‘장애인’ 기사 12,929건의 0.68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고령장애인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다뤄지기보다는 장애인이나 노인의 일부로 포함된 주제가 주를
이루었다. 88건의 기사 중 고령장애인을 핵심 주제로 한 기사를 살펴보면 고령장애인 현황
및 문제, 지자체의 고령장애인 정책과 돌봄, 고령장애인에 대한 민간 지원 등이 주제로
다루어졌다.

7)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 이상

8) OECD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

먼저, 고령장애인의 현황과 문제를 다룬 기사를 보면,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657만원…비장애인보다 4.1배 많아 (2023.2.21., 세계일보)’에서는 장애 노인의 높은 의료비 부담에 대한 문제를 짚었으며, ‘장애인도 ‘고령 1인 가구’ 증가에 시장소득 빈곤율 늘었다 (2023.9.4., 경향신문)’에서는 장애인의 고령화와 가구 유형의 변화로 비노인 장애인보다 노인 장애인의 빈곤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하였다.

장애 노인이 가진 어려움과 장애인과 노인으로 분리된 정책의 충돌에 대한 ‘노인 일반에 초점을 맞춘 정책, 장애 노인은 서럽다 (2023.10.17., 국민일보)’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와 반대로, 고령화에 따라 치매를 장애의 영역으로 인정해달라는 ‘엄마 두고 주차하는 순간도 공포인데…치매는 장애가 아니라고요? (2023.3.26., 한겨레)’, “노인성 치매도 장애 인정을”…치매협회, 오늘 헌법소원(2023.9.6., 문화일보)’ 보도도 눈에 띄었다.

장애 노인의 학대 문제를 다룬 기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로,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2023,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학대 피해자 중 65세 이상은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집에 10년 넘게 ‘무단거주’한 60대…조카 행세에 폭행까지 2023.5.22., 서울신문
- “좋은 약 있다” 속여 90살 성폭행…고령화에 노인 대상 성범죄 증가 2023.8.3., 한겨레

경기도의 고령장애인 쉼터 설치 확대, 서울시의 고령장애인 지원, 광주시의 찾아가는 돌봄, 부산시의 전 생애 맞춤 돌봄 등 지자체의 고령장애인의 돌봄 정책 관련 보도가 이어졌다.

- 경기도 ‘보조기기 관리 시스템’ 보급…“장애인 삶의 질 개선” 2023.1.12., 국민일보
-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확대 추진… 월 5만원 ‘기회 소득’ 시범 지급 2023.1.24., 경향신문
- 초인등 달아주고, 반려로봇도 준다…복지 틈새 메우는 서울시 202.4.23. 한국일보
- 지역에 싹튼 ‘찾아가는 돌봄’…정든 내집서 치료·요양해요 2023.3.28., 한겨레
- ‘선별 지원’ 기준 없앤 ‘광주형 돌봄’…5개월 만에 사각지대 6000명 발굴·지원 2023.9.7., 경향신문

- 2025년 초고령사회 앞두고 서울에 ‘학교’ 대신 ‘노인요양시설’ 늘린다 2023.10.17., 경향신문
- 전 생애 맞춤 돌봄 ‘안녕한 부산’ 만든다 2023.10.19., 세계일보
-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노인질환, 고령장애인으로도 확대 2023.10.30., 경향신문

앞서 언급하였듯 고령장애인과 관련한 보도는 ‘장애인’과 ‘노인’ 관련 기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주목을 받는 주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고령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장애인과 노인이 분리된 현재의 복지정책은 고령장애인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기에 고령장애인과 관련한 사회의 문제를 조명하고 관심을 집중시키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언론에서 고령장애인 만의 특화된 사회적 욕구를 반영한 정책에 관한 관심을 끌어내는 보도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IV. 나오며

2023년 장애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인 탈시설, 장애인 노동권, 장애아동학대, IL(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고령장애인과 관련하여 주요 일간지가 어떤 시각에서 보도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모니터링을 하며, 장애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주요 일간지가 다루는 이슈의 차이가 눈에 띄었다. 주요 일간지의 ‘장애인’ 관련 기사의 많은 부분은 복지의 수혜 대상으로 다루거나, 관계 부처나 기관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가 반복되어 노출되었다. 더불어 세간의 주목을 받은 특정 사건들에 대한 집중보도가 이뤄지며, 장애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은 주목받지 못했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나 논의들이 다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보였다.

특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의 대립, 장애아동학대 관련해 사건의 과정들이 자세하게 보도되며 대중의 주목을 끌었지만 사건과 관련하여 갈등을 부각시키거나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주변에서 장애인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한 모습으로 장애와 장애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기에 언론보도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렇기에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중립적인 시선으로 보도가 다뤄지길 바란다.

2024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장애 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장애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과 관련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3년 이달의 좋은 기사&올해의 좋은 방송&올해의 좋은 크리에이터'

I. 선정 기준

우리 운동본부는 장애인 관련 기사의 질적 향상과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10개 종합일간지와 8개 경제지를 대상으로 장애인이나 장애 관련 문제를 다룬 보도를 취합해서 분석한 후 우리 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기준에 따라 매월 1건씩 '이달의 좋은 기사'를 선정하고 있다.

또한,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을 대상으로 장애를 다룬 방송 프로그램 중 인식개선과 인권신장에 도움이 되는 방송을 우리 운동본부 '올해의 좋은 방송' 선정기준에 따라 연 2회에 걸쳐 '올해의 좋은 방송'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영상 콘텐츠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증대됨에 따라 연 1회에 걸쳐 '올해의 좋은 크리에이터'를 선정하고 있다.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기준표〉

선정기준	내용
장애인 이해도	· 장애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가? · 장애인 인권 보도 준칙*을 준수하였는가?
사회적 영향력	· 보도를 통해 문제해결, 정책·제도 개선, 해당 의제의 사회적 확산 등 실질적으로 장애 인권 구현을 위해 사회에 공헌했는가?
장애 인권 지수	· 장애인을 타자화하지 않았는가? ·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선에서 접근하였는가?
비장애인 공감도	·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의 현실을 알려서 공감하도록 하였는가? · 장애인복지 전문용어나 장애인 계에서 통용되는 말을 풀어서 사용하였는가?
보도의 정확성	· 장애(인)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는가?
기사의 가치	· 직접 취재·취재원 존재 유무·취재목표 반영·반론·부연 설명·실용적 정보 유무·전문용어 사용 등 기사로서 가치가 있는가?

〈장애인 인권보도준칙〉

구분	내용
<p>장애인 인격권 보호</p>	<p>①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②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했는가? ③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했는가? ④ 장애를 질병으로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 사용했는가? ⑤ 장애인을 동정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인 존재로 묘사했는가?</p>
<p>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 노력</p>	<p>①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예: 장애는 어둡고 부정적인 것, 장애를 고치라 등) ② 미담 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했는가? ③ 장애인의 초상권, 프라이버시, 인격권을 지키려고 노력했는가? (인권보도준칙) ④ 장애인 촬영 시 장애 부위를 부각하거나 인격권이 지켜지고 있는가? (인권보도준칙) ⑤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차별 성폭력 보도 시 신중을 기했는가? (인권보도준칙) ⑥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 인식개선에 노력했는가? (인권보도준칙) - 장애인 행복추구권 보장하기 - 장애인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하기 - 장애인의 활동적인 사회참여자로 묘사하기 - 장애를 감성이 아닌 사회제도 차원에서 접근하기 - 특정한 날에만 장애인 이슈 다루지 않기</p>

장애인 인권보도준칙 : 국가인권위원회(2013). “주요 언론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조사”, p.34

〈'올해의 좋은 방송' 선정기준표〉

선정기준	내용
장애인 이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관련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 장애와 관련된 건전하고 유익한 내용을 전달하였는가?
사회적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의 장애감수성 향상에 기여하였는가? · 기타 장애인권 신장에 기여하였는가? · 시청자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는가?
제작자의 장애인에 대한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선에서 접근하였는가? · 장애인 촬영 시 장애 부위를 부각하지 않고 초상권, 인격권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는가? · 장애가 이야기의 중심이 아닌 이상 '장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람'을 중심으로 표현하였는가? · 성공한 장애인을 영웅으로 묘사하지 않으며, 장애인을 활동적인 사회참여자로 보여주었는가?
방송의 완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도 있는 방송을 제작하였는가? · 기획이 참신하고 제작기법 및 내용 전개가 독창적인가? · 시청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는가?

〈'올해의 좋은 유튜브' 선정기준표〉

선정기준	내용
장애인 이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가?
사회적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을 통해 문제해결, 정·제도 개선, 해당 의제의 사회적 확산 등 실질적으로 장애인권 구현을 위해 사회에 공헌했는가?
장애인권 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을 타자화하지 않았는가? ·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선에서 접근하였는가?

II. 선정 기사

1월 서울경제(송영규 기자 / 1월 27일)

“시각 대신 공감력으로 현대인 아픔 보듬죠”

서울경제

사람&사람

“시각 대신 공감력으로 현대인 아픔 보듬죠”

‘마음보듬사’ 직업 만든 이재동 블그늘협동조합 대표

“시각장애인들은 후천적 요인에 의해 시각을 잃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천적으로 앓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절망감이 더 커죠. 이들이 교육을 통해 좌절감을 극복하면 뛰어난 공감과 치유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열망을 전문화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입니다.”

시각장애인 특화 직업 ‘마음보듬사’를 개발한 블그늘협동조합의 이재동 대표는 26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자리에서 “시각 장애를 부정적 요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승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진 마음에 힘을 가져오겠다는 뜻과 그늘진 곳을 본다는 의미를 담은 ‘블그늘협동조합’은 2017년 시각장애인에게 제대로 된 직업을 주자는 목표를 갖고 서울대 재학생들이 세운 사회기업이다.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기껏해야 안마업 정도가 알려져 있을 따름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비장애인 고용률은 72.5%지만 시각장애인은 43.1%에 불과하다. 시각장애인 스스로 장애 탓에 업무를 못할 것이라는 자괴감이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힘들 것이라는 상실감이 짙진 이유다.

이 대표는 시각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직업을 갖게 된다면 일부 고용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것이 ‘전문성’

절망감을 소통·치유능력으로 바꿔 역량 보장되는 ‘블라인드’ 집중으로 고정관념 없이 진솔한 상담 가능 고용 안정성 확보 후 분야 넓힐 것

다. 그는 “시각장애인들이 가진 공감·소통 능력에 전문적인 교육을 더하면 훌륭한 상담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이 비장애인과 같은 자유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블그늘이 주목한 것은 시각장애인들이 시각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소통하는 상황에 익숙하다는 점이다.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상대방도 대화 당사자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시각이 좋지 않으면 소리만 듣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청각 민감성이 누구보다 뛰어나다. 이 대표는 “시각장애인들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경청하기 때문에 뛰어난 공감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역명성과 소통 능력이야말로 이들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인에게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이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직장 생활 초경년에 해당하는 25~39세의 스트레스 인지도는 무려 34~35%에 달한다. 50대 이상이 20%대 초반에 그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마음보듬사’와 이들이 진행하는 ‘블



이재동 블그늘협동조합 대표가 시각장애인의 공감 소통 능력이 상담사가 되기 위한 장점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라인드 마음보듬’ 서비스는 시각장애인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는 목적하에 탄생했다. 물론 이들의 전문성이 정신과 치료만큼 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럼에도 비장애인과 대면과 비대면 상담을 통해 치유의 기회와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열 차례 정도 상담을 받은 고객이 후기를 통해 상담으로 나도 모르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됐고 그동안 나에게 너무 가혹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심정을 토로했다”며 “어떤 고객은 온전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상담사 역시 직업 활동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그렇다. 그는 “이전에는 시각 장애를 부정적이었던 생각이었던 한 마

음보듬사가 얼마 전 ‘장애가 역량으로 승화’했다는 점이 가장 행복하게 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소통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좋았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1억 5000만 원의 투자 유치도 받은 블그늘은 얼마 전부터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을 접고 기업 관련 서비스에만 집중하는 게 그 시작이다. 회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주 대상이기에 상담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른 영역으로의 도전도 생각하고 있다. 이 대표는 “시각장애인의 고용 안정성 확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확인되면 직장 장애 관련 직업 개발 등에도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빛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글·사진=송영규 선임기자

시각장애인은 시각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소통하는 상황에 익숙하다. 이러한 특성에 전문적인 교육을 더하면 훌륭한 상담사가 될 수 있다. 기사는 시각장애인 특화 직업 ‘마음보듬사’를 창안한 ‘블그늘협동조합’에 주목하고 있다. 상담사 활동으로 시각장애인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직업인으로 성취감을 느끼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단독] 보행천국vs보행지옥… 지자체마다 하늘과 땅 차이

신년기획-하루만보 하루천차

보행 천국과 지옥 사이… 지자체 노력 따라 갈렸다



“이제는 1년 남았는데 건너기가 너무 부담네요.”
부안 해운대 구방아골에 거주하는 A씨는 난이도 세설교와 산술이 없는 횡단보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난이도 7준들은 학교·직장에 가기 위해 이 횡단보도를 통과해야 하지만, 운전자들이 보행자가 건너 틈을 주지 않거나, 횡단보도의 중간지점을 지나고 있는 데도 경적을 울리는 일이 잦다. 산술기가 없는 교차로 특성상 운전자들이 가지 판단으로 패스하기어하는 탓에도 중간에 앞회차로 걸리는 일이 많다. 이 때문에 교차로 지점을 빨리 운전해 나가면서 이런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뉴스코리아에 따르면 올해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관련서류 지난해 8월 50%에 올랐다. 그는 “몇 년 전에 이사 와서 이 횡단보도를 건너게 됐는데, 5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떤 운전자가 지난 수 있게 도와주지 않았다”며 “운전자들 개별적으로 신고해도,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아무런 개입이 없었다”고 말했다.

◆OECD 중 보행안전 최하위 국가 14곳
OECD 28개국 중 최하위 4개 국은 노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수는 10만명당 2.8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만명당 1.1명)의 2배가 넘는다. 통계가 확인되는 OECD 28개국 중 최하위 4개 국은 노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9년까지 2021년의 44%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작년 8월 7대 1차 국가보행안전 및 운전자 기본계획(2022-2026년)을 시행했다. 교통사고는 수백년 전통으로 고령사

행량부 '보행안전지수' 산출
사안건도·조례·예산 등
정책노력도 따라 세 등급
경쟁력부터 매년 조사·공표

서울·경기·인천·양천구
경기 용인·여주, 대전 태백 등
'양호' 등급 받은 도시 11곳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횡단보도에서 앞지르기 금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전국공공연구원에 '보행안전수' 개발을 위한 운영연구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의 보행안전을 계량적으로 파악해 취약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보행안전지수는 보행 중 사망 건수 등을 원수로 반영한 '사고안전도'와 보행환경 조율 유무, 보행 예산 비중 등을 측정해 '정책노력도'에 따라 'R(적색-위험)' 'Y(노란-보통)' 'G(녹색-양호)' 세 등급으로 평가

◆OECD 중 보행안전 최하위 국가 14곳
OECD 28개국 중 최하위 4개 국은 노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수는 10만명당 2.8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만명당 1.1명)의 2배가 넘는다. 통계가 확인되는 OECD 28개국 중 최하위 4개 국은 노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9년까지 2021년의 44%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작년 8월 7대 1차 국가보행안전 및 운전자 기본계획(2022-2026년)을 시행했다. 교통사고는 수백년 전통으로 고령사



'보행천국 도시'는 여덟개, 서울 관악구·노원구·양천구, 경기 용인시·여주시, 대전 태백시, 충남 계룡시, 강원 춘천·영월·양구·정선, 부산 동 등 총 11곳이었다. 지자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서울·경기·인천·양천구 등 보행안전 정책이 중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예산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학교·역사 주변에 많이 설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는 “중앙정부 지원이 다른 기초자치체보다 높은 탓에 2019년부터 중앙 예산보다 높은 예산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학교·역사 주변에 많이 설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보행안전지수 최하등급 받은 14곳은 사고안전도와 정책노력도에서 모두 최하 등급인 R을 받은 곳이다. 부산 진구·강서구, 경기 고양·의정부·성남시, 강원 태백시·화천·영월·양구·정선, 전북 임실군, 충남 청양군 등 총 14곳이다. 다만 14곳이 보행자가 걷기에 반드시 위험하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지적도 있다.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보행환경 연구센터장은 “보행안전지수 분포가 지자체간 보행환경 개선에

노력했지만, 성과가 그다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반면, 보행환경 인프라와 운전자들의 의식이 잘 갖춰져 있어 좋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도 부산의 기초자치단체로는 보행안전지수가 가장 높았다. 보행안전지수가 가장 높은 부산시 시범사업은 “15분 도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신호등(적색

등·녹색등) 전유시간 표시 △보도 경계식 벽 2배로 확대 △보행자 집중경로 설치 △횡단보도 전 20m 구간에 미끄럼방지포장 △차선의 경우 감지기로 차량이 주우 계획이다. 오 센터장은 “보행안전지수가 지자체가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계량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원문도 부분에 대해 정부가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보행안전지수' 매년 조사·공표 정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지수가 된 보행안전지수 총 11곳이 매년 조사·공표된다. 보행안전지수는 지자체 간 보행안전의 격차 정도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줘 지자체 간 경쟁을 촉진시켜 보행안전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비를 통한 위약금 조성이 시급히 필요하다. 보행안전지수가 점수나 순위가 아닌 등급으로 공표되는 이유다. 한수원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매년 산출되는 보행안전지수를 통해 지자체의 보행안전 수준을 모르면 안 되고 지자체는 구체적인 보행안전 계획 수립을 도출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보·천차’ 시작하기 QR코드를 찍으세요

매일 아침에 만보(만보 걷기)를 하고 천차(천차 걷기)를 쓰는 습관을 기를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만보(만보 걷기)를 하고 천차(천차 걷기)를 쓰는 습관을 기를 것입니다.

정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지수가 된 보행안전지수를 공표하였으며, 이 발표로 지자체 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보행안전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사는 지역 간 천차만별의 보행환경 인프라와 운전자·보행자의식 수준에 따라 체감지수는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하며, 적절한 모니터링과 예산 투입 등 보행안전 취약지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3월 조선일보(방극렬 기자 / 3월 24일)

車에 치인 시청각 장애인... '4자 통역' 끝에 눈물 진술서 [길]

朝鮮日報

2023-03-24 (금) A10면

車에 치인 시청각 장애인... '4자 통역' 끝에 눈물 진술서

길

경찰이 질문하면 장애인 관계자 2명이 손 먼저 못 전하는 '촉수'로 소통해줘

"지방이 깜빡하고 골목 건너 사고" 3쪽짜리 진술서 1시간 걸려 작성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은 장애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경찰이 장애인 단체 관계자 2명을 불러 '4자 통역'으로 피해자 조사를 했다고 한다. 네 사람이 모여 3장짜리 진술서를 작성하는 데만 1시간이 걸렸다. 경찰에 이런 중복 장애를 겪는 시민을 조사할 인력이 없었던 탓에 벌어진 일이었다.

사건은 이렇다. 지난 14일 오후 5시쯤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촌 골목길. 집 앞 수퍼에 가던 김모(61)씨가 지나가던 승용차 뒷바퀴에 왼쪽 발이 밟히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운전자는 김씨를 보고 천천히 차를 물었다는 김씨 말이 차에 밟힌 것이다.

운전자는 김씨가 보험사기단처럼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살펴보니 김씨는 시각과 청력을 모두 잃은 시청각장애인이었다.

어릴 때 청력을 잃은 김씨는 성인이 된 뒤 점차 눈도 나빠져 15년 전쯤 시력까지 없었다. 누군가 곁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못 한다. 시력이 남아 있을 때 다녔던 지금 거주지 근처에서만 혼자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한다.

경찰관은 김씨와 전혀 소통할 수 없었다. 결국 김씨가 다니던 장애인센터의 A씨, 김씨



와 친분이 있던 조원석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 대표가 급히 서울 은평경찰서로 왔다.

김씨는 시력을 잃기 전에 글을 배웠지만 10여 년이 지나 글씨로는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점자 사용법도 몰랐다. 그의 의사소통 수단은 '촉수'였다. 손으로 수어를 하면 다른 사람이 그 손을 먼저 이해하는 방식이다.

촉수어는 수어를 하는 사람의 표정을 보지 못한 채 손의 움직임만 읽어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손을 계속 얹고 있어야 해 일관 수어보다 동작이 훨씬 제한되고 체력 소모도 크다. 그래서 수어가 가능한 사람도 촉수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에는 이런 촉수어를 하는 사람이 없다.

그날 경찰관은 비장애인인 A씨에게 먼저 질문을 했다. 그러면 A씨는 시각장애인인 조원석 대표에게 크게 소리치거나 그의 손바닥에 글씨를 써 질문을 전달했다. 조 대표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왼쪽 청력은 미약하게 남아 있다고 한다. 이어 조 대표는 다시 김씨에게 촉수어로 질문을 전했다.

김씨의 대답은 그 반대 과정을 통해 경찰관에게 전달됐다. 김씨는 "저녁으로 먹을 라면을 사기 위해 수퍼에 가는데 지방이 밟힌 박하고 두고 나왔다. 평소처럼 길 한쪽을 다

라 천천히 걷는데 갑자기 차에 치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의 진술서 3쪽을 쓰는 데 1시간가량 걸렸다. 바뀌어 깔린 김씨의 발은 튕통 부었다. CCTV 등을 확인한 경찰관은 운전자도 안전 수칙을 잘 지켰다고 판단해 그를 일건하진 않았다. 원래 시각·청각장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관할 통역센터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김씨와 같이 중복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별도 매뉴얼은 없다. 정부 차원에서 양성하는 촉수어 전문 통역인도 없다. 조 대표는 "촉수어 전달 통역인도 키워야 한다는 걸 일깨워 주는 사건"이라고 했다.

방극렬 기자

교통사고를 당한 시청각장애인이 장애인 단체 관계자 2명 동석 하에 1시간 만에 피해자 조사를 마쳤다. 단시간의 조사는 경찰의 중복 장애가 있는 시민을 조사할 인력이 부재했던 탓에 벌어진 일이었다. 기사는 경찰에 중복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 매뉴얼이 부재한 원인을 꼽으며 정부 차원에서 장애 특성에 맞는 전담지원사를 양성하여 배치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6월 세계일보(김동환 기자 / 6월 11일)

놀이터서 쫓겨났던 ‘휠체어 그네’… 2023년 하반기 다시 친구들 맞는다 [김동환의 김기자와 만남시디]

클릭 뉴스 속으로 9

놀이터서 쫓겨났던 ‘휠체어 그네’ 올해 하반기 다시 친구들 맞는다

김동환의 김기자와 만남시디

정부, 뒤늦게 안전기준 마련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대보나에 공원 어린이 놀이터. ‘휠체어 그네’ 1대가 눈에 띄었다. 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들이 오르내리는 주변 놀이기구와 달리 이용자는 이가 없었다. 다가서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휠체어 사용자 외 이용을 금한다’는 종로구 명의 안내문이 보였다. 안내문에는 안전 확보를 위해 그네 탑승 시 동행인이 있어야 한다는 당부도 담고 있다. 주변 장애인 관련 시설 이용이 어렵거나 내심 기분이 안 좋았는지 여부는 익히지 못한 김기자는 이는 불 수 없었다.

●신용 무제한 혜택에 그네 철거

휠체어 그네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2014년 전국 특수학교에 기증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2012년 조수미의 한 특수학교에서 휠체어 그네를 본 조씨가 우리나라 장에 아동에게 선물했다.

단단한 철재봉 두 개 사이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무거운 상자 모양으로 제작된 휠체어 구조물이다. 휠체어 탄 채로도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일면 그네와 비슷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장애 아동에게 큰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경남 김해은혜학교와 창원현상학교, 진주예광학교 그리고 경기 광주 현사관학교와 세종누리학교에 설치됐던 휠체어 그네는 장애인 놀이기구 안전인증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설치 자체가 불가능해 안타깝게도 모두 철거됐다.

지난달 최고급 세종시교육청은 사회적기업인 세브스(S&S)에 2016년 세종누리학교에 놓였던 휠체어 그네가 설치 6개월 만에 철거된 뒤 철거도 방지했다가 2019년 11월 철거된 뒤 사물을 뒤늦게 알았다며 조씨에게 사과장을 올리기도 했다. 조씨는 “교육기관의 잘못이 아니라 진술한 사과로 오히려 마음이 무겁다”고 답했다.

이후 휠체어 그네 철거 소식이 퍼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안전 기준을 만들면 될 아닌가’, ‘공무원들의 게으름이 선봉을 문고 있다’ 등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장애인 관련 단체도 나서 어른들의 무책임이 장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빠른 개선을 촉구했다.

●안전기준 마련 나선 당국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 개발’인 재량제도로 장애 아동이 휠체어 그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대보나에 공원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된 휠체어 그네. 다가서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휠체어 사용자 외 이용을 금한다’는 안내문이 보였다.

조수미 전국 특수학교 기증 불구 안전 기준 없어 모두 철거·방치 “장애아동 권리 외면” 비판 봇물 산자부, 개장만 내달 확장·고시

2021년부터 11년간 연구 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개장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행정 예고도 했지만, 이해관계자 조율도 시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와 재용인정심의회를 거쳐 재량제도에 이르렀다.

개장안은 비장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도 보완했다. 그네 해킹과 지면 사이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일정 간격(230mm)을 확보했고, 그네 모서리에 충격 흡수 물질을 추가하는 한편 수위검고 표시도 추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23일 재량제에-인 기준이 끝나면, 수요자 발주와 업체 제작-인증 준비 등에 차질이 없도록 내달 확장-고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도 안전 기준안을 반영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개발을 진행해 오는 10월 시행을 예정이다.

●장애 아동 존엄성 강조하는 국제 협력 유엔 아동권리협약 23조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동의 존엄성 보장을 강조하면서, 장애 아동이 사회적 통합과 개인의 발달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가 기부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도 장애 아동 관련 조항을 별도로 뒤 다른 아동처럼 기본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돼 있다.

앞서 세종누리학교의 휠체어 그네 철거 소식이 알려진 뒤 총합의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휠체어 그네를 어린이 놀이기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휠체어 탑승에 없는 어린이는 어린이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장애아 그네를 탈 수 없는 것은 놀 권리를 빼앗아 장애 아동을 어린이로 인정하지 않는 차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kimchan@segye.com

성악가 조수미의 기증으로 2014년 전국 특수학교에 설치된 휠체어 그네. 그러나 안전 인증 기준미달로 철거되었다. 장애로 그네를 탈 수 없는 것은 놀 권리 차별을 넘어 장애아동을 어린이로 인정하지 않는 차별이라는 시민단체들의 지적 속에 정부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와 기술 기준을 마련해 하반기에는 휠체어 그네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사는 장애로 그네를 둘러싼 논란 진행 과정을 보도하면서 장애아동의 존엄성도 존중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8월 한국일보(손현성·홍인택 기자 / 8월 4일)

두들겨 맞고도 혼자 참는다... '특수교사다움' 강요에 명드는 교권[벼랑 끝 특수교사] 외 1건

▶ QR코드를 통해 관련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사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의도성을 막론한 장애학생의 도전행동,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나 비협조로 특수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겪는 일이 다수지만 교사 지원책이나 예방책이 미비하다. 기사는 교사에게 문제해결 책임을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에서 벗어나 특수교육 특성을 반영한 현장 매뉴얼, 교사와 부모가 서로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통합교육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9월 문화일보(안진용 기자 / 9월 28일)

“자폐 별이”가 전학 온 지 한달… 아이들도 ‘다름’ 보듬게 됐죠

▶ QR코드를 통해 관련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BS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딩동댕 유치원’에 새 캐릭터 ‘별이’를 등장시킨 지 한 달. 부적절한 보도자료 문구 때문에 비판 보도와 항의도 있었으나, 별이가 세상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듯 주변인들이 별이를 이해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작진의 입장이다. 기사는 다름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지 않고 꾸준히 걸어가야 하며, 학생과 교사를 모두 생각하고, 학교와 사회를 잇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차마 장애 등록은 못해”... 느린 학습자 엄마 눈물 외 9건

국민일보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001면 중

“차마 장애 등록은 못해” 느린 학습자 엄마 눈물

장애도 비장애도 아닌



① 교육·복지 사각지대 방지

**IQ 71~84- 전체 인구의 13% 추정
지원 전무 ‘지능 저하’ 권유받기도**

‘느린 학습자’ 아들을 둔 박미경(가명) 씨는 지난해 10월 지역 교육지원청을 찾았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아들이 중학교 입학할 앞두고 학습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느린 학습자란 경계선 지능을 가진 이들을 일컫는다. 지적장애로는 분류되지 않지만 평균 지능보다는 떨어지는 이들이다. 지적장애 등록 기준은 지능지수(IQ) 70 이하이다. 평균 IQ는 85 이상으로 본다. 그 경계 지대인 IQ 71에서 84 사이를 통상 느린 학습자로 본다. 느리지만 천천히 배워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박씨 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은 없었다. 교육청에선 아이 학습 지도를 멈추고 오히려 잠시 그대로 방치하는 게 어떻지 조심스레 권했다. 담당자는 박씨에게 “지능이 더 떨어지면 지적장애 등록이 가능한 IQ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적장애로 등록되면 여러 혜택이 있으니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적장애 아동으로 등록이 되면 교내 도움반(특수반) 수업이 가능해지고 장애인 배우처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였다. 박씨 아들의 지능지수는 70점대였다. 박씨는 “제가 선생님들에게 직접 도움을 구하고 해결해보겠다”

며 제안을 거절하고 나왔다. 그는 “지적장애가 아닌데 장애 등록을 하면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미안해서 아이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며 “현실적으로 느린 학습자를 위한 지원책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그런 제안을 했지만 거절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박씨가 아들이 느린 학습자라는 사실을 처음 안 건 2년 전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아들은 또래들과 대화할 때면 답답함을 느낀다고 했다. 학교에 가면 쓸쓸하다는 말도 했다. 우울증 검사를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박씨 아들처럼 느린 학습자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 가까이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지능지수 정규분포 곡선에 따라 추정해보면 느린 학습자는 전체 인구의 13.59%나 된다. 수치상으로 700만 명 이상이 느린 학습자일 수 있다는 얘기다. 지적장애 집단(2.3%)의 약 6배에 이르는 규모다.

느린 학습자들은 학습과 일상생활, 대인 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여러 지원이 있는 지적장애인 그룹에 들지도, 평균 집단에 끼지도 못하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박진주 등 대문종합사회복지관 팀장은 “느린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현재까지는 전무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려 해도 기본적으로 장애 진단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최근 두 달 동안 9명의 느린 학습자 가정을 심층 인터뷰했다. 곁으로 보기에 또래와 별반 다르지 않은 느린 학습자들은 실상 생애 전반에 있어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외부인’으로 살고 있었다.

» 시리즈 3편
백재연 이가현 기자 energy@kmb.co.kr

느린 학습자란 말 그대로 느리지만 천천히 배워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응력도 늦어 범죄 등에 노출이 쉽지만 지적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사회적 지원이 미비하다. 기사는 교육·범죄노출·사회적응 등 느린 학습자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보도하며, 조기 발견을 통한 학습지원과 사회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11월 한국일보(서현정 기자 / 11월 4일)

[현장] “B1이 아니라 ‘설’인데요?”... 엔터리 투성이 공공기관 점자시설

▶ QR코드를 통해 관련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라면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인 주민센터. 하지만 시각장애인에겐 예외이다. 2020년 국립국어원 점자 표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민센터 중 70%가 점자설치가 안됐거나, 부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실제 기사를 보도한 기자가 살펴본 주민센터만 하더라도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공공기관을 드나들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점자시설이 없는 곳이 수도룩하였고, 있어도 오류 투성이었다.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해 기사는 점자 설치 후 전문가의 감수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12월 경향신문(이흥근·정효진 기자 / 12월 2일)

그가 놀이기구 타기까지, 3,142일이 걸렸다 [이들에게 놀 권리를 허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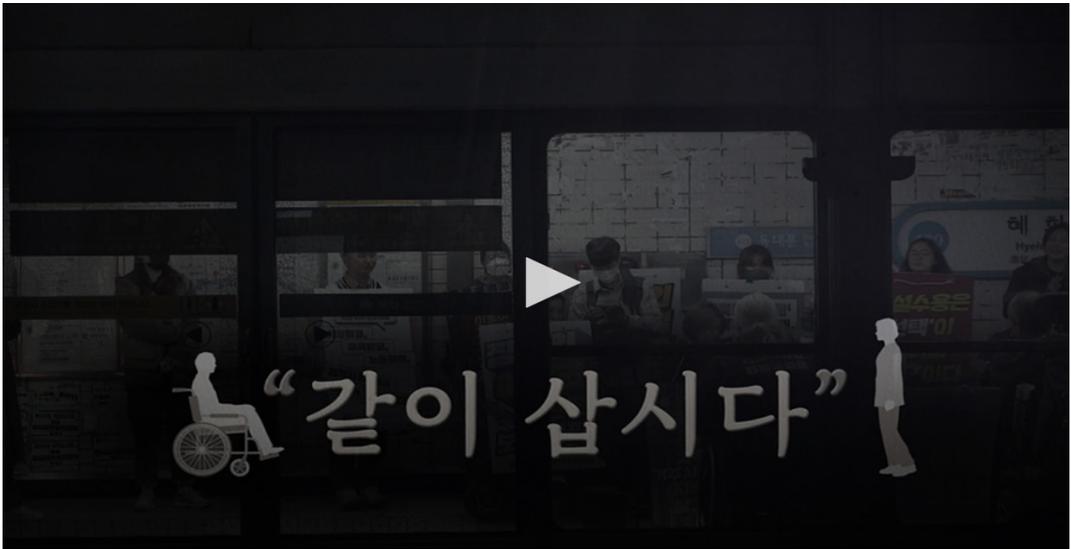
▶ QR코드를 통해 관련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버랜드는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한 중증의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했다. 시각장애인은 2015년 “부당한 차별”이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8년 6개월 만에 시각장애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기사는 장애인을 수동적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장애인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Ⅲ. 선정 방송

1차 KBS1TV(5월 16일)
시사기획 창 <같이 삼시다>



출처 : 시사기획 창 홈페이지

2021년 12월에 시작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지하철 시위가 1년 6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현재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고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지만, 하루 평균 7백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이라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전장연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고조되는 양상이다. 방송은 여론의 차가운 시선과 사회적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지하철 시위를 고수하는 이유를 파헤쳐 보고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외면한 어렵고도 시급한 질문들을 마주해보았다.

▶ 1차 '올해의 좋은 방송' 바로가기



2차 EBS1(8월 11일)
클래스e <반팔과 반바지>



출처 : EBS1 홈페이지

장애·장애우·장애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각각의 말에는 서로 다른 시선이 담겨 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인 ‘반팔’, ‘병어리 장갑’ 등의 단어에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담겨 있다. 방송은 미래 세대에게 어떤 언어를 물려 줘야 할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다.

▶ 2차 ‘올해의 좋은 방송’ 바로가기



IV. 올해의 좋은 크리에이터

김한용의 MOCAR(2월 27일)
〈택시 요금 비싸? 장애인 시위는 왜 맨날?...
조금 위험한 토론 (Feat. 권용주 교수)〉



출처 : 김한용의 MOCAR 유튜브 채널

전문 패널과의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 취약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영상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 '올해의 좋은 크리에이터 영상' 바로가기



2023년 장애인 비하 용어 모니터링 분석

서문원

한국뇌성마비정보센터 소장

I. 들어가는 말

다음은 “국민의 힘”이 2023년 11월 13일 최고위원회에서 교통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후 보디빌더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김나운 씨 등 5명을 인재영입위원으로 의결한 날 국민일보가 보도한 기사다. 국민일보는 이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기사를 쓰고 있다.

“與 인재영입위 보니... 장애인 보디빌더·호남 의사 합류”

국민의힘이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정훈 의원과 외부 인사 4명을 포함한 인재영입위원 5명의 인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호남대안연대 공동대표이자 내과 의사인 박은식씨, 교통사고로 한쪽 팔을 잃은 뒤 장애를 극복하고 보디빌더로 새로운 삶을 살고있는 김나운씨가 인재영입위 외부 인사로 합류했다.

출처 : 국민일보 2023. 11. 23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866732&code=61111511&cp=nv>

“장애 극복”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줄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2023년 8월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표명한 용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표현이 사용된 「장애인 복지법」 제56조¹⁾ 등을 개정하고, 해당 표현이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1)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 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발표했다. 지금까지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은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의 어려움을 이겨내어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동안 행정기관과 법령 등에서 사용되어 온 표현 및 용법을 따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용어를 사용한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장애를 질병이나 일시적 시련처럼 이겨 내거나 헤쳐 나갈 수 있는 대상으로 오인하게 하고,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오늘날 장애인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사회적·제도적 장벽에 있음에도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게 하거나, 자칫 장애인에게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사회의 책임을 방기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나아가, 해당 표현은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장애를 단지 비장애인과는 차이에 불과하다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장애인의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표현이 될 여지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 극복” 사용개선 의견 표명에 대해 종합일간지는 5곳, 경제지는 2곳 보도하였다. 다음은 일간지별 관련 기사 보도 내역이다.

〈표1〉 “장애 극복” 사용 개선 관련 기사 보도

기사내역 일간지	발행일자	기사제목
경향신문	2023.8.9.	인권위 “‘장애 극복’은 편견 담긴 표현…법조문 개정해야”
국민일보	2023.8.9.	인권위 “‘장애 극복’은 편견 조장 표현…극복 대상 아냐”
세계일보	2023.8.9.	인권위 “‘장애 극복’은 편견 조장하는 표현…극복 대상 아냐”
조선일보	2023.8.9.	‘장애를 극복’ 표현에... 인권위 “편견 부를 소지, 개선해야”
중앙일보	2023.8.9.	인권위 "'장애 극복'은 편견 조장하는 표현“
머니투데이	2023.8.9.	인권위 "'장애 극복' 표현, 쓰지 마라"...왜?
아시아경제	2023.8.9.	인권위 "'장애 극복' 표현, 장애인에 대한 편견 조장“

그러나 해당 기사를 보도한 지 불과 100일도 지나지 않아 국민일보는 “장애 극복”이란 말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 사용은 장애인을 우리 사회에서 차별적 존재로 인식해

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극복’ 표현, 장애인에 대한 편견 조장할 수 있어, -보건복지부장관, ○○광역시장애인에게 관련 공고문의 장애인 차별 표현에 대한 의견표명’ 보도자료, 2023. 8. 9.

배제하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언론은 그동안 '외눈박이', '절름발이' 등은 장애인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인들의 발언 등에 대해서 걸러내지 않고, 거의 그대로 보도해 왔다. 거기에 더하여 언론 스스로 이를 시정하지 않고 사용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차별 발언 사용은 사용자의 의식에 기반을 둔다. 언론은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장애인에 대해 편견을 조장하고 혐오 표현을 확대·재생산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언론의 장애인과 장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 사용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2023년에도 장애인 용어 사용에 대한 언론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은 2023년과 마찬가지로 신문과 방송으로 구분하여 신문은 전국 종합일간지, 지역 종합일간지, 3) 경제 일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방송은 지상파 방송사 3곳과 종합편성 방송사 4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4) 모니터링 범위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면에서 발행되거나 방송된 뉴스 기사로 한정하였으며, 기사의 검색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빅카인즈)을 기본으로 하고, 네이버 뉴스 검색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 5)

모니터링 대상 용어는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 가운데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로 “절름발이·정상인·병어리·장님·정신박약·불구자·귀머거리·장애자·정신지체·맹인”의 10개를 선정하였다. 2019년 폐지된 장애등급제⁶⁾도 함께 살펴보았으며, “뇌전증 장애” 뜻하는 “간질” 용어는 “정신지체”에 포함하여 다루었다. 모니터링은 2022년과 마찬가지로 의존적이고 부정적인 장애인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차별적 단어가 들어간 기사를 검색하였다. 특히 사회 변화에 따른 용어 변천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장애인의 개념을 혼동하게 하는 용어 중심으로 검색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수정이 필요한 기사는 전국 종합일간지와 경제일간지는 해당 기사

- 3) 지역 종합일간지 :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국제신문, 대구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영남일보, 울산매일,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 4) 지상파 방송사는 KBS, MBC, SBS, 종합편성 채널은 JTBC, 채널A, TV조선, MBN
- 5) 용어의 검색 결과가 실제 보도된 것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6) 1988년부터 사용되던 1~6급의 장애등급제는 2019년 7월 1일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4~6급 장애인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되었다.

작성한 기자에게, 사설·칼럼 기사는 편집국, 논설위원실 또는 고충 처리 담당자에게 전자메일을 발송하여 수정을 요청하였다. 지역 종합일간지는 용어 사용의 통계만 반영하고 수정 요청은 하지 않았다. 방송사의 경우 검색된 기사가 이미 방송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자, 보도국 또는 고충 처리 담당자에게 수정 요청 대신 주의 요청만 하였다. 수정·주의 요청 결과는 매월 통계를 작성,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II. 용어 분석

1. 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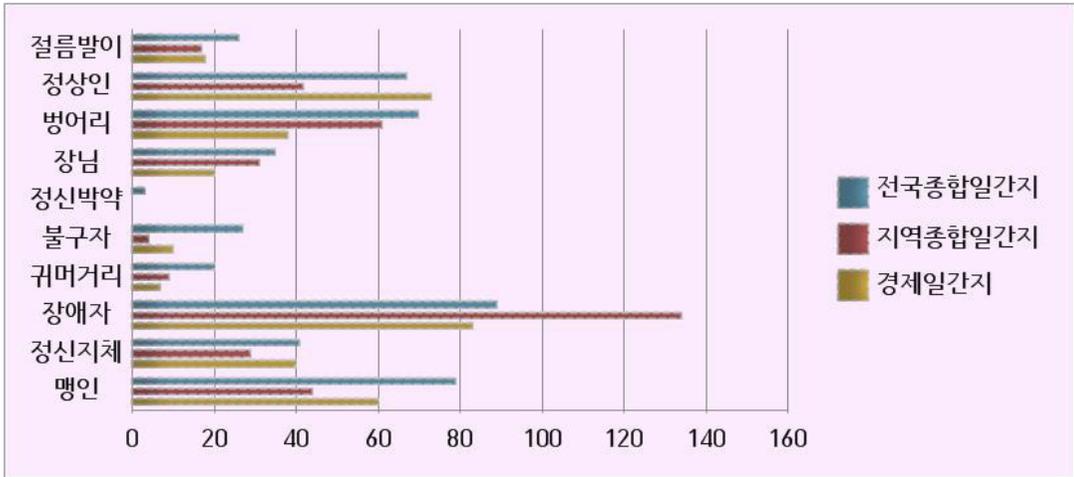
가. 장애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

2023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장애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 기사는 1,177건이 검색되었다. 이는 2022년 1,426건에서 17.56% 감소한 수치다. 일간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국 종합일간지가 556건에서 457건으로 감소하였으며, 경제일간지가 501건에서 349건으로 줄었다. 반면 지역 종합일간지는 369건에서 371건으로 2건 늘었다. 이를 일간지 유형과 용어별로 살펴보면 <표2>와 같다.

<표2> 장애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연도별, 언론사별)

(단위 : 건)

연도 용어	전국 종합일간지		지역 종합일간지		경제일간지		총계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절름발이	59	26	32	17	37	18	128	61
정상인	84	67	38	42	57	73	179	182
병어리	103	70	76	61	58	38	237	169
장님	41	35	40	31	28	20	109	86
정신박약	2	3	1	0	1	0	4	3
불구자	48	27	5	4	6	10	59	41
귀머거리	40	20	15	9	16	7	71	36
장애자	67	89	64	134	41	83	172	306
정신지체	40	41	34	29	23	40	97	110
맹인	72	79	64	44	234	60	370	183
총계	556	457	369	371	501	349	1,426	1,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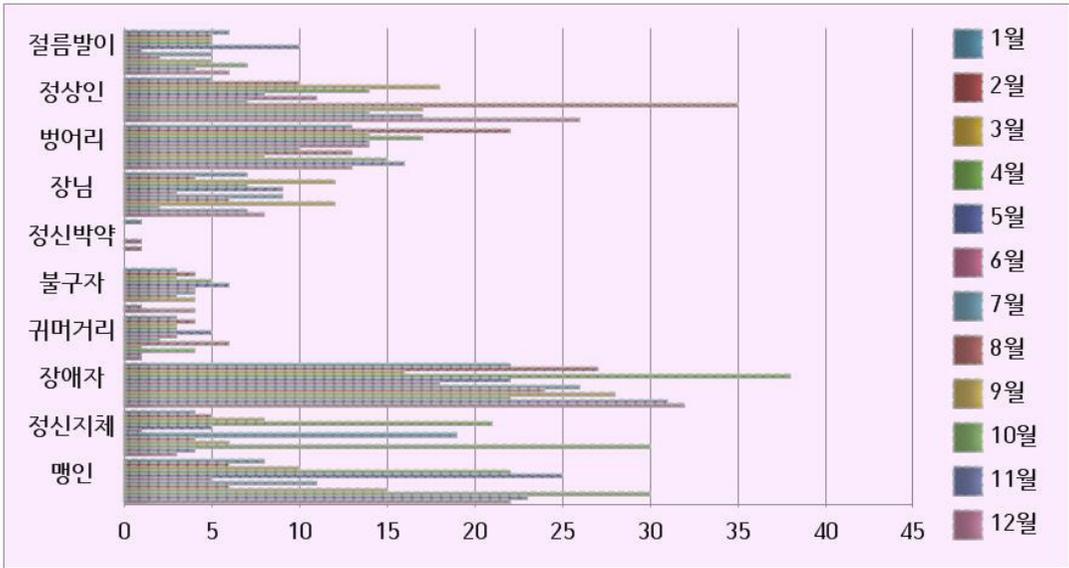
〈그림1〉 장애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2023)

“장애인의 날”이 들어 있는 4월의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 사용량이 114건으로 월별 사용량에서 1위를 점하고 있으며, 12월이 105건, 10월이 104건, 8월이 102건으로 100건을 초과한 달이 4달이나 되었다. 반면, 6월에는 62건 사용되었고, 1월에 65건, 3월에 82건 출현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날”이 들어있는 4월에 114건의 비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기사 작성 시 기자들의 세심한 주의와 기사 출고 과정의 엄격한 점검과정(데스킹)이 필요하다고 본다.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의 월평균 사용량은 98.1건으로 118.8개의 2022년보다 20.7건이 감소하였다.

〈표3〉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월별)

(단위 : 건)

용어	월별												총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절름발이	6	5	5	5	10	1	5	2	5	7	4	6	61
정상인	5	10	18	14	8	11	7	35	17	14	17	26	182
병어리	13	22	14	17	14	14	10	13	8	15	16	13	169
장님	7	4	12	7	9	3	9	6	12	2	7	8	86
정신박약	1	0	0	0	0	1	0	1	0	0	0	0	3
불구자	3	4	3	5	6	4	4	3	4	0	1	4	41
귀머거리	3	4	3	3	5	3	2	6	1	4	1	1	36
장애인	22	27	16	38	22	18	26	24	28	22	31	32	306
정신지체	4	5	8	21	5	1	19	4	6	30	4	3	110
맹인	8	6	10	22	25	5	11	6	15	30	23	22	183
총계	65	83	82	114	84	62	89	102	90	104	92	105	1,177



〈그림2〉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월별)

나. 비하 용어가 사용된 예

모니터링 결과 용어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을 지칭하는 “장애자”가 306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이어 시각장애인 용어인 “맹인”이 183건, 언어 장애인 용어인 “병어리”가 169건 사용되었다. 장애인에 대응하는 단어 “정상인”은 182건이나 사용되었다. 이는 우리 언론이 보고 있는 장애의 개념이 아직도 전통적인 “정상-비정상”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하겠다. 지적장애인을 뜻하는 “정신지체”가 110건 사용되고 있으며, “정신박약” 용어도 전국 종합일간지에서 3건이 출현해 기자들의 경각심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도 “장님” 용어가 86건, “절름발이”가 61건, “불구자” 용어는 41건 사용되었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을 뜻하는 “절름발이”와 “불구자”가 각각 61건, 41건 사용됐으며, 시각장애인을 지칭하는 “장님”이 86건, “맹인”은 183건이었다. 청각·언어장애는 “병어리”가 306건, “귀머거리”가 36건 사용되었고, 지적장애의 옛 용어인 “정신지체”가 110건 “정신박약”이 3건 출현하였다. 장애 유형별로만 본다면 청각·언어장애를 지칭하는 용어가 342건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뒤를 269건의 시각장애 영역이 뒤따르고 있다.

1) 장애자와 정상인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장애자” 용어가 306건으로 전체 사용량 1위를 차지하였고, 그에 대응되는 용어 “정상인”이 182건 사용되었다. 지난해에도 언급됐듯이 “정상인” 용어는 세상을 ‘정상-비정상’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비롯된 용어며, 기사 작성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용어다.

아래의 기사는 “인격장애자”라는 말을 사용한 기사다. “인격”은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뜻하는 말이다. 인격은 ‘사람의 됴됨이’와 유사한 말로도 사용된다. 어떻게 ‘장애 유무’의 잣대로 말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인격장애자”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대체 용어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The JoongAng

오미니언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스포츠 라이프 피플 | The JoongAng > ③ ④

중앙SUNDAY : 뉴스 | 러브에이징

인정받고 싶은 건 본능, 몰입 과하면 ‘관심 중독’ 빠져

중앙선데이 | 입력 2023.02.25 00:20 지면보기 ①

인정 욕구가 과도한 사람은 열등감이 심하거나 반대로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크다. 트위터에 집착하고 습관성 거짓말로 타인의 이목을 병적으로 갈구하는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이다. 히틀러는 최고 권력자가 되기 전까지 수많은 좌절을 경험한 열등감 때문에 병적인 인정 욕구를 보이다 자신과 공동체를 파멸시킨 사람이다. 사회적으로 인정 욕구가 과도해지면 공동체는 병들기 쉽다.

〈그림3〉 "인격장애자"를 기사에서 사용한 경우 (중앙일보, 2023.02.25)

2) 맹인과 장님

아래 기사는 “맹인 부모” 를 사용하고 있다. 자녀의 본모습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키우려는 부모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맹인 부모” 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자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부모” 라고 표현해도 전달하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 굳이 “맹인”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종교계 일간지에서 장애인 비하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기자들의 전반적인 경각심이 필요하다.



<그림4> 위 기사에서 “맹인”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도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국민일보 2023.07.19.)

3) 병어리

“음성 언어를 소리 낼 수 없는 사람을 낫잡아 이르는 말”인 “병어리” 용어는 직접 장애인에 대해 사용되기보다는 주로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체로 용어에 대한 고민 없이 “꿀 먹은 병어리”, “병어리 냉가슴”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속담이나 경구 사용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에서는 “꿀 먹은 병어리” 대신 “말문이 막힌”을, “병어리 냉가슴” 대신에 “가슴앓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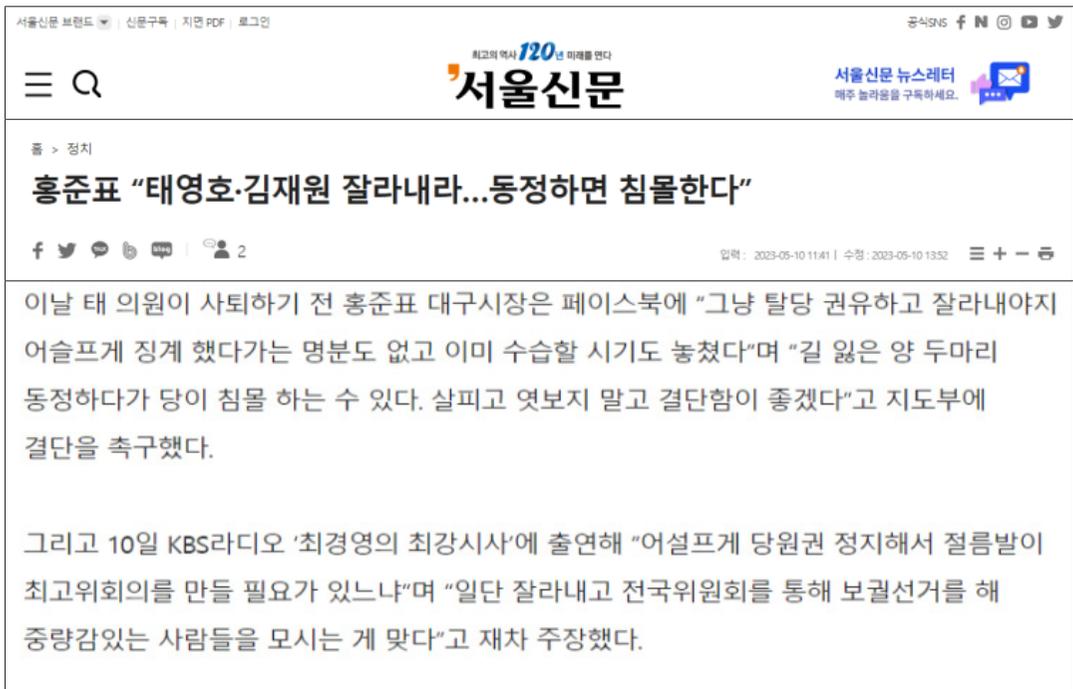


〈그림5〉 기사제목으로 “병어리 냉가슴”을 사용한 기사.
 “가슴앓이”로 바꾸어도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서울경제 2023.07.30.)

4) 절름발이와 불구자

“절름발이”는 ‘한쪽 다리가 짧거나 다치거나 하여 걸거나 뛸 때 몸이 한쪽으로 자꾸 거볍게 기울똥거리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61건, “몸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 “불구자”가 41건으로 2022년의 176건과 71건에 비해 각각 대폭 감소하였다. “절름발이” 용어 사용에 대해 사용하지 말 것을 꾸준히 지적해온 장애인 단체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절름발이”와 “불구(자)”용어는 주로 정치인들이 주로 상대방이나 어떤 현상을 무시 또는 비판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장애가 곧 ‘불균형’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은 주요 정치 인들이 차별적 표현을 사용할 때 거르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닌 단순 중계식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언론의 신뢰성을 스스로 저하시키는 것으로 지양해야 할 일이다. 아래의 신문 기사는 정치인 발언을 중계식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



〈그림6〉 인터뷰 기사에서 “절름발이”를 사용한 경우(서울신문, 2023.05.10)

5) 앓은뱅이

‘하반신 장애인 중에서 앓기는 하여도 서거나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 “앓은뱅이” 용어도 심심치 않게 출현하고 있다. 이 용어는 “앓은뱅이 밀”, “앓은뱅이 책상” 등 주로 ‘키나 높이가 작거나 낮은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앓은뱅이 밀”은 2021년 4월 ‘앓은뱅이’라는 표현에 상처받는 이들이 있다는 한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농업진흥청에서는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대체 용어를 찾는 중이다⁷⁾. 한겨레는 “앓은키밀”(우리밀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한겨레21, 2023.12.13.)을 사용하고 있고, 모니터 대상은 아니지만 농민신문은 “키 작은 우리밀”([이윤화의 맛Pick 핫Pick] 떡거리 잡화점, 시대가 열린다, 농민신문, 2023. 11. 18)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7) 이지혜, “장애인 비하 논란…‘앓은뱅이 밀’ 새 이름 찾는다”, 한겨레, 2021.04.20., 10면.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91776.html

표지이미지 1492호

우리밀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우리밀 칼국수, 우리밀 빵 만드는 이들이 말하는 '우리밀이 좋은 이유'

김규원 기자 구독

등록 2023-12-07 23:11 수정 2023-12-13 09:58

30년 넘게 우리밀을 사용하면서 어려움도 많았다. 가장 큰 문제는 앓은키밀(옛 앓은뱅이밀) 등 초기 우리밀이 찰기가 적어 국수가 쉽게 끊어진다는 점이었다. 이것을 개선하려고 감자·고구마 전분, 포도즙, 함초가루를 넣기도 했다. 백강밀, 금강밀 등 찰기가 많은 강력분(굳은밀가루, 빵용) 품종이 나오면서 이 문제가 개선됐다. 특히 2023년부터 사용한 황금알 품종은 글루텐 함량이 10%로 높다. 채 대표는 “원래 황금알은 빵용이지만 칼국수 만들기도 좋고 수입밀과도 경쟁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림7〉 기사에서 “앓은뱅이밀”을 “앓은키밀”로 대체 사용한 경우
(한겨레21, 2023.12.13)

6) 장애를 앓다

“장애를 앓다”라는 표현은 비장애인에게 장애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앓다’라는 단어의 뜻을 “병에 걸려 고통을 겪다”라고 설명한다. 이 설명을 충실히 따른다면, “장애인”은 병에 걸려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니 치료를 받아야 할 존재가 된다. 하지만 “장애”는 질병의 후유증상이다. 따라서 “장애를 앓다”라는 표현은 사람들에게 장애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아래 기사에 쓰인 “시각장애를 앓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바른 표현인 “시각장애를 갖고 있다”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림8〉 “장애를 앓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파이낸셜뉴스, 2023.06.16)

다. 수정 요청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 모니터링을 하면서 용어 사용에 문제가 있는 기사는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혹은 신문사 편집국,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수정을 요청하는 글을 발송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⁸⁾

수정 요청은 모니터링 기사 중에서 장애인의 의존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는 차별적 단어와 속담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주제의 기사 중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가 포함된 관용구의 사용도 포함하고 있다. 2007년과 2019년 각각 폐지된 정신지체 용어와 장애 등급을 사용하는 것과 장애인의 개념을 혼동하게 하는 용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장애든 장애는 질환을 앓고 난 결과, 즉 일종의 후유증이므로 “뇌성마비 환자”나 “자폐를 앓고 있다”와 같은 말은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병어리 냉기슴”, “장님 코끼리 만지기” 등의 속담은 비록 옛날부터 전승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날에는

8) 수정 요청 대상은 10개 전국 종합일간지와 8개 경제일간지로 한정하였다.

언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⁹⁾ 따라서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용어를 걸러내고, 올바른 표현을 알리는 것은 기자나 독자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전환에 있는 좋은 방법인 것이다.

모니터링은 매월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가 사용된 2~30개의 기사를 정리한 후 수정 요청문을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또는 편집국으로 발송하였다. 2021년까지는 수정 결과를 본부로 알려 줄 것을 기자에게 요청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수정 요청 후 본부에서 해당 기사에 대한 수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매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313건의 기사에 대해 수정 요청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언론사별 수정 요청 및 수정 완료 (연도별)

(단위 : 건, %)

연도	매체	수정 요청		수정완료		수정미완료	
		중앙종합 일간지	경제 일간지	중앙종합 일간지	경제 일간지	중앙종합 일간지	경제 일간지
2022	매체	183	83	9	2	174	81
		266(100.0)		11(3.38)		255(96.62)	
	계	266(100.0)		11(3.38)		255(96.62)	
2023	매체	207	106	11	6	196	100
		313(100.0)		17(5.43)		296(94.57)	
	계	313(100.0)		17(5.43)		296(94.57)	

위 모니터링 결과에서 보듯이 2023년에는 313건의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를 수정 요청해서 17건, 5.43%의 기사가 수정되었다 2022년 266건의 기사를 수정 요청하여 11건, 3.38%의 기사가 수정된 것에 비해 6건의 기사, 2.09%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를 장애영역별로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9) 서문원, 장애인 속담사전, 북트리, 2018.

〈표 5〉 용어별 수정 요청 및 수정 완료 (연도별)

(단위 : 건, %)

용어	2021		2022		2023	
	수정요청	수정완료	수정요청	수정완료	수정요청	수정완료
환자(장애를 앓다, 뇌성마비 환자)	61	2	68	1	75	6
정신지체(정신박약, 간질)	26	0	35	1	57	2
귀머거리, 병어리(꿀 먹은 병어리, 병어리 냉가슴)	34	0	31	0	39	3
장애자(장애우, 앓은뱅이, 절름발이, 불구)	116	3	87	3	106	6
장님(맹인, 장님 코끼리 만지기)	10	1	16	1	6	0
장애등급	68	2	29	5	26	0
계	315	8(2.53)	266	11(4.13)	313	17(5.43)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 중에서 수정 요청된 용어를 살펴보면 “장애자”가 2022년보다 19건 증가한 106건으로 수위를 접하였고, 그 뒤를 75건의 “환자”와 57건의 “정신지체” 용어가 뒤따르고 있다. “시각장애” 관련 용어와 “장애등급”에 대해서는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아직도 기자들 대부분이 “장애자” 관련 용어 사용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장애를 “환자”로 보는 시각 또한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정신지체” 용어 역시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 용어 사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기사 출고 전 사용된 용어에 대해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애별 수정 내용을 보면 “환자”와 “장애자”가 각각 6건 수정되었고, 청각, 언어장애가 3건, 지적장애가 2건 수정되었다. 장애등급은 26건의 기사를 수정 요청하였으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자에 따라서는 수정요청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전에 등재된 단어 틀린 표현이 아니고, 취재원의 워딩 그대로 실은 점”을 이유로 수정 불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2. 방송사

가. 장애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

지상파 3개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4개 방송사의 모니터링 결과는 <표6>과 같다.

<표 6> 장애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연도별, 방송사별)

(단위 : 건)

연도	방송사	채널A		JTBC		KBS		MBC		MBN		SBS		TV조선		계	
		주	요	주	요	주	요	주	요	주	요	주	요	주	요	주	요
		의	청	의	청	의	청	의	청	의	청	의	청	의	청	의	청
2022	환자(장애를 앓다, 뇌성 마비 환자)	1	0	3	1	8	3	3	1	1	0	4	3	0	0	20	8
	정신지체(정신박약)	1	0	0	0	0	0	0	0	0	0	1	0	0	0	2	0
	귀머거리, 병어리(꿀 먹은 병어리, 병어리 냉기슴)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장애자(장애우, 앓은뱅이, 절름발이, 불구자)	1	0	0	0	1	1	0	0	0	0	0	0	0	0	2	1
	장님(맹인, 장님 코끼리 만지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장애등급	0	0	0	0	5	2	1	0	0	0	3	0	0	0	9	2
	계	3	0	3	1	14	6	4	1	1	0	8	3	0	0	33	11
2023	환자(장애를 앓다, 뇌성 마비 환자)	1	0	5	0	1	0	4	2	3	1	4	2	2	0	20	5
	정신지체(정신박약)	0	0	0	0	2	0	0	0	0	0	0	0	0	0	2	0
	귀머거리, 병어리(꿀 먹은 병어리, 병어리 냉기슴)	0	0	0	0	0	0	0	0	0	0	1	0	0	0	1	0
	장애자(장애우, 앓은뱅이, 절름발이, 불구자)	1	0	0	0	2	1	2	1	0	0	0	0	0	0	5	2
	장님(맹인, 장님 코끼리 만지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장애등급	2	0	1	0	3	1	0	0	1	0	3	0	2	0	12	1
	계	4	0	6	0	8	2	6	3	4	1	8	2	4	0	40	8

〈표 7〉 방송사별 주의 요청 및 요청 확인 건수

(단위 : 건, %)

2023	매 체	지상파 3사		종합편성 채널 4사	
		수정 요청	요청 확인	수정 요청	요청 확인
	계	22	7(31.8)	18	1(5.6)

방송사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는 모두 40건이 사용되었다. 지상파 3개 방송사가 22건, 종합편성채널 4개 방송사가 18건이었다. 이를 용어별로 살펴보면 “장애를 앓다” 관련 용어가 20건, “장애자”와 “정신지체” 관련 용어가 각각 5건, 2건이었다. 시각장애 영역의 “장님” 관련 용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장애등급” 요청은 12건이었다. 장애는 사고나 질병으로 생긴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의미한다. 완쾌될 수 있다면 장애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장애를 앓다”라는 표현을 방송에서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장애 인식에 대한 방송 기자들의 의식 전환이 매우 필요함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나. 잘못된 표현과 주의 요청

방송사 뉴스 모니터링을 하면서 용어 사용에 문제가 있는 기사는 신문사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혹은 해당 언론사 보도국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발송하였다.

1) 장애를 앓다

“장애”는 질병의 후유증상이다. 따라서 “장애를 앓다”라는 표현은 일반인들에게 장애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아래 기사에 쓰인 “장애를 앓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바른 표현인 “장애를 갖고 있다”로 바꾸어야 한다. 이미 방송된 내용이라 수정 요청하지 않고 장애 관련 용어 사용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림9〉 기사에서 "장애"를 "병"으로 인식하게끔 사용한 경우 (TV조선, 2023.07.01)

2) 장애자와 불구자 등

아래 기사에 쓰인 “불구자”라는 용어는 ‘몸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 적절한 표현이 아니며, “장애인”으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본부는 기사에 쓰인 “불구자”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리고, 앞으로 장애 관련 용어 사용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담당 기자에게 요청하였다. 담당 기자는 해당 표현에 대해 기사 작성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차후 주의하겠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그림10〉 기사에서 "불구자" 표현을 사용한 경우 (KBS, 2023.12.28)

방송사 뉴스는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이미 방송이 되거나 끝난 상태라서 사후 수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신문 기사도 사후 수정이기는 하지만 방송사 보다는 어느 정도 수정이 자유롭다. 이 때문에 방송사에 대해서는 사후 수정 요청보다 사전 주의 요청이 적당하다고 하겠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2018년 이전에는 언론 모니터 과정에서 장애 관련 차별 표현에 대해 수정 요청만 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기자들이 현장에서 기사 작성 시 참고하도록 대중매체에서 자주 사용하는 장애 관련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해 법적용어(올바른 용어) 및 대체표현을 정리한 “장애 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23년에 신문사 기자 313명과 방송사 기자 40명에게 배포되었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의 언론 모니터링 활동은 언론 보도 과정에서 어떤 용어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단어가 되는가 하는 것을 기자와 소통을 통하여 알려 주고, 이를 통해 비하 용어의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애인과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기자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간혹 “수정 요청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회에서 사용되는 말인데 어떻게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느냐”와 같이 수정 요청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소통의 과정은 바람직한 장애인 관련 용어 사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장애인 비하 용어에 대한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의 언론 모니터는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Ⅲ. 나가며

2023년도 언론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는 1,177건이었다. 이는 2022년 1,426건 보다 17.56% 감소한 것으로, 장애인과 시민 단체의 꾸준한 감시와 기자들의 인식이 개선된 결과라 하겠다.

최근 장애인 비하 용어를 둘러싼 여러 논의를 무질서와 딜레마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¹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덕성여대 김진우 교수는 2023년 발표한 “장애인 비하 용어를 둘러싼 무질서와 딜레마”란 논문에서 그동안 “장애인 비하 용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아울러 대안용어를 사용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선정된 용어의 기관 간 불일치, 선정한 비하 용어와 실제 법령과 일상생활 사용 간의 결절 등 무질서한 모습이 기관 내에서 그리고 기관 간에도 발견되었고, 아울러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는 용어에 대한 접근·이해 관점의 부재, 비하 용어와 특정 상황과 맥락을 내포하는 비하표현이 어떻게 차별행위로 이어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비하 용어를 선정하더라도 사회적 대응 및 법적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운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하 용어를 그 강도에 따라 사용금지, 사용자제, 대안용어 사용권고 등 다차원적으로 선정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며 표현의 자유와 무분별한 표현 간에 대한 균형 있는 사법적 판단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과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판단준거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주장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장애 비하 표현에 대해 수정 요청을 할 때 나타난 “사전에 등재된 단어로 틀린 표현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다” 등의 언론사와 기자들 반응을 볼 때 일리가 있다고 본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1997년부터 대중매체의 장애 비하 용어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려 노력해왔다. 이제 그 동안 쌓아온 역량을 발휘하여 비하 용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기관들과 다양한 전문가 간 협력을 통해 장애 비하 용어를 둘러싼 여러 혼란을 잠재우고, 우리 사회가 대안용어 사용 실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과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에 한 발 더 다가가는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10) 김진우, 장애인 비하 용어를 둘러싼 무질서와 딜레마,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59, pp. 123~151, 2023.



기획모니터 1

1. 고령장애인과 언론 보도 :

2018~2023년 뉴스 <빅카인즈> 분석

송경재(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2. 2023 고령 장애인 관련 보도내용 분석
기획모니터

신재민(넷마블문화재단 과장)

고령장애인과 언론 보도 : 2018~2023년 뉴스 〈빅카인즈〉 분석

송경재

상지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I. 고령장애인

장애인은 법적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지칭한다. 장애의 유형은 법적·사회적으로 다양하게 분류되지만, 분명한 것은 장애를 자의에 의해서 가지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장애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사건·사고 등의 후유증으로 일상 및 사회생활에 제약받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관념에서는 장애인이 소수인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장애의 기준이 정립된 현대사회에서 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수가 정해지고 있다. 이미 UN에서는 전 세계 인구의 10%를 장애인으로 보고 있을만큼 장애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선천적 장애와 함께 사고나 질병에 의한 후천적 장애까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북유럽지역 국가에서는 총인구의 20%를 장애인으로 보기도 하는데, 북유럽에서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복지제도와 연관되어 있다. 복지제도가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어 다양한 장애 유형과 특히 성인병으로 인한 시력·청력·보행장애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장애로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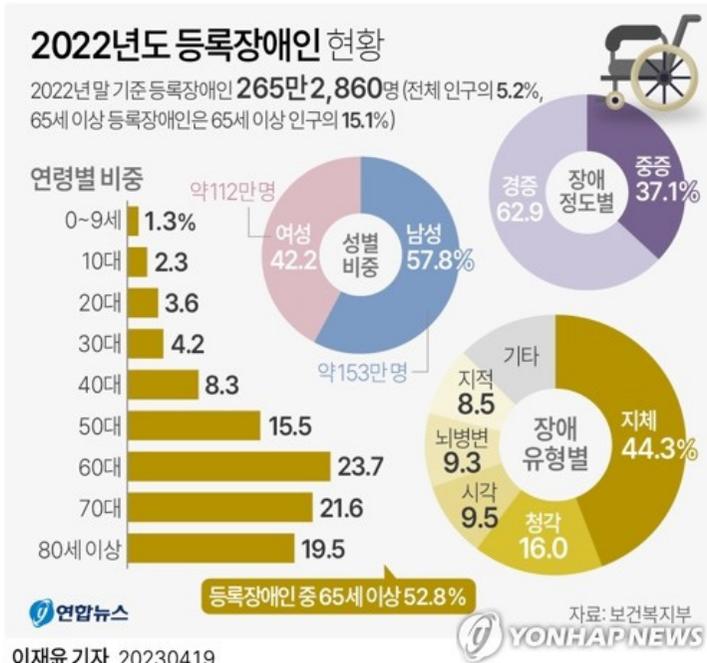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보자면 약간 다르다. 한국은 장애인 진단 기준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역시 복지제도의 예산 문제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장애인 숫자는 전 세계 평균 추정치인 10%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예산과 보수적 복지 체계로 장애인 진단 기준을 까다롭게 한 한국 기준으로도 2022년

12월 31일 기준 총인구의 5.2%인 265만 3,000명이 장애인이다, 세부적인 비율로 본다면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8만 4,000명(37.1%),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만 9,000명(62.9%)이다. 성별로도 남성 장애인은 153만 5,000명(57.8%), 여성 장애인은 111만 8,000명(42.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2023; 이재운 2023).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고령장애인 비중이며, 전체 장애인 중에서 고령장애인 비율은 52.8%(140만 2,000명)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그림 1 > 2022년 등록장애인 현황



이재운 기자 20230419

2023)에서 재인용

실제로 전체 장애 인구 중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성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10~20%에 불과한데, 나머지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기도 한다. 또 의료가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장기 이식(신장, 간 등) 수술을 받으면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한국에서 고령장애인의 수는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고령장애인에게 주목하는 것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와도 무관치 않다. 한국은

이미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2018년 한국은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했는데, 현재의 추세로 본다면 7년 후인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인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긴 지 약 7년 만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의료와 건강에 대한 노력이 더해지면서 저출산과 결합한 초고령사회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2023년 4월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노령) 등록장애인이 65세 이상 인구의 15.1%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이미 지방소멸이 진행 중인 지방 농어촌지역에서는 청년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인구 불균형이 진행 중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3년 2월 한국의 소멸위험 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의 51%가 넘는 118곳에 달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초고령화에 이은 후천적 고령장애인의 증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번 모니터 보고서에서는 초고령사회의 진입과 고령장애인의 증가에 따른 한국의 현실을 인식하고, 특히 고령장애인이 국내 언론에서 어떻게 기사화되고 국민에게 알려졌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지방소멸과 초고령사회에 대한 위험신호가 울리는 가운데 사각지대인 고령장애인에 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미래 한국의 고령장애인의 인식 개선과 바람직한 정책대안 마련에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고서의 구성은 크게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I장에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에서 고령장애인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보고서의 목적을 제시하였다. II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인 <빅카인즈(BIG KINDS)>에서 조사할 언론사와 기간 등을 제시하였다. III장은 한국이 고령사회로 진입한 2018년부터 최근 6년 동안의 고령장애인에 관한 언론 보도 내용을 분석한다. 특히 2023년 1월 1일~11월 30일까지의 언론 동향을 특화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언론사에서 나타난 고령장애인 관련 뉴스의 특징과 현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IV장은 모니터의 분석 내용을 요약하고 고령장애인에 대한 한국 언론사 기사의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빅카인즈> 개요와 분석 방법론

2023년 고령장애인 언론사 보도 모니터링은 국내 최대 뉴스 빅데이터 플랫폼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 KINDS)>를 이용했다. 알려져 있다시피 <빅카인즈>는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제휴된 전국 일간지·전국 경제지·지역 일간지·방송사·전문지 등의 뉴스를 제공하며, 한발 더 나아가 시각화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언론사의 특정 주제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모니터의 엄밀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에서는 언론사 뉴스 데이터베이스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했다. 분석 대상 언론은 <빅카인즈> 제공하는 전체 언론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최대한 많은 언론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전체 조사 대상 언론사는 53개로 국내의 신문과 방송을 모두 망라하는 언론사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다.

< 표 1 > <빅카인즈> 참여 언론사(2023년 11월 30일 기준)

	구분	언론사	언론사
1	전국일간지	11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2	경제일간지	8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3	지역일간지	28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국제신문, 대구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영남일보, 울산매일,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4	방송사	4	KBS, MBC, OBS, SBS, YTN
5	전문지	2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여기서 모니터 대상 언론사는 검색이 가능한 전국 일간지·경제지·지역 일간지·방송사·전문지 등 5개 분야를 모두 포함했다. 추출한 언론사 뉴스를 대상으로 <빅카인즈>가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를 활용하였다. 특히 전문지의 경우 IT 분야 전문지이지만 최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장애인 관련 스마트 기기가 보급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전문지 2개도 포함했다.

다음으로 고려할 것은 모니터 분석 기간이다. 모니터 분석 시작은 한국이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한 2018년부터 확정했다. 그리고 고령장애인 언론사 보도 모니터 분석 기간은 최근 6년 동안으로 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했다. 그리고 2023년은 별도의 세부 분석을 통해서 과거와의 차이와 변화상을 세부 분석할 것이다.

세부적인 분석 방법은 3가지 <빅카인즈>의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세부 키워드를 설정하여 키워드 ① 트렌드 분석, ② 관계도 분석, ③ 연관어 키워드 분석을 한다(한국언론재단 2022, 10-70). 100개의 언론사 기사를 대표 표본 추출하여 그 관계도를 시각화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 세부적인 방법론에 대한 해설은 다음과 같다.

< 표 2 > 분석 방법론 요약(한국언론재단 2022, 69-70)

구분	세부 분석	내용
1	키워드 트렌드 분석	- 키워드와 연관된 기사의 수를 시계열적으로 보여줌
2	관계도 분석	- 검색된 뉴스 중에서 정확도 상위 100건의 뉴스를 추출해 인물, 기관, 장소, 키워드 사이의 연결 관계를 네트워크 형태로 보여줌
3	연관어 키워드 분석	- 추출된 뉴스 검색 건수에 기반한 키워드의 연관어를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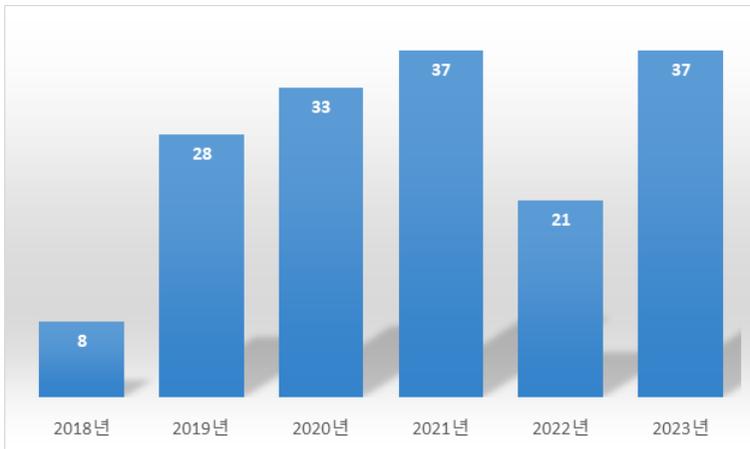
언론 <빅카인즈> 분석의 키워드는 ‘고령 장애인’, ‘노령 장애인’, ‘노인성 장애인’과 관련한 검색어 주제의 언론 보도를 분석할 것이다. 분석 기간 검색된 키워드를 포함한 언론 기사는 총 164건이었다.

Ⅲ. 언론 모니터 분석

1. 키워드 트렌드 분석

세부적으로 ‘고령 장애인’, ‘노령 장애인’ 그리고 ‘노인성 장애인’ 중 한 용어라도 들어간 언론 기사를 산출했다. 분석 결과 첫째는 2018년~2023년 연도별 기사 건수 분석이다. 연도별로는 2023년과 2021년이 가장 많은 37건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20년이 33건, 2019년 28건, 2022년 21건의 순이었다. 2018년에는 8건이었다. 순차적인 언론 기사 건수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키워드 연도별 언론 기사 건수



둘째, 분석 기간 10건 이상 관련 키워드의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는 강원도민일보(10건), 경기일보(10건), 경인일보(12건), 중도일보(10건), 중부일보(22건)이었다. 주로 전국 일간지보다 지역 일간지가 고령장애인 관련 키워드 기사를 많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22건을 작성한 중부일보는 주로 고령 장애인 쉼터 조성 관련 기사, 관련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각종 지역 장애인 행사 등 언론 기사가 많았다.

중앙일간지 중에서는 국민일보(8건), 서울신문(8건)이었으며 그 뒤는 경향신문(6건)이었다. 경제일간지는 헤럴드경제(5건)가 가장 많았다. 특기할 만한 것은 방송사 보도가 <빅카인즈>에서는 OBS 1건, YTN 1건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는 <빅카인즈>에 제공한 언론 기사만을 한정했기 때문이기에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 표 3 〉 고령장애인 키워드 기사 작성 언론사(상위 3위)

구분	언론사(건수)	구분	언론사(건수)
중앙일간지	국민일보(8건) 서울신문(8건) 경향신문(6건)	경제일간지	헤럴드경제(5건) 서울경제 (4건) 아시아경제 (4건)
지역일간지	중부일보(22건) 경인일보(12건) 중도일보(10건)	방송사	OBS(1건) YTN(1건)
전문지	전자신문(3건) 디지털타임스(1건)		

2. 연관어 분석

다음으로 분석한 것은 연관어 분석 결과인 워드 클라우드이다. 연관어 분석은 검색 결과 중 분석 뉴스와 연관성(가중치, 키워드 빈도수)이 높은 키워드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분석에서는 가중치를 설정하지 않고, 기사 건수를 중심으로 워드 클라우드로 〈그림 3〉과 같이 도식화했다. 화면에서는 글자의 크기가 클수록 다른 뉴스와의 연관성이 높음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 그림 3 〉 키워드 관련 워드 클라우드(2018~2023년 11월 30일)



상위 기사에서 언급된 횟수는 활동지원(247)·경기도(245)·조례안(129), 의왕시(91)·시의회(62) 등이 많이 언론에서 언급되었다. 그리고 상위 10위권 내에서도 주로 지역과 시의회, 대표발의 등의 내용이 많아 지역의 이름, 지방정부에서의 제도화가 관련 언론 기사로 많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4 > 키워드 관련 연관어(2018~2023년 11월 30일)

순위	연관어	횟수	순위	연관어	횟수
1	활동지원	247	2	경기도	245
3	조례안	129	4	의왕시	91
5	시의회	62	6	위원장	58
7	대표발의	42	8	더불어민주당	42
9	사각지대	42	10	일상생활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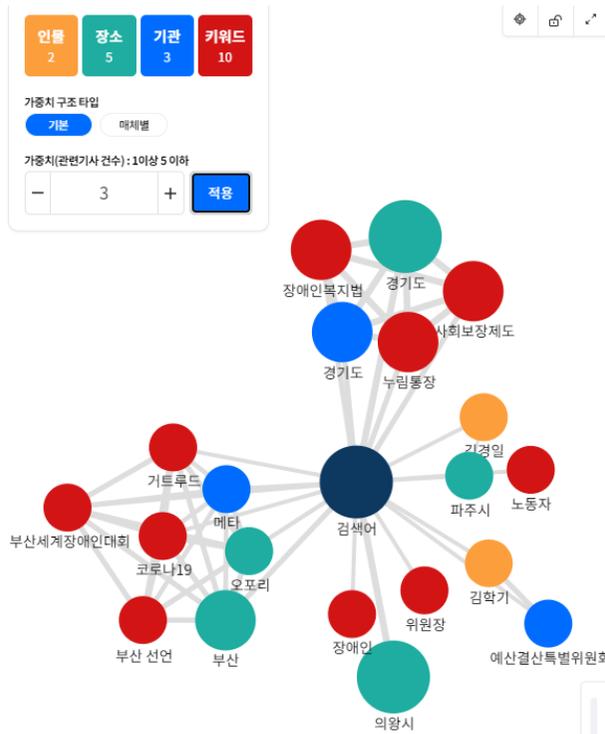
한편, 2023년만을 한정하여 37건의 기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경기도(55)·조례안(34)·파주시(27)·의정부(14)·개소식(12)· 부산시(11) 등이 많이 언급되었다. 전반적으로 지방 정부명이 많았으며 세부 기사 내용 역시 지역 고령장애인 관련 쉼터와 조례제정, 시설 정비와 관련된 기사가 작성되었다.

< 그림 4 > 키워드 관련 워드 클라우드(2023년 1월~11월)



2023년만을 한정된 관계도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6>과 같다. <빅카인즈>에 데이터베이스화된 언론 기사를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주요한 행사나 관련 제도, 지방정부의 언급 횟수가 많았다. 고령장애인 관련 사업이 진행된 장소와 기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장애인 관련한 지역의 행사, 제도 등과 관련된 언론 기사가 많았다. 크게 보면, 경기도 지역과 부산시 지역에서 관련 뉴스가 많았는데, 역시 지역 일간지에서 고령장애인 관련 언론 기사가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림 6> 2023년 고령장애인 관계도 분석



IV. 결론 : 언론의 고령장애인 관심도 낮아

이번 모니터 분석에서 확인된 고령장애인에 관한 언론의 기사는 양적·질적으로 모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동일 기간의 '장애인'을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는 336,253건이 도출되었으나, '고령장애인을 키워드로 도출한 결과는 164건에 불과하다. 이는 장애인 전체 키워드 기사 중에서 0.048%에 불과한 수치이다. 그만큼 고령장애인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만을 한정하여도 고령장애인 관련 기사는 37건에 불과하다. 37건인 관계로 세부적인 언론 기사 내용을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 표 5 > 2023년 고령장애인 관련 기사 내용

일 자	언론사	제 목
11. 23.	국민일보	장애인식개선 앞장 남양주시 '장애공감도시' 도약
11. 23.	중부일보	주광덕 남양주시장, 고령장애인쉼터 작품전시회 참석 장애공감도시 인증패도 수여
11. 21.	전남일보	강성휘 전남도사회서비스원장, 도민체감 돌봄서비스 복지정책 펼치겠다
11. 19.	광주일보	강성휘 전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사회적 약자 돌봄 서비스 전문성 강화 힘써”
11. 15.	중도일보	의왕시, 화합 '장애인 노래사랑대회'
11. 15.	중부일보	“어울려 화합하고 즐기는 시간” 제11회 의왕시 장애인 노래사랑대회 성료
11. 15.	서울경제	'제11회 의왕시장장애인노래사랑대회' 성료
11. 08.	제민일보	장애인복지기금 5억6600만원 투입
10. 24.	중부일보	파주시, '고령장애인 쉼터' 개소
10. 24.	헤럴드경제	김경일 파주시장 “장애에 따른 불편과 차별 해소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다”
09. 20.	중부일보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장배 고령장애인연합 술런대회 개최
09. 20.	중부일보	의왕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마무리 추경 세입안 7천73억 편성
09. 05.	경기일보	의왕시의회, 임시회 개최...추경 등 민생안건 심의 의결
09. 05.	중부일보	의왕시의회, 18일까지 제296회 임시회 실시 추경 등 민생 안건 심의 의결
08. 31.	파이낸셜뉴스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비율 전국서 가장 높아
08. 21.	전남일보	전남도사회서비스원, 전남 고독사 생활실태 노인문제 연구 보고회
08. 18.	부산일보	부산시, 폭염과 태풍 이겨내고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 성료
08. 18.	파이낸셜뉴스	세계 장애인 인권 권리 증진 '부산 선언' 뜻 모았다

일 자	언론사	제 목
08. 18.	아시아경제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 성료
08. 06.	한겨레	[뉴노멀-미래] 노인의 미래
07. 26.	중도일보	파주시, 제11대 일일명예시장에 청년 김성호씨 위촉
07. 05.	중도일보	의정부 ‘고령장애인 쉼터’ 개소
07. 04.	중부일보	의정부시, ‘고령장애인 쉼터 개소식’ 열어
06. 26.	중부일보	과천시, 고령장애인쉼터 개소
06. 06.	중부일보	군포시의회 신금자의원,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추진
05. 22.	경인일보	경기복지재단 ‘고령장애인 돌봄 확대’ 강조 고령화율 3배 높아
05. 16.	중부일보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화성시지회, 팔탄작은도서관 업무협약 체결
05. 08.	충청투데이	[가정의 달 기획] 저출산 고령화로 늘어나는 독거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마련 절실
04. 06.	경인일보	경기도지체장애인협, ‘중앙회장 도협회 산하 31개 시 군지회장 간담회’ 개최
03. 02.	대전일보	계룡시, 만 65세 이상 독거장애인 전수조사 나서
03. 02.	충청일보	장애인이 행복한 계룡시 만들기 홀몸장애인 전수조사
01. 26.	문화일보	전장연 부메랑 ‘장애인 탈시설 정책’ 전면수정
01. 24.	중도일보	경기도,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기회의 경기도’ 시범사업 실시
01. 24.	중부일보	경기도, 올해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실시
01. 24.	경향신문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확대 추진 월 5만원 ‘기회 소득’ 시범지급
01. 24.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올해부터 매월 5만원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01. 08.	중도일보	경남도, ‘2023년 경남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2023년 전체 언론 기사의 특징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적으로는 37건이었지만 내용에서는 다수의 언론 보도는 행사와 관련된 기사가 많았다. 주요 사업과 행사, 특히 시설 개장과 관련한 뉴스 비중이 컸다. 고령장애인과 관련한 기사도 주로 의정부시, 파주시, 과천시 등의 쉼터 개설 관련 뉴스가 다수였다.

둘째, 전문적인 분석이나 고령장애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기사는 적었다. 2023년 5월 8일 충청투데이의 “[가정의 달 기획] 저출산 고령화로 늘어나는 독거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마련 절실” 기사와 8월 6일 한겨레의 “[뉴노멀-미래] 노인의 미래”를 제외하고 다수 언론 기사의 내용은 주로 단발성(스트레이트) 기사였다. 이런 문제는 아직 우리 언론에서 장애인 관련된 전반적인 인식 향상에 비해 고령장애인에 대한 고민이 부족함을 알려준다.

셋째, 2023년 기사 리스트에서도 확인되지만 엄밀하게 고령장애인이란 키워드를 가진 기사보다는 일반적인 장애인 관련 기사에서 ‘고령장애인’이 다루어진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쉼터 등의 시설 개관, 관련 행사 등을 제외하고 고령장애인과 관련한 기사는 6월 6일 중부일보 “군포시의회 신금자 의원,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추진”, 5월 22일 경인일보 “경기복지재단 ‘고령 장애인 돌봄 확대’ 강조, 고령화율 3배 높아” 등이었다. 그만큼 고령장애인 관련 뉴스 자체가 적었음을 알려준다.

이번 국내 언론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언론에 비친 고령장애인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사회 전반과 언론계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장애인 문제는 여전히 언론의 관심이 부족함을 확인했다.

앞서 지적했지만, 전체 장애인 중에서 고령장애인 비율은 52.8%(140만 2,000명)이고 65세 이상 고령(노령) 등록장애인이 65세 이상 인구의 15.1%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장애인 관련 언론 보도와 함께 고령장애인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중요하다. 그리고 2023년 기사 리스트에서 보듯이 주요 고령장애인 관련 뉴스가 경기도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사실 고령장애인은 경기도권에도 많지만,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농어촌지역이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앞으로 언론이 앞장서 고령장애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 많은 관심과 분석적인 시각을 제시하여 사회적 여론 환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보건복지부. 2023.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세종: 보건복지부.
- 이재운. 2023.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연합뉴스 2023년 4월 19일.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빅카인즈 사용자 매뉴얼』. Retrieved 11/7/22 from <https://www.kinds.or.kr/manual>

2023 고령 장애인 관련 보도내용 분석 기획모니터

신재민

넷마블문화재단 과장

I. 서론

고령 장애인이란 노인성 노화에 따른 장애(Disability with aging)와 장애인 노화(Aging with disability)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장애와 노화를 동시에 경험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나이가 젊은 장애인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고령자와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2023년 한국 65세 이상 인구(950만 명)는 전체 인구(5,155만 명) 대비 18.4%로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은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23)¹⁾.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37개국 중 고령화 비율 연평균 증가율이 3.3%로 가장 빠르며 세계 1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기대수명 연장과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고령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고령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한국경제연구원, 2021)²⁾. 그런데 등록장애인의 고령화 현상은 더 심각하다. 2022년 기준 전체 인구수(5,143만 명) 대비 전체 등록장애인(265만 명)의 비중은 5.2%인데, 65세 이상 등록 장애 인구(140만 명)는 52.8%나 된다. 이는 2014년 46.7%에 비하여 6.1%가 증가한 수치이며, 전체인구 고령화 수준(18.0%)에 비해 34.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3).³⁾

고령 장애인은 장애와 고령을 동시에 경험하는 집단으로 복지 욕구 또한 높다. 하지만

- 1) 통계청(2023). 2023 고령자 통계
- 2) 한국경제연구원(2021). 저출산, 고령화 추세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
- 3) 보건복지부(2023).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고령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사회정책 부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낮은 취업률과 제한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빈곤, 장애와 노화로 인한 만성질환 등의 의료문제와 사회적 고립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고령 장애인은 연령과 장애라는 제약으로 중복 소외 및 이중 차별에 노출되기 쉬워 국가나 지역사회의 국가적 개입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제이기도 하다.

고령 장애인 복지를 정책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언론은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한다. 이런 관심과 분위기 형성이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밑거름 역할을 한다. 이에 고령 장애인에 대해 언론이 얼마나 관심을 두고 보도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3년 한 해 동안 언론사별로 고령 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기사를 다루고, 어떤 형태로 보도되고 있는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분석해 앞으로 언론보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II. 본론

1. 분석

가. 분석 대상

분석 방법은 10개 종합일간지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니터링 하였다. 분석한 10개 일간지는 경향신문·국민일보·동아일보·문화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한국일보이다.

나. 분석 방법

모니터링 방법으로는 국내 언론사의 뉴스 및 기사 등을 포함한 최대 규모 DB를 토대로 빅데이터 분석 활용이 가능한 빅카인즈(BIG KINDS)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 ‘고령 장애인’, ‘노령 장애인’, ‘장애 노인’ 총 3가지 키워드를 입력하여 관련 기사를 분석하였다.

‘고령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하였으나, 노인 또는 노령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정확한 법적 규정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고령 장애인에 대한 용어는 다양한 연령기준 설정과 고용 영역, 장애 영역 등 여러 영역에서 연구자들마다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⁴⁾

장애 노인, 노령 장애인, 노인성 장애인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모니터링에서도 고령 장애인 이외에 노령 장애인, 장애 노인까지 검색하였다. 단, 검색 과정에서 위 단어로 검색되었으나 고령 장애인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기사는 제외했다.

검색된 기사는 단순 보도, 심층 보도, 논설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단순 보도는 단순 정보전달의 내용만 담거나 고령 장애인에 대해 극히 일부만 다룬 기사로 보았다. 심층 보도는 인터뷰, 직접 체험 등 심층적으로 내용을 분석한 보도자료로 구분하였으며, 논설은 외부 기고까지 포함하였다.

2. 분석결과

가. 보도량

총 191건의 기사 중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경향신문이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세계일보(27건), 서울신문(23건), 국민일보(20건) 순이었다. 한국일보의 경우 총 8건으로 보도량이 가장 적은 언론사였다. 키워드 별 보도량을 살펴보면 ‘장애 노인’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령 장애인’이 64건, ‘노령 장애인’이 12건이었다.

이는 필자가 2019년에 분석한⁵⁾ 고령 장애인 관련 보도량(29건)과 비교하면 약 15%가 증가하여 과거에 비해 고령 장애인에 대한 보도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9년에는 ‘고령 장애인’의 키워드로 보도된 언론사가 제일 많았지만 2023년에는 ‘장애 노인’의 키워드로 보도된 언론사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언론사별 보도량

4) 한국장애인개발원(2017). 고령 장애인의 욕구조사 및 중장기 정책방향

5) 신재민(2020). 고령 장애인 관련 보도내용 분석. 2019 모니터 보고서.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단위 : 건)

구분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계
고령 장애인	15	8	2	4	5	10	9	2	5	4	64
노령 장애인	5	0	0	3	0	3	0	0	1	0	12
장애 노인	16	12	13	4	18	14	6	11	6	4	104
계	36	20	15	11	23	27	15	13	12	8	191

나. 보도 유형

보도 유형을 살펴보면 단순 보도가 133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 심층 보도(29건), 기고(19건) 순이었다. 2019년에 분석한 고령 장애인 보도 유형의 경우 단순 보도 12건, 심층 보도 14건, 기고 3건으로 2019년에 비해 전체 보도량은 많이 늘어났지만 단순 보도의 비중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가장 많이 보도된 경향신문(총 36건)의 경우 단순 보도가 26건, 심층 보도 및 기고가 10건으로 전체 보도량 대비 심층 보도 및 기고 비중이 약 27%를 차지했다. 반면 보도량이 가장 적은 서울신문(총 8건)의 경우 단순 보도가 4건, 심층 보도 및 기고가 4건으로 전체 보도량 대비 심층 보도 및 기고 비중이 50%를 차지했다. 단순 보도는 홍보성의 기사나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 수치에 의존한 정보전달 형태의 기사로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 심층 보도에 비해 질적으로 부족한 보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총 보도된 수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보도 내용을 담은 보도 형태를 띄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2] 언론사별 보도 유형

(단위 : 건)

구분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계
단순 보도	26	16	9	8	22	24	11	6	7	4	133
심층 보도	7	1	5	3	1	1	3	4	1	3	29
기고	3	3	2	0	0	2	1	3	4	1	19
계	36	20	16	11	23	27	15	13	12	8	29

다. 주제별 분석

보도된 기사들을 복지정책 및 지원, 돌봄, 이동권 등 10개 주제별로 분류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고령 장애인의 현황이나 연령의 기준, 각종 사고·사건 등 특정 주제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기타 주제에 포함했다. 가장 많이 다룬 주제는 복지정책 및 지원(41건)이었다. 다음으로 기타(40건), 돌봄(33건), 배리어프리 및 보조기기(16건), 이동권(13건) 순으로 차지하였다. 그밖에 빈곤이나 재난피해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고령 장애인으로 발생한 차별 및 학대 사건 등이 있었다.

[표 3] 언론사별 보도 주제

(단위 : 건)

언론사 주제	경향 신문	국민 일보	동아 일보	문화 일보	서울 신문	세계 일보	조선 일보	중앙 일보	한겨레	한국 일보	합계
복지정책 및 지원	7	5	5	4	4	6	2	3	1	4	41
기타(연령의 기준, 현황)	4	4	5	3	4	7	5	3	4	1	40
돌봄	13	2	1	1	5	3	1	2	4	1	33
배리어프리 및 보조기기	1	3	5	0	3	1	2	1	0	0	16
이동권	0	1	0	1	2	5	2	0	1	1	13
빈곤	3	0	0	1	3	1	1	1	1	0	11
특별(재난피 해, 흑한기) 지원	6	3	0	0	0	1	0	0	0	1	11
차별 및 학대	1	0	0	1	1	1	1	1	1	0	7
연금	1	0	0	0	1	2	1	2	0	0	7
탈시설	0	2	0	0	0	0	0	0	0	0	2
소 계	36	20	16	11	23	27	15	13	12	8	181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언급한 이슈인 복지정책 및 지원은 10개 종합일간지에서 모두

다뤘다. 특히 국민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는 심층 보도로, 경향신문, 동아일보는 기고 형태로 보도 되었으며 세계일보와 중앙일보는 심층 및 기고 형태로 모두 보도되었다. 복지정책 및 지원 주제로 보도된 내용 중 대부분이 재택 치료와 같은 의료복지에 대한 내용이 많았고 이밖에 급식 지원이나 전반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었다.

의료복지에 대한 심층 보도한 언론사 중 조선일보(“집이 마지막 병원... 일반 고령 환자도 재택 치료가 시급한 이유”/2023. 4. 12.)와 한국일보(“동네의원이면 환자 집으로 왕진 가야죠...가정 진료 시대는 올 수 있을까”/2023. 7. 19)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질병과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의료진이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의료 인프라와 제한된 대상자에게만 지원하는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였다.



[그림 1] 복지정책 및 지원 중 의료복지에 대해 심층 보도한 기사
(조선일보, 2023-4-12 / 한국일보, 2023-17-19)

의료복지에 대한 기고 형태로 보도한 곳은 동아일보(“수요 많은 방문 진료, 일본에 뒤처지는 이유”/2023. 8. 31)와 중앙일보(“모두가 건강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 의료 강화’”/2023. 4. 10.)가 있었다. 그 중 동아일보의 경우, 일본의 방문 의료와

비교하면서 부족한 인프라와 일률적인 수가로 활성화되지 않은 방문 의료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국내도 일본처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기가 몇 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 의료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일보의 경우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 개선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다.



[그림 2] 복지정책 및 지원 중 의료복지에 대한 기고
(동아일보, 2023-8-31 / 중앙일보, 2023-4-10)

그 이외에 고령 장애인의 지역 정착을 위한 시설 확대 필요성에 대해 다룬 세계일보(손끝 명화 감상, 뜨개질, 수다...“하루가 금방 가요”/2023. 1. 10)의 심층 보도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급식 지원 시스템 조성이 필요하다는 세계일보(어르신·장애인을 위한 ‘급식 지원’ 바람직/2023. 4. 13) 등 다양한 복지정책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다.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고령 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언론사에서 가장 많이 보도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고령 장애인을 단순히 장애인과 노인의 중간 점점 영역으로 바라보고 획일화된 복지정책에 대해서만 다뤘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두 번째로 ‘돌봄’의 경우 10개 일간지에서 32건이 보도되었다. 특히 경향신문의 경우

심층분석 형태로 3건(주 40시간 일하고, 나머지는 어머니 돌봐 “계속 쫓기는 삶”/2023. 4. 2), (간병돌봄·일 병행 청년의 시간...“뭔가에 쫓기는 듯한 삶”/2023. 4. 6), (가족 돌봄 청년 주 평균 21.6시간 돌봄에 쓴다/2023. 4. 26)이 보도되어 가족 구성원 증 고령 장애인을 돌보는 청년 “영케어러(Young carer)”의 생활을 집중취재 하였다. 이밖에 문화일보는 ‘노인 48명에 근무자 52명...돌봄·요양은’ 시민권(2023. 7. 4)이라는 기사를 통해 스웨덴의 돌봄 사례를 보도하였다.



[그림 3] 돌봄에 대해 심층 보도한 기사
(경향신문, 2023-4-2, 2023-4-6, 2023-4-26)

세 번째로 많이 다뤄진 주제는 배리어프리화 and 보조기기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 주제를 다룬 언론사는 10개 일간지 중 문화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를 제외하고 모든 언론사에서 보도되었다. 특히 동아일보에서는 [장애, 테크로 채우다]라는 시리즈 기획기사(노인도 쉽게 탈 수 있게... 차 의자 90도 돌아갑니다/2023. 7. 29), (변기 옆에 손잡이 달고, 현관에 의자만 뒤도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2023. 7. 29)를 통해 고령 장애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보조기와 기술에 대해 직접 취재하고 이용자들의 인터뷰 등 심층 보도 형태로 다루어 많은 독자로 하여금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좋은 기사였다.



[그림 4] 배리어프리 및 보조기기에 대해 심층 보도한 기사 (동아일보, 2023-7-19)

이 밖에도 고령화 현상, 기업과 단체에서 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봉사활동,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령 장애인의 지원 등이 보도되었다. 특히 경기도에 고령 장애인을 위한 쉼터 확대 설치에 대한 내용이 단순 보도 형태로 다뤄졌다. 이는 대부분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기사에 포함되었던 고령 장애인 관련 보도내용과 비교하면 단독으로 고령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요양병원에 있던 고령 장애인의 학대 사건이나 혼자 사는 고령 장애인 집에 무단 침입하고 폭행한 사건 등 부정적인 보도의 흐름이 대부분이었으며, 반대로 장애를 가지고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고령 장애인에 대한 사례를 들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보도 내용도 있었다.

그동안 전반적인 장애계 언론 흐름은 장애인 고용, 등급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 탈시설 등 다양한 이슈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노년계 언론 흐름은 경제활동, 고용, 노후 준비, 건강, 생활복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 하지만 고령 장애인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슈가 부각되지 않고 장애인과 노인 관련 보도 내용에 혼합되어 다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순 보도 형태가 많았다. 이번엔 모니터링 한 기사 주제를 보면 고령

장애인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다뤄지기보다는 장애인이나 노인의 일부로 포함해 주제가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이는 아직 대부분의 언론에서 고령 장애인이 주된 관심 분야가 아니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및 제언

위에서 살펴본 고령 장애인 관련 보도된 결과를 종합하면 2019년에 분석한 고령 장애인 보도량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했으나 장애인이나 노인에 비해 여전히 고령 장애인에 대한 보도량과 질 모두 부족했다. 또한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한 보도 자료 내용에 고령 장애인이 일부 포함된 기사가 대부분이어서 고령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나 정책의 필요성을 환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럼에도 고령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는 단순히 규모가 증가해서가 아니다. 고령 장애인은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적 문제와 그에 따른 수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집단임에도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복지정책에 따라 오히려 이용에 제한적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간의 서비스 분절에 대해 많은 언론사가 관심을 갖고 각 서비스의 연계와 조정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언론사별로 고령 장애인에 대해 지칭하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언론사뿐만 아니라 연구 분야에 따라 학자마다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독자들의 관심과 집중을 분산시켜 하나로 집중될 수 있는 이슈 생성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언론사에서 통일된 용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가장 많이 보도된 주제 중 하나인 '돌봄'의 경우, 고령 장애인을 '생산 활동 주체'가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어 독자가 고령 장애인을 수동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편견을 갖게 하고 있다. 또한 돌봄의 대상자인 고령 장애인으로 인해 돌봄자들의 어려움을 보도하고 있어 부정적이고 동정의 여론을 형성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돌봄이 아닌 고령 장애인의 삶을 개척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보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에 대한 주제는 장애계와 노년계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언론보도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필자가 2021년 고령 장애인 취업 유지에 대해 연구한 논문(6)에 따르면 고령 장애인은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낮은 여성 고용률, 높은 비정규직 및 비임금근로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고령 장애인은 나이와 장애에 상관없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였다. 따라서 넓은 영역에서의 취업 보장을 위해 장애인고용제도와 고령자고용제도의 통합화에 대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언론으로 향후 고령 장애인만의 특화된 사회적 욕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고령 장애인의 입장과 시각에서 보도하고, 장애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올바른 고령 장애인 정책 방향이 설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신재민(2021). 고령 장애인의 취업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장애와 고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획모니터 2

1. 제43회 '장애인의 날' 언론모니터

김철환('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활동가)

2. 언론에 비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이용석(더인디고 편집장)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언론 보도 분석

김헌식(대구대학교 대학원 장애학과 외래교수)

제43회 '장애인의 날' 언론모니터

김철환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활동가

I. 들어가며

올해 '장애인의 날'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과 함께 시작되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장애인종합계획)은 연 초에 발표되기는 했지만 '장애인의 날'이 가까워져 오자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정부나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 '장애인의 날'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해와 달리 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사회활동이 정상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코로나19의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줄고는 있었지만, 확산세는 여전했기 때문이다.

지난 '장애인의 날' 전후로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도 진행형이다. 전장연의 요구사항이나 시위의 양상이 조금 달라졌고,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이나 정치인들의 관심이 바뀌기는 했지만 진행형이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제43회 '장애인의 날' 전후로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언론 기사의 내용을 분석하려 한다. 분석 기사의 보도 기간은 '장애인의 날' 주간(4월 13일~27일)으로 했으며, 언론 지면에서 보도되었던 내용 가운데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언론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 정도와 관심사 등을 살펴보려 한다.

'장애인의 날' 주간 동안 언론이 장애인에 대한 기사를 어느 정도 다루었는지, 다루고 있는 기사의 내용과 유형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장애 유형과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나 수단에 대한 기사는 어느 정도인지도 보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어가 점점 사라지는 추세인데, 어느 정도 차별어가 기사에 등장하는지도 살펴보았다.

요즘은 스마트폰은 열기만 하면 언론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인공지능시스템이 취향에 맞는 기사를 노출시켜 원하는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반면, 인지도가 높은 기사가 상위에 노출되고 읽히지 않는 기사는 묻히는 등 쏠림현상도 있다.

다시 말하여 장애인과 관련한 언론 기사는 기사의 노출 정도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독자들에게 어느 정도 공감 있게 기사를 쓰는 것은 물론 왜곡된 기사를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제43회 '장애인의 날' 주간 언론 모니터링은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깔고 진행한다.

II. 본론

1. 기사 분석

올해는 '제6차 장애인종합계획'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시행되는 해이다. 그런 만큼 정부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 정도는 어느 때와 달랐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제43회 '장애인의 날'' 행사도 대면으로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두고 언론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을 한 언론은 10개 종합일간지와 8개 경제지이다. 종합일간지로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이며, 경제지로는 서울경제, 매일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이다.

모니터링은 '장애인의 날' 전후인 4월 13일부터 4월 27일인 '장애인의 날' 주간으로 하였다. 언론 기사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시행하는 '빅 카인즈'(www.bigkinds.

or.kr)에서 검색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모니터링 방법은 '빅카인즈'의 검색 기능에서 모니터링 언론을 설정하고, 모니터링 기간을 설정한 다음 중심 키워드 '장애인'을 입력하여 기사를 추출하였다.

보도 내용 검색은 '전장연', '장애인 정책' 등의 키워드로 검색했으며, 장애인 별 언론 노출 정도는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으로, 차별어는 검색할 때는 '맹인', '절름발이' 등 키워드를 입력하여 기사를 추출하였다.

다만, 키워드만을 가지고 진행한 모니터링이라 한계는 있다. 언론 보도량에 대한 분석은 용이 했지만, 중복기사의 처리 기준, 기사의 경중을 가르는 정형화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사 내용의 적절성이나 사회적 파급력 등을 분석하기 어렵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가. 언론사별 보도량

'장애인의 날' 주간 언론 보도를 보면, 장애인 관련 기사는 지난해보다 늘었다. 올해 '장애인의 날' 주간 장애인 관련 보도량은 1,674건으로 언론별 평균 기사는 93건이다.

〈표1〉 언론별 장애인 관련기사

언론사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매일경제	누계
숫자	76	116	75	45	97	133	56	62	54	57	79	74	155	103	175	71	170	76	1,674

이는 지난해 보도량인 1,231건(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22)보다 26%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485건이나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1,415건, 2021년 948건보다 현저하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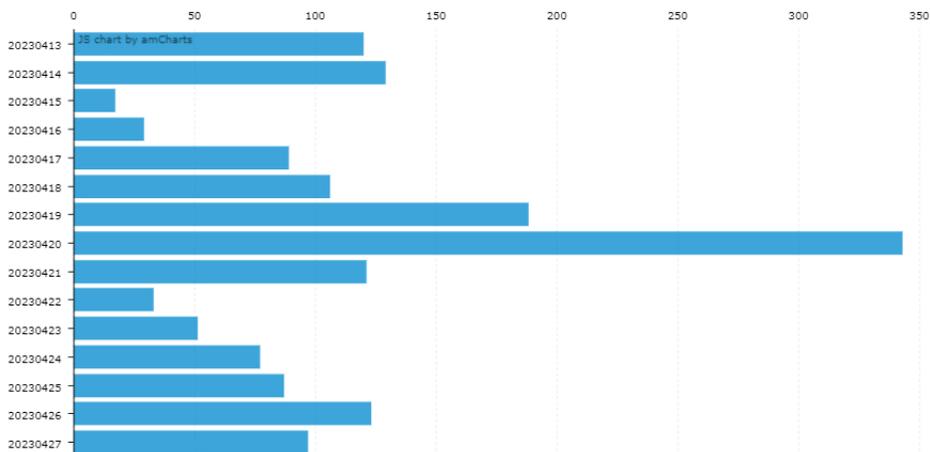
〈표2〉 연도별 '장애인의 날' 주간의 장애인 기사 보도량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보도량	1,485건	1,415건	948건	1,231건	1,674
언론사별 평균보도량	82.5건	78건	52.6건	68건	93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 등 기삿거리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니터링 내용에서도 드러나듯 장애인종합정책의 시행으로 정책 시행이나 이에 대한 언론의 관심 정도, 전장연 등 장애인의 시위 등 사회적 요구도 보도량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나. 날짜별, 언론사별 보도량

분석한 보도량을 장애인 관련 보도가 4월 19일과 20일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19일 205건, 20일 363건으로 가장 많다. 모니터링 기간 중 기사의 양이 적은 날인 15일 17건, 16일 29건임을 비교할 때 많은 수치이다.



〈그림1〉 장애인 주간 장애인 기사 보도량

기사의 건수가 100건이 넘는 언론으로는 아시아경제(175건), 파이낸셜뉴스(170건), 헤럴드경제(155건), 세계일보(133건), 국민일보(116건), 머니투데이(103건) 순이다. 기사량이 작은 언론으로는 문화일보(45건), 한겨레(54건), 조선일보(56건) 순이다.

기사의 양이 많고 적음이 언론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 정도와 비례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기사에는 단순보도와 심층취재 등을 모두 산정한 것이라 이것만으로 언론을 평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장애인에 대한 많은 노출이 장애인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은 틀림이 없다.

〈표3〉 날짜별 언론사들의 장애인 기사 보도량

언론사 날짜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매일경제	누 계
4/13	6	9	3	6	5	16	6	2	3	4	4	3	8	11	9	3	15	7	120
4/14	2	10	6	3	8	17	2	8	5	4	6	11	9	6	15	4	8	6	130
4/15	1	1	1	1	1	3	0	0	1	0	1	0	3	0	2	1	1	0	17
4/16	2	2	1	1	2	1	2	4	2	0	0	0	2	3	5	1	1	0	29
4/17	7	6	4	0	2	7	1	1	4	1	8	7	8	5	7	9	10	3	90
4/18	5	8	4	5	4	5	3	4	3	1	2	6	13	6	21	2	15	3	110
4/19	15	10	7	3	15	10	3	4	9	8	11	7	19	14	19	11	26	14	205
4/20	19	26	18	9	19	21	18	11	9	12	22	16	36	21	33	16	36	21	363
4/21	1	8	6	6	6	13	5	6	1	2	4	1	18	9	15	5	15	4	125
4/22	0	2	2	0	0	8	1	1	0	1	1	1	2	2	3	0	6	3	33
4/23	2	3	3	1	3	4	2	3	3	2	5	2	3	1	4	2	7	4	54
4/24	1	7	5	3	7	4	3	3	4	1	1	3	6	6	13	3	6	2	78
4/25	3	7	3	2	8	7	5	5	0	5	5	4	13	5	7	0	8	1	88
4/26	8	7	9	2	8	8	4	8	6	4	4	9	6	3	14	6	10	4	120
4/27	4	10	3	3	9	9	1	2	4	12	5	4	9	11	8	8	6	4	112
누계	76	116	75	45	97	133	56	62	54	57	79	74	155	103	175	71	170	76	1,674

2. 언론별 보도유형

언론사별 장애인 관련 기사를 보면 일반기사와 심층적으로 내용을 다룬 기사가 1,214건이고, 행사나 장애인 관련 소식을 전하는 단순기사나 인용기사는 456건이다. 사실과 논평의 경우에는 언론사에서 사실 또는 논평으로 다룬 것만 추렸는데, 4건밖에 없었다.

〈표4〉 언론사별 장애인 기사 보도유형

언론사 유형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매일경제	누 계
단 인	32	25	19	12	17	30	14	13	8	11	20	23	42	37	49	16	56	32	456
일 반 층 평 사	43	91	56	33	80	103	42	49	46	45	59	51	112	66	126	55	113	44	1,214
사 설	1	0	0	0	0	0	0	0	0	1	0	0	1	0	0	0	1	0	4
누 계	76	116	75	45	97	133	56	62	54	57	79	74	155	103	175	71	170	76	1,674

일반기사의 경우는 내용이 방대하여 아래의 주제별 기사에서 소개하기로 하고, 사설/논평의 경우 눈여겨볼 만한 기사가 있어, 2편을 소개한다.

장애인 이동권 등을 다룬 “장애인이 서럽고 안 보이는 나라는 좋은 사회일 수 없다(경향신문, 2023. 4. 19)”와 장애인의 최저임금 문제점을 다룬 “장애인 의무 고용 안 지켜도 그만인 사회(한국일보, 2023. 4. 21)”이다.

경향신문의 “장애인이 서럽고...”에서는 2020년 정부 실태조사를 통하여 장애인의 이동 환경의 열악함이나 장애인이 하층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노동임금 환경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일보의 “장애인 의무 고용...”에서도 국내 6개 대형은행 가운데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한 곳이 없다고 지적하며, 어렵게 취업한 장애인이 출근 시간 만원 지하철을 타기가 어려워 이른 새벽 출근하려다 교통사고를 당해 직장을 잃었다는 사례를 들면서 대통령이 말한 공정사회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기사1> 논평/사설의 예(경향신문, 2023.4.19.)

경향신문

[사설] 장애인이 서럽고 안 보이는 나라는 좋은 사회일 수 없다

사회>장애인 | 사회>노동_복지

2023-04-19 |

기사원문 스크랩 뉴스듣기

가 가

한국의 등록 장애인구는 지난해 기준 전체인구 20명 중 1명꼴인 265만명이다. 그러나 대중교통과 직장, 여가활동을 비롯한 일상에서 만나는 장애인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 우리 사회가 관성적으로 비장애인 중심으로 짜여 있기 때문이다. 소외받는 장애 시민은 보이지 않고 차별의 심각성은 가려진 것이다.

장애인이 보이지 않는 큰 이유는 이동권 제약이다. 2020년 정부 실태조사 결과 거의 매일 외출한 장애인은 45.4%에 그쳐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 70.1%보다 급감했다. 집 밖에 나서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꼽혔다. 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이 부족하고 이용도 쉽지 않다. 일본·대만의 특급은 저상버스나 기차 장애인석과 비교된다. 인프라 부족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다. 2021년 기준 취업 장애인은 10명 중 3명에 그친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영리목적 기업은 커녕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도 고용 대신 돈으로 때우기 일쑤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까지 5년간 의무고용 미달로 226억원을 냈고 공공기관 764곳이 이렇게 낸 총부담금이 1400억원에 달한다. 장애인의 경제적 소외는 저소득 층도 벗어나기 어렵게 한다. 자신이 '경제적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장애인 가구는 69.4%로, 국민 평균치(39.1%)의 두 배에 육박한다.

<기사2> 논평/사설의 예(한국일보, 2023.4.21.)

한국일보

[사설] 장애인 의무고용 안 지켜도 그만인 사회

사회>장애인 | 사회>노동_복지

2023-04-21 |

기사원문 스크랩 뉴스듣기

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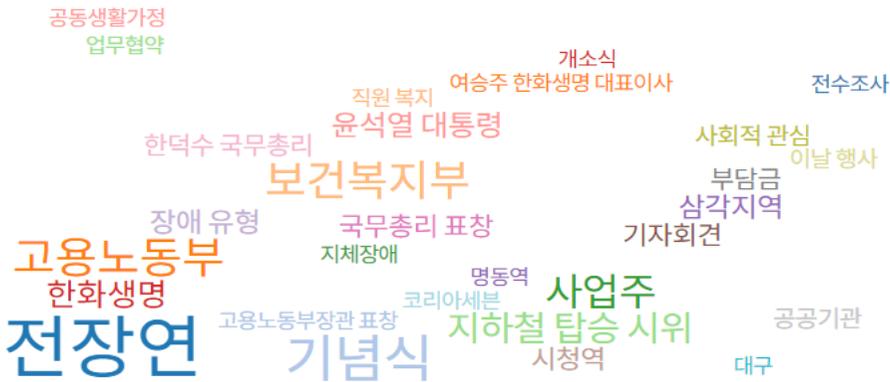
▲서울 서초구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내 편의점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박현진씨가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안대는 인턴기자

3. 이슈 및 주제별 분석

가. 언론의 관심 이슈

'장애인'을 키워드로 18개 언론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가장 관심을 끌었던 내용은 '전장연'(가중치 12.31, 키워드 빈도수 35)이다. 그 다음으로 '기념식'(가중치 8.61, 키워드 빈도수 40)과 '고용노동부'(가중치 7.09, 키워드 빈도수 33)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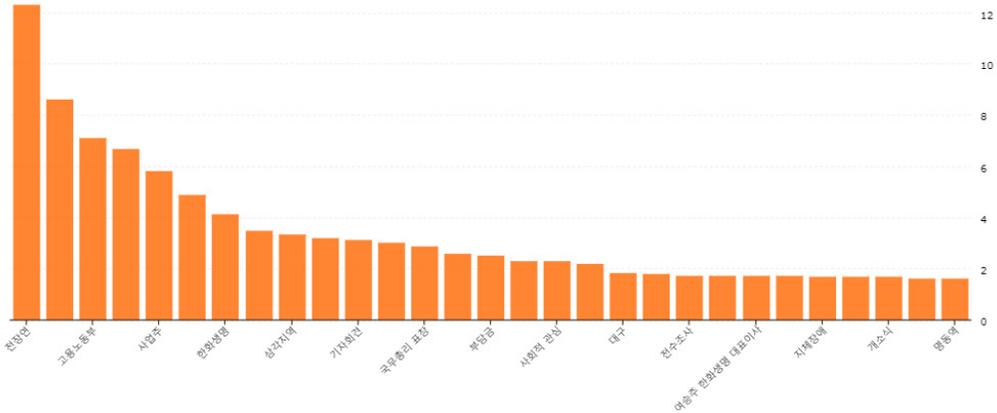
〈그림2〉 '장애인' 키워드로 분석한 이미지('빅카인즈' 분석 이미지)



키워드로 분석한 언론 기사에서의 언론의 관심 정도는 '전장연', '고용노동부', '사업주', '한화생명', '보건복지부', '지하철 탑승 시위', '삼각지역', '기자회견', '국무총리표창' 순이다. 이 가운데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서는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삼각지역', '기자회견' 등으로 압도적이다. 그 뒤를 잇는 것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표창', 등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시상과 관련한 기사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2년 전부터 지속해 온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장애인의 날' 전후 더욱 거세지면서 언론의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해서는 행사의 동정이나 행사의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가 많아 단순보도가 많다는 특징도 있다.

〈그림3〉 ‘장애인’ 키워드로 분석한 기사의 순위(‘빅카인즈’ 분석 이미지)



나. 보도 내용의 주제

언론 기사를 주제별로 구분해 보면¹⁾ 크게 ‘사회참여’, ‘인권’, ‘건강/여가’, ‘기술/정보통신’, ‘예산/법률’, ‘편견/인식개선’으로 나누어 보았다.

〈표5〉 언론 기사의 주제별 분류

기사 주제	사회참여			인권			건강 / 여가		기술 정보 통신	예산 법률	편견 인식 개선
	접근 이동	노동 일자리	학습 교육	인권 탈시설	차별 금지	정보권 알권리	건강	여가 여행			
건수	150	142	292	123	214	109	161	87	38	251	96

‘사회참여’ 관련 기사가 많았고, 다음으로 ‘인권’ 분야이다. ‘예산’이나 ‘정책’ 관련 기사도 많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편견/인식개선’ 관련 기사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기술/정보통신’ 관련 기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쉬움이 있다면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장애인이 어떻게 적응하고 참여할 것인가를 놓고 볼 때 관련 기사가 적다는 것이다.

주제별로 기사의 건수를 보면, ‘학습/교육’ 292건, ‘법률/예산’ 251건, ‘차별금지’ 214건, ‘건강’ 161건, ‘접근/이동’ 150건, ‘노동/일자리’ 141건, ‘인권/탈시설’ 123건, ‘정보권/알권리’ 109건, ‘편견/인식개선’ 96건, ‘여가/여행 87건’, ‘기술/정보통신’ 38건이다.

1) 이 분류는 편의상 한 것이라 분류 내용 사이에 경계가 모호할 수 있음을 밝힌다.

이 가운데 ‘학습/교육’ 관련한 기사는 “장애 학생 10명 중 6명 원격수업 이해 못 해… 코로나19로 부모 경제 부담 늘어”(한국일보, 2023.4. 19), “‘냉장고 사용법 쉽게 배운다’...장애 청소년의 더 나은 일상 만드는 LG전자”(파이낸셜뉴스, 2023.4.19.), “한국에 딱 1,500여 명 있는 ‘점역사’...어떤 일 하나”(경향신문, 2023.04.23.) 등이다. ‘학습/교육’ 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국민일보(2023.4.24.) 기사로, 신체장애로 세례를 받기 어려웠던 뇌병변장애인의 세례 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기사3> ‘학습/교육’ 관련한 기사(국민일보,2023.4.24.)

국민일보

“저는 뇌병변장애인입니다, 말도 불편하고 기억도 어려워 세례교육은 쉽지 않았습니다” 힘겹게 신앙고백 이어가자... 교인들 모두 흐느꼈다

사회>장애인 | 문화>종교 | 사회>교육_시험

2023-04-24 | 장창일

기사원문 | 스크립 | 뉴스듣기

[현장] 서울 강남교회, 장애인주일 맞아 장애 교인에게 세례



‘접근/이동’ 관련해서는 “휠체어 지도, 보는 ARS...장애인 접근성 높이는 IT기업들”(2023.4.0), “김동연 ‘자유 제한받는 장애인, 더 많은·더 고른 기회를’”(국민일보, 2023.4.21.), “장혜영 ‘이준석과 양자 토론? 대환영’”(경향신문, 2023.4.27.) 등이다. ‘접근/이동’ 관련 기사에서 옳기는 기사는 일반 입석 승객을 빌미로 휠체어 탑승을 막은 코레일 측의 행태를 기사화한 아시아경제(2023.4.20.) 기사이다.

<기사4> ‘접근/이동’ 관련 기사(아시아경제. 2023.4.20.)

아시아경제

"입석 승객 많아서 못 타요"...휠체어 막은 코레일, 결국 사과

사회>장애인

2023-04-20 | 허미담

기사원문 ☆ 스크랩 🔊 뉴스듣기

휠체어 전용석 예매하고도 못 타 "당시 혼잡도 매우 높아...사과"



▲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동휠체어 좌석을 예매한 지체**장애인** 승객의 탑승을 거부한 일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코레일은 공식 사과했다.

장애인의 ‘노동/일자리’ 관련 기사로 “‘장애인 안 뽑는 게 오히려 이득’”(한국일보, 2023.4.23), “고용노동부, 인권위 권고 수용 ‘근로감독관 장애인 조사 지침 마련’”(아시아경제, 2023.4.25.), “가족 돌봄 청년 41%, 복지지원 못 받았다”(동아일보, 2023.4.27.) 등이다. 이러한 기사 가운데 여성장애인의 열악한 일자리는 기사화한 한겨레(2023.4.20.)의 기사를 신는다.

<기사5> '노동/일자리' 관련 기사(한겨레, 2023.4.20.)

한겨레
THE HANGYERE

"배제와 소외 너무 많아"...장애여성 일자리, 3년새 더 열악해졌다

사회>장애인 | 사회>여성 | 사회>노동_복지

2023-04-20 | 빙준호 기자

기사원문 ☆ 스크랩 🔊 뉴스 듣기



▲장애인고용공단 제공

농인인 김서경(가명·50)씨에게 하루 4시간, 식당에서 비장애인 동료 7명과 함께 하는 설거지는 그나마 '허락된 일'이다. 김씨는 <한겨레>에 활동가를 통해 농인의 일과 삶을 문자 메시지로 전하며 "배제와 소외가 너무 많다. 이 이상 좋은 일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했다. 그가 하루 4시간의 일을 택한 이유 중에는 비장애인보다 힘겨운 가사·돌

<기사6> 인권 관련 기사(경향신문, 2023.4.20.)

경향신문

"왼쪽은 실명에 모욕까지...장애인 수형자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사회>장애인

2023-04-20 |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

기사원문 ☆ 스크랩 🔊 뉴스 듣기



‘차별’ 등 인권 관련 “검찰, 장애인 대상 범죄 엄정 대응…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지원 강화”(아시아경제, 2023.4.18.), “목줄 채워 사료 먹인 '반인륜 악행' 자매 포주 2심 25년·17년형”(세계일보, 2023.4.23.), “장애 기본권 요구했지만, 국가는 예산 논리로 끌어내려”(한겨레, 2023.4.20.) 등이다. 이러한 기사 가운데 소개를 하는 기사는 사각지대에 놓은 장애인 수형자들의 문제를 기사화 한 경향신문(2023.4.20.) 기사이다.

‘여가/여행’ 관련하여 “박완수 경남지사 ‘장애인, 제약 없이 관광 다니게 할 것’”(아시아경제, 2023.4.18.), “속초 장애인 관광 7개 코스 가볼까”(헤럴드경제, 2023.4.20.),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서울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무장애 관광 홍보 행사를 23일까지 연다.”(머니투데이, 2023.4.22.), 이러한 기사 가운데 한국경제의 4월 25일자 기사 “장애인 문턱 없애는 관광지…휠체어 타고 해발 1000m 산 간다.”를 실는다.

〈기사7〉 장애인 접근/관광 관련 기사(한국경제, 2023.4.25.)

한국경제

장애인 문턱 없애는 관광지...휠체어 타고 해발 1000m 산 간다

사회>장애인 | 지역>충남 | 지역>경기

2023-04-25 | 송영찬

기사원문 ☆ 스크랩 📢 뉴스 듣기



▲ 대구 계산동 계산성당 / 한경DB

‘예산/법률’ 관련 기사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전장연 시위”(문화일보, 2023.4.20.), “전동 휠체어도 못 다니는 보도 정비 시급”(아시아경제, 2023.4.23.),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갈등 확산.. '사각지대 야기 vs. 양질 서비스 제공'”(파이낸셜뉴스, 2023.4. 25) 등이다. 이러한 기사 가운데 올리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새롭게 도입된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2026년부터 시행한다는 헤럴드경제의 4월 20일 자 기사이다.

〈기사8〉 장애인 예산/법률 관련 기사(헤럴드경제, 2023.4.20.)

헤럴드경제

한덕수 "'장애인 개인예산제', 2026년부터 시행"

사회>장애인

2023-04-20 | 배문숙 기자

기사원문 | 스크랩 | 뉴스듣기



〈기사9〉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기사(머니투데이, 2023.4.27.)

MT 머니투데이

"바비인형 몸매? 실제로 드물어"...'다운증후군' 바비 나왔다

문화>출판 | 사회>여성 | 사회>장애인

2023-04-27 | 박효주기자

기사원문 | 스크랩 | 뉴스듣기



▲영국의 다운증후군 모델 엘리 골드스타인이 다운증후군 바비를 들고 있다. /사진=마텔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바비인형을 만드는 미국 유명 완구업체 마텔이 제품 다양화를 위해 '다운증후군 바비인형'을 출시했다고 BBC가 2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편견/인식개선’ 관련한 기사로 “낮설고 두려웠지만… 자립의 꿈 이뤄 행복”(동아일보, 2023.4.17.), “26일은 '세계 안내견의 날'...그 고마움, 숫자로 알아볼까요?”(한국일보, 2023.4.25.), “미술·클래식·연극…장애인 인식개선에 문화예술 접목”(경향신문, 2023.4.27.)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올리는 기사는 바비인형은 예쁘고 날씬하다는 상식을 깨 기사이다. 머니투데이의 4월 27일자 기사로 다운증후군 바비인형, 보청기를 낀 바비인형 등을 소개하고 있다.

4. 기타 분석

가. 장애유형 노출

언론에서 특정 유형의 장애인을 염두에 두어 기사를 쓰기는 쉽지가 않다. 특정 유형의 장애인을 기사로 다루기 위해서는 (언론사 기자의 의지도 필요하겠지만) 사회의 관심도와 여론이 있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나 수단(이하 보조기기)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모니터링 과정에서 분석을 해보았다.

〈표6〉 유형별 장애인이 거론된 기사

장애 유형	신체기능장애						정신적장애			내부기관장애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안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뇌전 증
숫자	21	14	82	23	8	5	38	3	7	8	5	6

유형별 장애인이 등장하는 기사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82건으로 많았으며, 지적장애(38건), 청각장애(23건), 지체장애(21건) 순이었다. 하지만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들 장애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려움의 정도는 다른 장애인 못지않다. 즉, 장애계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문제에 언론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휠체어가 159건으로 가장 많고, 수어 85건, 점자 70건, 경사로 23건, 안내견 11건 등이다. 위 장애유형별 기사에서도 보았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다음으로 수어와 점자, 즉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관련 기사가 많다.

〈표7〉 장애인 보조기기가나 수단이 노출된 기사

보조기기	이동장애인용			시각장애인용		청각장애인용		
	경사로	휠체어	목발	안내견	점자	수어	보청기	영상전화기
숫자	23	159	7	11	70	85	8	1

한가지, 유형별 장애인 관련 기사와 같이 보조기기의 경우도 쏠림현상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보조기기에 대한 기사가 대부분이다. 자칫하면 장애인에게 꼭 필요하지만 구입할 수 없거나 접근할 수 없는 보조기기에 대한 문제들이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 차별어 사용

언론 기사에서 장애인을 비하할 수 있는 차별어의 사용은 장애자가 2건, 불구자, 맹인, 농아, 정신지체, 간질이 각각 1건이었다.

〈표8〉 차별어가 사용된 기사

차별어	장애일반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지적장애	뇌전증	기타
	장애자	불구자	맹인	농아	정신지체	간질	정상인
숫자	2	1	1	1	1	1	2

장애인먼저실천본부의 조사에 의하면 2021년 ‘정신병 4건, ‘병어리’ 3건, ‘불구자’와 ‘정상인’ 각 2건, ‘병신’, ‘절름발이’, ‘귀머거리’ 각 1건 등 17건이었는데 이에 비하여 줄었고, 2022년 ‘절름발이’ 3개, ‘병어리’ 4개, ‘정신박약’ 1개, ‘정신병’ 1개 총 7건이었는데 이에 비하여서는 조금 늘었다.

하지만 사용되는 용어들이 의도적이라기보다는 번역상의 오류이거나 무심결에 사용한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장애자’의 경우 “‘유니버설 디자인’이 더 위험?...캐나다 명물 계단의 반전 스토리(해럴드경제, 2022.4.22.)”,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일경제, 2023.4.20.)”가 번역 과정에서 장애인을 ‘장애자’라 하고 있는 것이다.

‘불구자’나 ‘간질’도 마찬가지이다. “아무 공로 없이 입은 은혜(국민일보, 2023.4.13.)”에서 번역과정에서 ‘불구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할 자유’ 누리는 독일 장애인...장애인 고용, 기업도 이득(한국일보, 2023.4.20.)”에서 간질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과거에 비하여 의도적인 차별어 사용이 줄어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언론인들의 차별어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함을 모니터링 과정에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Ⅲ. 나가며

지금까지 제43회 '장애인의 날' 주간 언론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기사의 양이 많아졌고, 주제도 다양해졌다. 기사를 통하여 장애인이 처해 있는 복지, 노동, 교육, 접근환경, 인권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려는 노력, 비장애인이 잘 몰랐던 사실을 기사로 다룸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점 등은 매우 고무적이다.

아쉬운 점은 언론이 장애인의 문제를 깊이 다루기보다 보도자료를 인용하거나 다른 언론의 기사를 인용하는 등 손쉽게 접근하는 경향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1년에 한 번 오는 '장애인의 날'이라 언론이 사설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 등에 대한 입장을 보여주었으면 했으나, 그러한 사설 등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 발전이나 정보통신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장애인이 어떻게 적응하고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기사도 소수에 불과했다. 이뿐만 아니다. 장애인에 대한 취재나 분석을 함에 있어서도 드러난 장애 유형에 맞춰지다 보니 자시의 문제를 드러내기 어려운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등 내부기관 장애인이 전혀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나 수단 등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언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좋아졌다. 장애인에 대한 왜곡기사가 거의 없고, 비하용어도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관습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용어를 기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언론인을 상대로 한 '장애인 바로 알리기 활동'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장애계의 과제이기도 한다.

■ 인용자료

[인용자료]

- 김철환, “2014년 용어 모니터링 분석”, 『2014년 모니터보고서』,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김철환, “2022년 용어 모니터링 분석”, 『2021년 모니터보고서』,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

[인용기사]

- “바비인형 몸매? 실재로 드물어” 다운증후군, 바비인형 나왔다(머니투데이, 2023.4.27.)
- “배제와 소외 너무 많아”, 장애여성 일자리, 3년새 더 열악해졌다(한겨레, 2023.4.20.)
- “왼쪽눈 실명에 모역까지”... 장애인 수행자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경향신문, 2023.4.20.)
- “입승 승객 많아서 못타요” 휠체어 막은 코레일, 경국 사과(아시아경제, 2023.4.20.)
- 장애인의 의무고용 안 지켜도 그만인 사회(한국일보, 2023. 4. 21)”
- 장애인이 서럽고 안 보이는 나라는 좋은 사회일 수 없다(경향신문, 2023. 4. 19)
- 저는 뇌병변장애인입니다. 말도 불편하고 어려워 세레 교육은...(국민일보, 2023.4.24.)

언론에 비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이 용 석

더인디고 편집장

I. 들어가는 말

우리 사회의 언론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관련한 이슈는 대체로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서의 장애극복 신화나 동정적 소재로 주로 활용하곤 한다. 이러한 현상은 주류적 언론이 주도하는 경향이 큰데, 그 대표적인 예가 4월 20일인 “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봇물처럼 쏟아지는 장애 관련 뉴스다. 주로 장애 극복 과정을 통해 인간 승리 신화를 과장된 표현으로 다루거나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당사자들의 부박한 삶을 동정적 관점에서 다뤄 독자층의 측은지심에 호소한다. 그래서 언론에 부각 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장애를 가졌음에도 비범한 능력을 발휘해 비장애인 사회에서 거뜬히 살아내거나, 장애라는 불행을 극복(?)하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뿐이다. 언론은 두 극단의 사례를 통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을 획일화하며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 아닌 특수한 계층이라는 점을 은연중에 부각시키는데, 이는 전형적인 비장애중심주의(에이블리즘)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신문은 가장 전형적이고 오래된 대표적인 미디어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종이활자 방식에서 PC나 모바일 등으로의 정보 전달체계의 전환은 활자로 뉴스를 전달해야 하는 고전적 전달 방식의 한계에 온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도 신문은 되레 속보 중심 뉴스 제공체계를 축진하여 심층 뉴스의 제작 보다는 신속한 뉴스 전달 방식에 효과적으로 적응해 왔다.

한 장의 사진과 자극적인 단 한 문장만으로 전달되는 뉴스·속보는 인터넷 환경에 적응된

새로운 수용자를 끌어들이며 여전히 친숙하고 일상적인 미디어로 신문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3월 9일 발표되었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장애인 정책이 ▲약자 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 등 세 가지의 국정철학을 근거로 규정되어 있다. 무엇보다 이번 제6차 장애인종합계획에는 약 31.3조원의 예산 추계와 함께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경제활동 △체육·관광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이동·편의·안전 △권익증진 △정책기반 등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 7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키워드로 한 언론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한데, 우선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근거해 교육·문화·경제활동·사회참여·안전관리·권익·복지증진 등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을 총망라해 범부처 합동으로 계획하고 이행해야 하는 국가 실천의 중요한 로드맵이다. 특히, 5년이라는 계획 실천 기간은 국가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임기와 같아 선거에서 강조되는 공약과 집권 이후 확정되는 국정과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II. 본론

1. 기사분석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개입으로 뉴스로서의 가치가 덧입혀져 새로운 사회적 쟁점으로 이슈화되었다. 이는 신문 등을 포함한 미디어의 역할이 컸다는 긍정적 결과를 인정할 수 있지만,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의뢰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언론의 반응과 태도는 이준석과 박경석의 이슈 이전으로 되돌아간 듯했다. 특히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정한 언론 모니터링 대상은 10개 종합일간지(경향신문·국민일보·동아일보·문화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한국일보)와 8개 경제지(서울경제·매일경제·한국경제·헤럴드경제·머니투데이·아

시아경제·아주경제·파이낸셜뉴스), 28개 지역지(빅카인즈 기준)에 2023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실렸던 제6차 장애인정책계획 관련 기사였다. 기사량은 예상과 달리 27건으로 매우 적었고, 같은 기간 ‘장애인’을 키워드로 검색해 확인한 9,837건의 약 0.27%에 불과했다.

이처럼 ‘장애인’과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검색 결과 차이는 ‘장애인 정책’이라는 낯선 이슈에 대한 언론 수용자의 소극적인 반응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서 비롯된 이준석과 박경석 논쟁으로 인한 ‘이슈 피로도’도 한몫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각 신문사 홈페이지 검색기능을 통해 재검색을 했고, [표 1]과 같이 39건의 기사를 찾아내 모니터링 대상 기사로 결정했다.

[표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관련 기사들

	날짜	신문명	기사 제목
1	3.9	경향신문	대통령 공약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장애인단체 “실효성 글썽”
2	3.9		4월부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개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주요 내용은
3	3.9		내달부터 발달장애인 최대 7일 ‘긴급돌봄’… 활동지원 대상 17만명까지 확대
4	3.9		대통령 공약 ‘장애인 개인예산제’ 내년부터 시범사업
5	3.13	국민일보	발달장애인 보호자, 급하고 지칠때 ‘긴급돌봄’…4월부터
6	3.3	동아일보	한 총리 “장애인 정책은 ‘약자복지’ 핵심…모든 영역서 권리 보장”
7	3.10	서울신문	‘사회적 장애’까지 개념 확장… 은둔형 외톨이 혜택받는다
8	3.9		임신부·골절환자, 장애인 주차장 이용 가능해지나… ‘장애’ 개념 확장한다
9	3.10	세계일보	전장연 “OECD 평균 예산 못 미치는 장애인 정책은 휴지조각”
10	3.9		4월부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11	3.9	조선일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운영…이동권 위해 ‘저상버스’ 의무화

12	3.22	한겨레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 위한 맞춤형 지원 [왜냐하면 칼럼 조규홍 복지부장관]
13	3.26		엄마 두고 주차하는 순간도 공포인데...치매는 장애가 아니라고요?
14	4.19	한국일보	장애인활동지원 10명 중 1명꼴 이용...그나마 "이용 시간 부족"
15	3.9		'장애인 개인예산제' 내년 첫발...활동급여 일부 필요한 곳에 사용
16	3.9	매일경제	늘어나는 은둔형 외톨이...장애인 지원받는다
17	3.9		히키코모리, 임산부도 장애인 서비스 받는다...정부, 장애 개념 확대
18	4.20	한국경제	한총리 "'장애인 개인예산제', 2026년부터 시행 준비"
19	3.13		4월부터 발달장애인 최장 일주일 '24시간 긴급돌봄' 시작
20	3.10		전장연 "OECD 평균예산 못미치는 장애인정책은 휴지조각"
21	3.9		장애인이 복지서비스 직접 고른다...최중증 장애인은 24시간 돌봄(종합)
22	3.9		한총리 "맞춤형 지원을 통한 평등한 삶 목표로 장애인 지원"
23	4.20	헤럴드경제	한덕수 "'장애인 개인예산제', 2026년부터 시행"
24	3.10		전장연, "장애인종합계획, OECD 평균 예산 못 미치는 휴지조각"
25	3.9		전장연,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탈시설 보장 없어...후퇴 정책"
26	3.9	아시아경제	"해외처럼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대상자·사용처 순차적으로 늘린다
27	4.19	아주경제	장애인 안전권 보장 위해 소방청, 체계적 안전교육 인프라 확대
28	3.9		한덕수 총리 "24시간 장애인 돌봄 체계 구축...일자리 확대할 것"
29	3.9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활동 지원 강화...5년간 31조 투입"
30	3.9	파이낸셜뉴스	장애인 개인예산제 내년 시작... 재활 등 서비스 직접 고른다
31	3.9		전장연 "장애인 예산 비중 OECD평균 이하"
32	3.9		尹정부, 내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운영(종합)
33	3.9		전장연, "한국 장애인 정책 지출 OECD평균 못 미쳐"
34	4.20	강원일보	尹대통령 "장애인이 공정한 기회 갖는 사회 위해 더 노력"
35	3.30	경인일보	[기고] 장애인 고용 확대, 기업 인식 개선과 당근책 필요
36	3.09	매일신문	한 총리 "맞춤형 지원, 장애인 평등한 삶 목표로 정책 추진"
37	3.9	부산일보	장애인 스스로 서비스 선택하는 '개인예산제' 첫 발
38	4.17		부산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곧 시동
39	4.20		한총리 "'장애인 개인예산제', 2026년부터 시행 준비"

가. 언론사별 보도량

[표 2] 언론사별 보도량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강원일보	경인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소계
4	1	1	2	2	1	2	2	2	5	3	1	3	4	1	1	1	3	39

전체적으로 기사량은 매우 적다. 경향신문을 포함한 10대 일간지가 15건의 기사를 게재했고, 헤럴드 경제 등 8개 경제지가 18건이다. 또한 28개 지역지는 부산일보가 3건으로 많았고, 강원일보, 경인일보가 각 1건씩을 내보냈는데, 그마저도 경인일보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촉구하는 외부 기고문이었다.

10대 일간지 중에서는 경향신문이 가장 많은 4건을 보도했고, 8대 경제지는 5건을 발행한 한국경제, 지역신문은 부산일보 3건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관련 기사를 냈다.

우선, 경향신문이 발행한 기사들의 특징은 4건 모두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발표되었던 다음날인 3월 9일 기사화했는데,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훑고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소개했다. 경향신문은 제6차 계획에 대한 장애계 평가를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의견을 달았다. 특히, [대통령 공약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장애인단체 “실효성 글썄”] 제하의 기사에서는 5년 동안 진행될 제6차 계획의 필요 예산 31조 3천 억원 추산과 개인예산제 도입 최종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 돌봄, 발달장애인 영유아지원 확대, 장애인 일자리 및 생활체육 참여 지원 등을 도표로 자세히 설명하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서비스의 총량을 늘리지 않고 기존 서비스의 칸막이를 열겠다는 건데, 당사자 입장에서선 오히려 총량에 갇히는 효과가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5건의 기사를 발행한 한국경제는 3월 9일과 4월 20일 두 건의 기사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입을 빌려 제6차 계획의 개괄과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시행할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전했다. 3월 9일은 정부가 제6차 계획을 발표한 날이고,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의성에 따른 기사 발행이었다.

지역지 중에서 가장 많은 3건의 부산일보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그리고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보도했는데, 발행 날짜는 제6차 계획이 발표된 3월 9일과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이다. 다른 신문들과는 달리 부산일보는 4월 17일 [부산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곧 시동]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고 부산시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리고, “부산시의 다양한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을 통해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누리고, 가족돌봄 부담도 함께 경감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부산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의 의견을 덧붙였다.

나. 이슈별 보도 행태

이번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장애계 등은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외에도 장애개념의 확대,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정책 예산 증액 등이 주요 관심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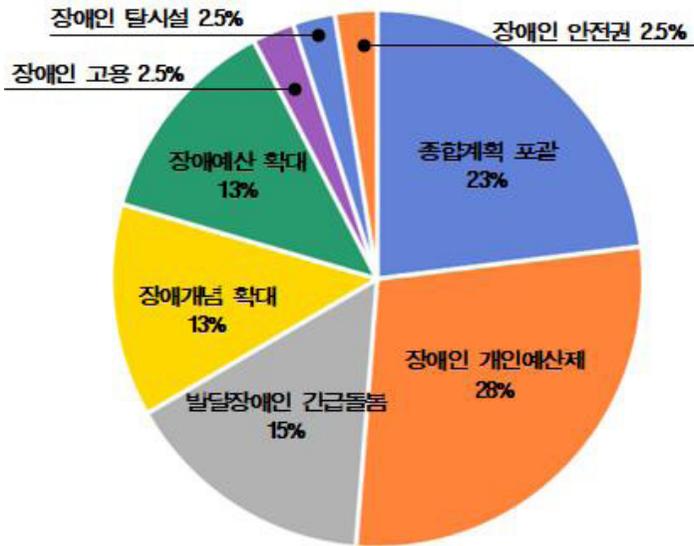
따라서 모니터링 대상 신문들이 다른 이슈별 보도 행태를 구분해 보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목적과 시행 방향성 등 전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다룬 기사가 9건인 반면에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장애인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이 5건이었다. 이외에 장애개념 확대가 5건, 장애인 예산 확대 5건이고, 장애인 고용, 탈시설, 안전과 관련한 기사가 각각 1건씩이었다.

[표 3]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관련 이슈별 기사

기사 주제	인론사	기사제목	건수
종합계획 포괄	경향신문	4월부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개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주요 내용은	9
	동아일보	한 총리 "장애인 정책은 '약자복지' 핵심 ...모든 영역서 권리 보장"	
	조선일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운영...이동권 위해 '저상버스' 의무화	
	한겨레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 위한 맞춤형 지원 [왜냐면 칼럼 조규홍 복지부장관]	
	한국일보	장애인활동지원 10명 중 1명꼴 이용... 그나마 "이용 시간 부족"	
	한국경제	장애인이 복지서비스 직접 고른다... 최중증 장애인은 24시간 돌봄	
		한총리 "맞춤형 지원을 통한 평등한 삶 목표로 장애인 지원"	
	강원일보	尹대통령 "장애인이 공정한 기회 갖는 사회 위해 더 노력"	
매일신문	한 총리 "맞춤형 지원, 장애인 평등한 삶 목표로 정책 추진"		
장애인 개인예산제	경향신문	대통령 공약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장애인단체 "실효성 글썄"	11
		대통령 공약 '장애인 개인예산제' 내년부터 시범사업	
	한국일보	'장애인 개인예산제' 내년 첫발... 활동급여 일부 필요한 곳에 사용	
	한국경제	한총리 "'장애인 개인예산제', 2026년부터 시행 준비"	
	헤럴드경제	한덕수 "'장애인 개인예산제', 2026년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해외처럼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대상자·사용처 순차적으로 늘린다	
	아주경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활동 지원 강화... 5년간 31조 투입"	
	파인넬셜뉴스	장애인 개인예산제 내년 시작... 재활 등 서비스 직접 고른다	
		尹정부, 내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운영(종합)	
	부산일보	장애인 스스로 서비스 선택하는 '개인예산제' 첫 발	
한총리 "'장애인 개인예산제', 2026년부터 시행 준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경향신문	내달부터 발달장애인 최대 7일 '긴급돌봄'... 활동지원 대상 17만명까지 확대	6
	국민일보	발달장애인 보호자, 급하고 지칠때 '긴급돌봄'...4월부터	
	세계일보	4월부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한국경제	4월부터 발달장애인 최장 일주일 '24시간 긴급돌봄' 시작	
	아주경제	한덕수 총리 "24시간 장애인 돌봄 체계 구축... 일자리 확대할 것"	
	부산일보	부산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곧 시동	
장애개념 확대	서울신문	엄마 두고 주차하는 순간도 공포인데... 치매는 장애가 아니라고요? 개념	5
		임신부·골절환자, 장애인 주차장 이용 가능해지나... '장애' 개념 확장한다	
	한겨레	'사회적 장애'까지 개념 확장... 은둔형 외톨이 혜택받는다	
	매일경제	늘어나는 은둔형 외톨이...장애인 지원받는다	
히키코모리, 임신부도 장애인 서비스 받는다... 정부, 장애 개념 확대			
장애인 예산 확대	세계일보	전장연 "OECD 평균 예산 못 미치는 장애인 정책은 휴지조각"	5
	한국경제	전장연 "OECD 평균예산 못미치는 장애인정책은 휴지조각"	
	헤럴드경제	전장연, "장애인종합계획, OECD 평균 예산 못 미치는 휴지조각"	
	파이낸셜뉴스	전장연 "장애인 예산 비중 OECD평균 이하"	
전장연, "한국 장애인 정책 지출 OECD평균 못 미쳐"			
장애인 고용	경인일보	[기고] 장애인 고용 확대, 기업 인식 개선과 당근책 필요	1
장애인 탈시설	헤럴드경제	전장연,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탈시설 보장 없어... 후퇴 정책"	1
장애인 안전	아주경제	장애인 안전권 보장 위해 소방청, 체계적 안전교육 인프라 확대	1

[그림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관련 기사 이슈별 분포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관련한 기사가 가장 많았던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장애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았고, 장애당사자가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하여 통제권을 갖는 제도적 특성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복지 제도에 대한 관심으로 분석된다. 다만, 윤정부가 시행하게 될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가장 큰 특징인 활동지원제도 재원의 활용이나 서비스 대상의 한정성 등 제도의 한계를 짚어내지는 못했다.

경향신문은 3월 9일자 [대통령 공약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장애인단체 “실효성 글썸”] 제하의 보도에서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표로 구성해 각 제도의 내용과 시행 기간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경우 장애당사자와 장애인단체 관계자의 의견을 통해 향후 활동지원제도와 연계성에 대한 우려와 서비스 총량의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는 점을 짚었다.

경향신문

대통령 공약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장애인단체 “실효성 글썄”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2023.03.09 15:30 입력 | 2023.03.09 16:09 수정



9일 오전 서울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전장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6건이 기사화되었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은 발달장애인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들이 벌어진 여파로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함께 윤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여서 주목도는 높았지만, 기사량은 많지 않아 의외였다.

세계일보는 같은 날 기사에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제도를 자세히 소개했다. [4월부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제하의 기사에서 세계일보는 “4월부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경조사나 입원, 신체·심리적 소진 등으로 돌봄이 어려울 경우 24시간 최대 일주일까지 장애인을 전담하는 긴급돌봄 서비스가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장애미등록(장애판정 이전) 아동 연령기준을 만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식 등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을 올해 7만9000명에서 2027년 10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했다.

세계일보

4월부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확정

하루 24시간 최대 일주일간
보호자 단기 부재시 이용 가능

스스로 필요 서비스 선택하는
'개인예산제' 2024년 시범사업

정부 2027년까지 31.3조 투입

입력 2023-03-09 16:08:11, 수정 2023-03-09 22:34:15

다음 달부터 보호자 부재 시 발달장애인에게 하루 24시간 최대 일주일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전국에서 실시된다. 내년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활동지원 급여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선택, 이용하는 개인예산제가 시범 도입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2027)'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비전으로 한 6차 종합계획은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 7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3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두 번째로 많이 기사화되었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종합적 내용이 담긴 기사들은 9건이 기사화되었다. 내용은 제6차 계획 발표 전날 보건복지부가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했던 보도자료를 정리해 소개하는 정도의 스트레이트형 기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주목할 만한 기사로는 조선비즈가 3월 9일 발행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운영... 이동권 위해 '저상버스' 의무화]를 꼽을 수 있다. 이 기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와 장애예술인 창작권 우선구매제도,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광역자치단체 간 이동, 장애인 편의 의무설치 대상을 50㎡ 미만 시설까지 확대 추진 등을 자세하게 보도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장애개념 확대 등 윤정부의 새로운 정책들도 세세하게 다루고 있다.

사회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운영...이동권 위해 '저상버스' 의무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
최중증 장애인은 24시간 돌봄

세종=손덕호 기자

입력 2023.03.09 16:00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선버스를 새롭게 마련할 때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다.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올해 상반기 도입된다. 의사소통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겐 내년 6월부터 24시간 통합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장애인이 활동지원 급여 일정 수준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내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획일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장애인이 스스로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Advertisement



많이 본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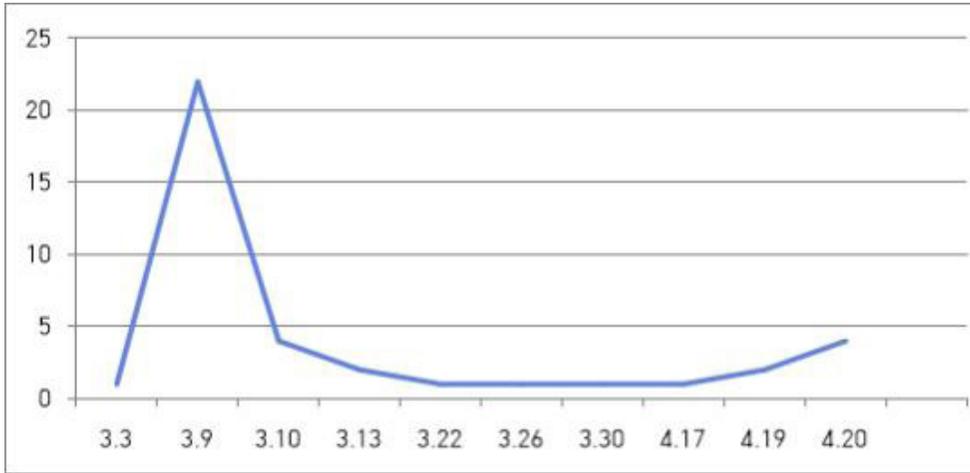
눈길을 끈 것은 장애개념 확대와 관련한 기사들이었는데, 모두 5건이 기사화되었다. 장애개념의 확대는 장애인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복지환경에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다. 현재의 15개 유형의 고착된 장애유형만이 장애로 인정받아 관련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 치매·운동형 외톨이·임산부 등도 장애인 서비스 대상이 된다는 제도적 변화는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기사들은 뚜렛증후군·기면증·틱장애 등 법적 장애유형에 포함되지 못한 소수장애유형에 대한 문제보다는 치매·운동형 외톨이·임산부 등 제6차 장애인종합계획 자료집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유형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주장을 근거로 한 장애인 예산 확대의 당위, 장애인 탈시설, 그리고 코로나19 창궐 기간과 지난해 물난리로 반지하 가구에 살던 장애인 가족의 죽음으로 사회적 주목도가 높았던 장애인 안전 문제도 기사화되었다.

다. 날짜별 보도

[표 4]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관련 날짜별

3.3	3.9	3.10	3.13	3.22	3.26	3.30	4.17	4.19	4.20	합계
1	22	4	2	1	1	1	1	2	4	39

[그림 2]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관련 기사 날짜별 분포도



이번 언론 모니터링의 기간, 즉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발표되었던 3월 8일을 기점으로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까지의 기간을 포괄적으로 설정해 2023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의 보도행태는 극단적이라 할 만큼 3월 9일 보도량이 많았다.

3월 9일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발표된 3월 8일 다음날이었던 때문이기도 했지만, 발표 당일 오후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3월 9일 보도해 줄 것을 당부했던 때문이기도 하다.

위 그래프에서도 확연하게 차이가 두드러질 만큼 3월 9일 보도량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관련 전체 보도량의 절반(56.4%)이 넘을 만큼 극단적으로 몰렸으며, 내용 또한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 이상을 넘지 못했다.

물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는 적다. 전체 국민의 약 5% 정도인 장애인구. 선별적 장애인 정책 구조상 서비스 대상에 주로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중요하고 관심 깊은 뉴스일 수 있으나, 그 외의 국민들은 큰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신문 등 미디어사업자 입장에서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역시 미디어 콘텐츠이며 상품일 수밖에 없다. 즉, 높은 조회율을 올릴 수 있는지 여부가 해당 정책 대상자인 장애인보다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3월 9일이라는 특정 날짜에 관련 뉴스들이 지나치게 몰리고 내용 또한 정부의 정책 안내문과 같은 비슷한 수준의 뉴스들만을 양산한다면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종사자 등 소위 뉴스 수용자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Ⅲ. 나가며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기사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신문 등 언론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문의 기능 즉, 국내외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기사화하여 제공하여 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보도 기능(to inform)은 이제 흥미있는 읽을 거리, 볼거리를 제공하는 오락 기능(to entertain)과 혼재되었고, 비판 기능(to interpretate, to criticize)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 혹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전하는 방식은 여전히 사건의 단면을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우라까지(언론계의 은어로 다른 매체의 기사나 보도자료를 적당히 배껴 기사화 하는 행위)해 내보내는 비율이 월등히 많았다. 이러한 관행은 미디어 수용자로서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관련 뉴스 소비층이 그 어느 계층보다 적기 때문인 듯하다. 다만, 예외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지난해 대통령 선거가 막 끝난 즈음 촉발되었던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와의 논쟁이다.

빅카인즈를 통해 2022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이준석과 박경석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무려 461건의 기사를 찾을 수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역에서의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이준석 전 대표가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한다고 공격하여 촉발되었던 두 사람의 논쟁은 주류 언론의 기사화가 본격적으로 격화되었다. 기왕에 있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이동권 투쟁 상황은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교통공사 등의 보도자료를 인용 보도했던 당시 주류 언론은 이준석 전 대표의 개입으로 본격적인 취재와 보도를 시작했다. 장애인 이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투쟁보다는 당시 대통령 선거 승리로 여당의 대표로 신분이 상승한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이 소위 잘 팔리는 뉴스의 소재거리가 된 셈이다. 이로써 지하철 이동권 투쟁은 서울지하철의 골칫거리에서 전국의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아는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시민권 투쟁이 되었고, 관련한 장애인 교통수단 이용 현황이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제도의 맹점들과 대안까지 낱알이 뉴스를 통해 알려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론의 기능에서 수용자로서 중요하게 짚어야 할 것은 획일화 기능(to uninform)과 마취기능(to narcotize) 같은 역기능이다. 획일화 기능은 여러 개의 신문이 하나의 사안을 두고 보도 논조나 방향에서 아무런 차별점을 갖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번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다루는 신문들의 보도행태인데, 신문 모두가 같은 입장과 논조를 기사화하여 다양한 장애인의 정책에 대한 의견들은 배제했다. 즉,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취재원으로 오직 사실(fact) 중심으로만이 보도했다. 이러한 언론의 획일화 행태는 제6차 정책에 대한 긍정적 측면만을 인식하게 하여 비장애인 독자들이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을 과대평가하게 하는 마취기능으로 복무한다. 즉 자기와는 상관없는 세상에서 장애인은 국가의 혜택을 받으며 편안하게 살아간다는 편견을 조장해 되레 장애인의 삶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다.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과 동반 개최되었던 패럴림픽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비로소 국가의 장애인 정책 환경의 단초를 마련했다. 이후 장애 당사자의 생존권 및 기본권 투쟁 등 소위 민권운동이 촉발되면서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법들이 제정되었고, 국가의 정책이 마련되었다. 언론 역시 기존의 장애를 가난이나 불행의 원인으로 취급하거나, 이른바 장애극복기 등을 과장된 표현으로 강조해 보도하는 행태에서 장애인도 사회의 일원임을 강조하고 장애인이 처한 현실에 대한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제도가 개선되도록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역할의 변화도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향후 5년 동안의 장애인 정책을 새로운 정부가 계획해 발표하는 과정이나 내용, 정책의 적절성, 정책 대상인 장애 당사자의 반응 등 언론이 톺아봐야 할 과제는 수없이 많았지만 유감스럽게도 모니터링 대상 언론은 정책 내용을 전하는데 지면을 할애했을 뿐이다.

국가의 복지정책 변화에 대한 정책 대상자들의 민감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은 공공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민간시장이 혼재된 수혜적 서비스 위주의 선별적 제도들이어서 대상을 누구로 어떻게 한정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따라서 언론이 장애인 정책을 다루는 방식도 국가가 장애인에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줄 것인가 하는 선별적 접근방법(selective approach)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물론 언론은 뉴스 소비자들의 이슈별 뉴스 수용도에 따라 기사량과 보도 행태는 편차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정확한 정보나 정책 분석 대신에 다소 과장된 수혜적 범위를 기사화하는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장애계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대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는 지나치게 소극적이었고, 장애인 정책에 대한 분석보다는 정부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전하는 역할에 그쳤다는 점을 비판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장애의 재해석 “신문사설을 통해 살펴본 장애인에 대한 미디어 담론 분석”
서희정 한국장애인재단(2013)
- 한국신문의 장애인관련보도 분석 김윤석 석사논문(2003)
- 미디어 어카운터빌리티와 수용자복지 연구 한국언론재단(2005)
- 2022 언론수용자 조사 한국언론재단(202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언론 보도 분석

김 헌 식

대구대학교 대학원 장애학과 외래교수

I. 서론

2020년 12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고, 이 개정법에 따라 정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세워야 했다. 2022년 9월, 역대 정부 최초라며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 9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는 “역대 첫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2022~2026)”이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 장애예술 관련 공모사업 규모·창작준비금 지원 확대로 더욱 많은 창작활동 기회 부여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5년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예술인지원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를 강조하며 “장애인·신진·청년 작가들의 전시 공간이 확장되고 전시 기회가 늘어나야 한다.”라고 지시하는 등 강한 정책 의지를 표해왔고, 이런 의지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기본계획에 담았다고 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개의 지원사업 유형이 있다. 첫째, 창작 지원 강화다. 구체적으로 창작 공모사업 확대와 준비금 지원 강화, 표준공연장 등 무장애 창작공간 확충, 예술시장진출 지원 등 활동 전주기 지원이다. 두 번째, 자립 지원 강화다. 구체적으로 공공영역 장애예술인 일자리 창출, 장애예술인의 민간기업 취업과 창업 지원이다. 세 번째, 정책 기반 강화로 장애인 예술교육 확대, 교육·기획·창제작·유통 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다.

한편 2023년 3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이하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된다며 문체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기본계획의 연계성을 언급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역대 정부 최초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고, “앞으로도 우선구매 제도와 같이 장애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정책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장애예술인의 창작을 지원하고 예술 활동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업은 분명 장애인 예술 활동에 대해서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많은 예술가와 단체들이 투쟁한 결과이다. 다만 이 정책안들이 진일보한 면들이 있다고 해도 한계점도 있으며 더 나은 대안의 모색이 필요한 점도 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에 관해 언론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보였다면 어떤 경향과 함의점을 가지는지 파악하는 것이 이 모니터 보고서의 목적이다.

이전에도 주요 일간 신문들은 장애 관련 소식을 잘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였다. 다룬다고 해도 단편적인 사실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인터넷 신문에서도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신문보다는 자세한 정보의 전달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면의 제한이 없는 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룬다고 해도 단순 사실의 전달에만 머문다. 아울러 정부의 태도를 충분히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고 만다. 더구나 정부가 독자적으로 처음 시도한 것이 아니라 관련 법 즉,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연한 후속 조치 의무 시행이라는 점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계량적인 자료 조사와 이의 양적인 분석이 이뤄질 수 있는 기초적인 보도량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사례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유형별로 정리하고자 한다.

II. 본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에 관하여 보도를 한 언론의 기사를 모니터를 시행한 결과 몇 가지 유형으로 묶을 수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1. 요약 정리형 2. 가치 의미 부여 유형 3. 대담 브리핑 유형, 4. 세부 정책안 정렬 분석, 5. 개인의 치적 유형, 6. 한계와 대안 전달 보도 유형 등이다. 이를 유형별로 사례들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요약 정리형

요약 정리형은 단순한 사실만 전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사실과 의미를 같이 포함하는 보도 유형이다. 정부 정책의 의도를 전하면서 나름의 의미 부여를 한다. 다만, 그것이 이미 있는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하는 것인데, 이 속에서 다른 보도에서 찾을 수 없는 진실도 들어있을 수 있다. 물론 그것에만 그치면 곤란했다.

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8일 역대 정부 최초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을 확정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기본계획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¹⁾

이 보도 유형에서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 근 미래에 즉 5년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다고 전한다. 이러한 논조는 사실 정부의 태도와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독자들은 정부의 관점과 입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보도 유형에서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정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전달하는 것과는 차별화된다. 관련 입법에 따른 정책 시행 결과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보도에서 보면 이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

2. 문체부(박장관)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기조에 따라 장애예술인 창작과 발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도입,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서울 충정로)’ 마련 등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정 과제 장애 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²⁾

이 보도 사례에서는 문체부와 박보균 장관의 입장과 견해를 섞어서 요약 정리하고 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도입,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서울 충정로)’ 마련이 이뤄졌다고 언급한다.

1) 역대 첫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웰페어뉴스>, 2022.09.08.

2) [‘장애인의 날’] 문체부, 다양한 장애인 예술 행사 마련, <문화저널 21>, 2023. 04. 20.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나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서울 충정로)'의 조성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적 시행의 결과물이라고 요약 정리하며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언론사의 가치 부여가 아니라 정부의 태도와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약자 프렌들리 기조차원에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도입,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서울 충정로) 개소가 이뤄진 것으로 전달한다. 더구나 약자 프렌들리 기조는 장애인의 관점이나 동의가 아니라 강자, 비장애인 그리고 정부 관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약자를 친구로 삼는 정책은 장애인의 사회적 정책 지위의 개념과 거리가 있음도 생각해야 했다.

2. 가치 의미 부여 유형

가치 의미 부여 유형은 특정한 가치나 의미를 같이 곁들이는 보도라서 단순한 스트레이트 보도와 다르긴 하다. 그러나 이는 긍정 편향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언론보도 유형을 보면 “문체부는 지난해 9월 역대 정부 최초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³⁾라고 한 경우가 있다. 사실 이는 문체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작성한 보도인데, 이를 문체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인 것으로 전한다. 원래는 다음과 같은 보도 문장이다.

3.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역대 정부 최초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우선 구매 제도와 같이 장애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정책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장애예술인의 창작을 지원하고 예술 활동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⁴⁾

‘효율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지원 체계’라는 말은 이미 정책평가를 끝낸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무엇보다 효율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효율성은 투입한 시간, 에너지, 재료, 비용 등에 비해 산출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개념이다. 보통 효율성을 생산성과 같은 의미로 본다. 투입 대비 산출의 정량적 비율을 의미하는 개념은 능률성이라고 하는 사례가 잦다. 효과성과

3)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 시행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대상, “장애 예술 활성화 기대”, 〈에이블 뉴스〉, 2023.03.28.

4)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제 오늘부터 시행, 〈머니투데이〉, 2023.03.28.

혼용하는 때도 있는데, 효율성은 생산성에서 효과성을 배제하는 개념이다. 효과성은 그 영향이 다른 결과나 이외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평가에는 효율성만이 아니라 분배성, 형평성, 객관성, 접근성 등 다양한 기준과 원칙들이 있다. 다음 보도에서는 ‘필수’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4. 7,000여 명에 이르는 장애예술인과 220여 개 장애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예술 전반의 다양성 확보와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⁵⁾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 시행에 대해서 필수로 도입되고, 집행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필수는 장애예술인과 장애예술단체에 대한 다양성 확보와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반드시 도입 실행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양성은 무엇이고, 생태계 확장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과 설명은 없다. 장애예술인과 220여 개 장애예술단체들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미술작품을 창작하고 이를 원하는 구매자들에게 더 널리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공공영역에서 민간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다.

3. 대담 브리핑 유형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신문은 자체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거나 오디오 뉴스 보도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방송콘텐츠는 그 내용을 텍스트로 만들어 인터넷에 공유하고 있다. 이때 대담 브리핑 유형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5. 진행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역대 정부 최초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죠.

답변: 그렇습니다.

장애예술인분들께 추석 선물을 드리는 것처럼 추석 연휴 바로 전날인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역대 정부 최초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장애예술인 지원〉에 강한 정책 의지를 표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실천 첫걸음으로 청와대 ‘장애예술인 특별전’으로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기대를 부풀렸고요.

5) 김지영 미술전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 시행, 〈한국미술신문〉, 2023.03.28

이어서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창작 활동 기회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이 담긴 청사진까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의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⁶⁾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 역대 정부 최초로 시행되었다는 평가를 진행자가 질문에 포함하고 있다. 질문을 받은 대담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 장애인에게 '추석 선물'이라는 표현을 더하고 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 <장애예술인 지원>에 강한 정책 의지를 표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실천 첫걸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청와대 '장애예술인 특별전'으로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기대를 부풀렸고요."라는 표현이다. 장애인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청와대 장애예술인 특별전과 연계되어 있고 그것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 일관되게 맥락이 닿아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기대를 부풀렸다.'라는 표현은 심리적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주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기대를 부풀었다는 것은 반대로 그렇지 않은 점도 지적해야 함을 배태한다. 윤석열 정부의 장애예술인 지원에 강한 의지로 청와대 '장애예술인 특별전'을 열어 장애예술인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것인데, 일련의 사업과 시행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연관성을 브리핑하면서 가치 평가를 하고 있다. 정책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설명도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6. 진행자 질문: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단체의 의견도 반영된 건가요?

답변 :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문체부는 장애예술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분과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장애예술인 및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들을 들었던 것입니다.

결과물로, 이번 문체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에서는 장애예술인이 정당하게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비전으로 제시했고요. 그러면서 총 5개 추진 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담았습니다.⁷⁾

7. 문체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장애예술인과 전문가 등이

6) [오디오뉴스] 장애예술인 지원 크게 늘린다, <에이블뉴스>, 2022.09.22.

7) [오디오뉴스] 장애예술인 지원 크게 늘린다, <에이블뉴스>, 2022.09.22

참여하는 민관 합동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지자체 등과의 협의, 온라인 공청회를 통한 장애예술인과 전문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

그 결과,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장애예술인이 정당하게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총 5개 추진 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담았다.⁸⁾

이러한 보도 내용을 보면, 장애예술인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공청회를 열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정당하게 존중받고 행복한 세상’이라는 표현은 장애예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아니라 정부 측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애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면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청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소 완화된 시점에서 온라인 공청회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과연 장애예술인들의 요구와 견해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은 찾을 수 없다.

4. 세부 정책 정렬 유형

세부 정책 정렬 유형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고 이를 정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도 하위 정책들이 꽤 되었지만 대개 언론 보도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원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특히, 지면이 제한된 주요 일간 신문들은 더욱이 이런 반복적인 보도 양태가 확인된다. 인터넷 신문도 제한이 없어 비교적 다룰 수 있다지만 여전히 제한이 있다. 그럼에도 좀 더 상세한 정책 설명이 있는 사례가 있다.

8. 문체부가 확정 발표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 계획’>에 담긴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선, 장애예술인에게 더욱 많은 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까지 공모사업 지원 금액을 연 200억 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것인데요. 올해 지원 규모가 67억 원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창작준비금 지원 인원은 연 2,0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창작활동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을 비롯한 전시 공간과 무장애 창작공간, 맞춤형 거주 공간, 맞춤형 작업공간 등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유사한 사례로 1974년 미국 오클랜드에 설립된 <크리에이티브 그로스 아트 센터>가 모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센터는 장애인 예술가들을 육성해서

8) 역대 첫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웰페어뉴스>, 2022.09.08.

전시하고 홍보·판매까지 지원하는 공간으로 장애 분야에서는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창작활동 공간을 확충해서 장애예술인이 활발하게 예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복안이기도 합니다.⁹⁾

크게 두 가지 정책 사안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원 예산 규모이고 다른 하나는 공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예산 지원액을 다룬 부분을 보면, “올해 지원 규모가 67억 원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작년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작년 예산과 올 예산을 비교해야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주관적인 평가가 되며, 특히 ‘상당히’라는 표현은 정부 정책 발표보다 더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공간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는 데 장애예술인들의 창작공간에 대한 시책을 언급하며 크리에이티브 그로스 아트 센터를 거론하고 있다. “장애 분야에서는 아주 유명한 곳이죠.”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은 정부의 보도자료에 전재(全載)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유사한 사례로 1974년 미국 오클랜드에 설립된 ‘크리에이티브 그로스 아트 센터(Creative Growth Art Center)’는 장애인 예술가들을 육성해 전시·홍보·판매까지 지원하는 공간으로, 댄 밀러(Dan Miller), 주디스 스콧(Judith Scott) 등 유명 장애예술가를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2017년 57회 베니스 비엔날레에 댄 밀러, 주디스 스콧 작가의 작품 초청되어 전시.)

여기에서 ‘유명하다.’는 평가에는 판단 기준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유명 장애예술가를 배출했기 때문에 유명한 크리에이티브 그로스 아트 센터(Creative Growth Art Center)’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많은 장애 예술가가 얼마나 활동할 수 있는지가 정책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점이 간과된 점이 있다. 자칫 이러한 공간의 운영이 스타 장애예술인의 배출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운영 방식과 성과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 될 것이다.

10. 한국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표준 공연장이 가을 개관을 앞두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공연장은 장애예술인에게 더욱 많은 창작과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기

9) [오디오투스] 장애예술인 지원 크게 늘린다, <에이블뉴스>. 2022.09.22.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국내 첫 장애인 공연장인 이곳은 연습, 창작공간, 전문교육 지원 등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전용 공간이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표준 공연장은 현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약자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으로 신설됐다.¹⁰⁾

특히 <동아일보>는 표준공연장의 개관에 대해서 매우 주목하는 보도를 했다. <동아일보>는 관련 보도를 통해 “한국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표준공연장, 정부, ‘약자 프렌들리 정책’ 일환 추진”이라고 언급하였다. 표준공연장과 표준전시장은 창작자, 공연자, 관객 등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한다. 표준공연장과 표준전시장 조성은 2022년 7월,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장애예술인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 2022년 9월에 발표되었다. 다만, 장애인 전공 표준공연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만 추진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11. Q. 2022년까지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을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장 건립 추진 방향과 혹시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변 :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 건립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입니다. 현재 문체부는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장애예술인 공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의 구성이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장애예술인과 전문가 등 현장과 충분히 논의해 정할 계획입니다.

새로 짓는 공연장은 장애예술인만을 위한 공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연장이 되고, 장애예술인들의 접근성이 확보된 무장애 공연장의 표준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공연장을 새로 짓거나 기존 공연장을 개선할 때 표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걸림돌은 없지만, 향후 추진 과정에서 현업 장애예술인과 관련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¹¹⁾

이 보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표준 공간의 마련은 서대문구 충정로 구세군빌딩 아트홀과 2~3층에 마련되는 계획이었다.¹²⁾ 이러한 공간의 설치에 바람직하다는 점을

10) 국내 첫 장애인 전용 공연장 다음 달 개관, <동아일보>, 2023.08.30

11)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 2022년 개관 목표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중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이용,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돼야,

12) 박보균 문체부 장관, 장애예술인 간담회, 충정로에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어울림 환경 조성”, <연합 뉴스>, 2022.07.05.

부정할 수 없다. 다만, 크리에이티브 그로스 아트 센터(Creative Growth Art Center)는 별도의 공간을 신축하여 건립한 공간이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별도로 전용 공연장을 건립하는 계획이 무엇보다 지적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향후에 제대로 목표 달성될 수 있는 것인지를 짚어야 했다.

5. 개인의 치적 유형

개인의 업적 중심으로 보도하는 유형이 있는데 이러한 보도 유형은 정부 정책 기조나 전체적인 흐름은 물론이고 특히 오랜 장애예술계의 여러 노력의 성과라는 관점과 매우 떨어져 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 ‘청와대에서 열린 첫 번째 장애인 예술 공연’ 윤석열 정부 기조 ‘약자 프렌들리’ 맞춰 다양한 정책 마련”이라는 보도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¹³⁾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에 대해서 장관 개인의 치적으로 보도하는 때도 있었다.

*12. 박보균 장관 부임 후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장애인 관련 정책이다. 2022년 9월 역대 최초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하는 등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의 확산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사, 올해 1월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에 장애예술인을 최초로 위촉했다.*¹⁴⁾

장관 부임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장애(인) 관련 정책인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라며 이를 장관의 업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셈이다. 일련의 정책에 아울러 인사정책을 같이 묶어 평가하고 있다. 인사정책은 임명권자인 장관의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 장관 개인의 부임 이후 치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 상황에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다. 이는 맥락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정부 프렌들리 언론의 태도라고 볼 수도 있다.

13) [박보균 문체부 장관 1년]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꿈꾸는 'K-콘텐츠', 청와대 활용은 '과제', <아주경제>, 2023.05.10.

14) [박보균 문체부 장관 1년]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꿈꾸는 'K-콘텐츠', 청와대 활용은 '과제', <아주경제>, 2023.05.10.

아울러 여러 언론은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차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장관 개인의 성과인 것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13. 박 장관이 강조하는 부분 중 '장애인 프렌들리'와 '미래세대 중심'도 빼놓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문체부도 '약자'도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을 추구한다. 한편으로 장애예술인의 창작 지원을 위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도 적극적으로 나섰다.¹⁵⁾

이 보도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을 부각하고 약자를 장애인으로 등치 시키며, 당당하게 문화생활을 추구할 수 있다는 맥락 안에 있다. 엄밀하게 보면 '문화생활'이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라는 적절하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프렌들리 정책은 장애인을 친구로 삼겠다는 것인데, 이는 '장애우'라는 단어가 장애인에게 동의받지 않는 현실을 간과한 장애인 중심의 세계관이 담겨 있다는 점을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우선구매 제도 시행은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¹⁶⁾”라고까지 평가했다. 장애인의 창작물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는 것이 장애예술인들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지 헤아려 봐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장애예술인들의 작품을 얼마나 구매할 수 있는지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실질적인 정책이 되려면 민간 부문에서도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제도의 의미가 분명하게 있지만, 그 한계와 앞으로 개선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는 보도 경향이 있었다. 장관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적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보도 태도이다.

14. 장애예술인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 기본계획이 처음 수립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장애예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다. 문체부 측은 “윤석열

15) '두문자 K' 전도사 박보균, '청와대' 말고 '장애인·MZ 프렌들리' [尹정부 1년, 박보균 장관의 365일]② 정책 키워드로 살펴보니, <머니투데이>, 2023.05.06.

16) 충청로에 장애예술인 공연장 올가을 개관... 윤석열 정부 '약자 프렌들리' 정책 가속도 장애예술인 지원, 약자 프렌들리 정책확산 지속<동아일보>, 2023.08.29.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자 장애예술인에 대한 관심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19일까지 열리는 청와대 첫 미술 전시인 장애예술인 특별전도 그 일환이다.¹⁷⁾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서 이뤄진 점을 부각하고 있는 보도 사례이다. 아울러 청와대 장애예술인 특별전과 아울러 같이 묶고 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 관련 법의 개정에 따라 정부 부처가 해야 할 당위적인 의무인 정책 사안과 전시회라는 이벤트 행사를 같이 놓고 의미 부여하는 보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의 적절한 보도 사례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

15.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먼저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오는 3월 28일부터 마련한다. 이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 27일에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¹⁸⁾

이 보도 사례에서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밝히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 구매 제도는 장관이나 대통령 개인의 관심이나 의지가 아니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또한, 이 보도 사례서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행정부처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한 행정 혹은 정책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입법 활동은 단순히 국회의 역할 뿐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장애인과 관련 단체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를 일부 정부 부처나 개인의 치적이나 성과로 평가하는 데 그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다른 보도 사례에서는 관련 법 개정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을 밝혀 주면서 정책 과제들을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17) 연소득 800만원... 장애예술인 위한 첫 정부 기본계획 수립, <조선일보>, 2022.09.09.

18) 계묘년 바뀌는 문화혜택은...문화재관람료 감면·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등, <뉴스1>, 2023.01.23.

16. 정부는 2020년에 제정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들은 흔들림 없이 지속해서 수행되고 있다.¹⁹⁾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행정부처나 정책수립자 수장(장관, 대통령 등)이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표현하고 있다. 다만, '흔들림이 없다.'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주관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다. 한편 "7,000여 명에 이르는 장애예술인과 220여 개 장애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예술 전반의 다양성 확보와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20)"라고 하는데 장애예술인들 7,000여명이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장애예술인들은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같은 보도가 이뤄져야 보도 균형감이 적절할 수 있었다.

6. 한계와 대안 전달 보도 유형

특정한 정책이 시행되면 이를 그대로 보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관련 전문가나 정책 당사자들의 반응이나 여론을 전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로 중요하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17. 안태호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확대됐지만 '약자 복지' 개념만으로는 돌파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장애인의 예술 활동에 대해 개인의 자발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 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며 "예를 들어 최근 장애인 탈시설 문제라든가 이동권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²¹⁾

관련 문화예술 토론회를 보도하는 유형인데, 장애예술인을 약자를 위한 복지 프레임에 가두는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보도에서는 또한 "윤석열 정부 예술 정책,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단순한 금액 지원을 넘어 교통지원 정책 설계 등 고려해야"이라는 점을 부제목으로 강조했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율적 창작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19) 충청로에 장애예술인 공연장 올가을 개관... 윤석열 정부 '약자 프렌들리' 정책 가속도 장애예술인 지원, 약자 프렌들리 정책확산 지속, <동아일보>, 2023.08.29.

20)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 시행. <디스커버리뉴스>, 2023.03.28.

21)尹정부 '장애예술인' 지원? '이동권 연계한 참여 높여야'[토론회] 한국문화예술위 '새정부 문화예술 정책 과제와 전망', <미디어 오늘> 2022.12.08.

이동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창작활동은 여전히 위축되거나 확장성을 가질 수 없다. 단순히 창작공간이나 무대 공연장을 마련한다고 하여 장애인이 그곳에 항상 거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장애인 예술가들의 삶의 공간과 창작공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반영하는 보도 유형이다. 언론매체가 독자적으로 한다면 좋겠지만 관련 단체의 의견과 주장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18. 공모사업 규모와 창작준비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장애예술인들은 60여 개에 달하는 과제만 늘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가 최근 '한국 장애예술인 욕구 기반 기본계획 실천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애예술인 16명을 집단 심층면접(FGI)한 결과 이들의 욕구가 생생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PPL, 즉 간접광고에서 장애예술인 작품이나 공연을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장애예술인들은 공공 쿼터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귀희 /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

“모든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에게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건데, 예를 들어 출판 2%, 전시회 2%, 공연 2%, 방송에 2%를 장애예술인들이 참여해 주도록 공공 쿼터를 달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제11조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장애인예술 전문 에이전시에서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공연장 편의시설 및 편익 서비스 확대 요구도 나왔습니다. 이밖에 대관료 할인 제도 도입, 장애인예술 정보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등이 제기됐습니다.²²⁾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정책안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장애예술인들이 원하는 바를 직접 조사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사례를 보도하고 있다. 두 가지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간접광고를 통해 후원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는 민간 부문에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지적하고 있는 보도 사례다. 다음으로 공공 쿼터제도인데, 이는 각 분야에서 일정한 비율을 장애 예술가에게

22) 장애예술인 작품·공연, PPL 사용길 열릴까? <카톨릭평화신문>, 2023.02.08.

사이트 : <https://news.cpbc.co.kr/article/840529>

할당하는 제도로 공공 정책 영역은 물론이고, 민간 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장애예술인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에이전시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보도 사례는 다음과 같은데, 이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의 한계를 지적하고 보완과 개선점을 담은 정책 보고서 발간 소식을 소개하는 보도이다.

19.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변곡점 위에 선 ‘장애예술’ 활성화, 미래를 디자인하라”라는 제목의 장애인 정책 리포트(제424호)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리포트는 장애예술인의 실태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기본계획을 통해 현 시점에서 가야 할 방향성을 다뤘다. 한국장총은 현 시점에서 장애예술 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꼽았다. 장애예술 전담 부서 설치와 전담 인력 확충, 맞춤형 예술 활동 지원, 장애 유형별 고유한 인식 체계 인정 및 지원정책 필요 등이다.²³⁾

정책 사안이 발표가 되면 이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토론회나 좌담회가 있고, 다른 하나는 관련해서 관련 당사자들의 반응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정한 요구와 대안을 주장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발간물 형태로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간물 형태는 좀 더 체계적이고 폭넓게 집약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이러한 유형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전하는 보고서 형태가 되며 학술적인 성격과 다른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언론매체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논점을 통해 장애예술인 당사자가 관련 전문가들을 취재해 심층 보도를 하는 사례가 없어 아쉬웠다. 이것이 장애예술의 현실이라는 점을 언론매체의 보도 양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다.

III. 결론

언론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뿐만 아니라 때로는 대안도 제기하는 활동을 그 기본 정체성으로 삼는다. 이것이 언론을 제4부라고 일컫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언론은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관점을 통해 해석하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가운데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대안을 모색하기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있을 때가 빈번한 언론의 현실이다.

23) 변곡점 위 ‘장애예술 활성화’, 앞으로 갈 방향은? <에이블 뉴스>, 2022.11.04.

장애인에 관한 보도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에 관한 정책이 잘 다뤄지지 않고 다뤄진다 해도 단순히 단편적으로 다뤄지거나 그대로 전하는 수준에 머문다. 장애인 예술에 관한 언론 보도는 더욱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 예술 정책에 관한 내용이 많지 않을뿐더러 관심을 끌기도 쉽지 않다. 이런 때문인지 장애인 예술 정책에 관한 보도는 지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있어도 단편적인 보도 즉 스트레이트 기사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때로는 정부 부처의 입장이나 정부의 견해, 관점을 그대로 전달하거나 그러한 방향에서 의미 부여하는 경향이 눈에 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과 일련의 관련 정책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절대적으로 보도량이 적었고 주요 언론은 더욱 언급할 정도가 아니었다. 다뤄도 정부 부처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의 보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관성이 없는 사업들은 독자적인 정부 부처나 대통령의 치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관련 법에 따른 정책 시행의 의무적 행동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것은 아무도 독자적인 취재력을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장애예술인의 관점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언론은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의 한계와 보완할 점을 어떻게 2차에서 반영할 것인지 모색을 해주어야 한다. 장애인 언론조차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자체가 대단한 것으로 다루는데 집중했다. 다만 몇몇 매체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의 한계점 외에 보완되어야 하는 점을 관련 단체의 조사와 주장 등을 통해 대신 전달해주는 보도를 했다. 이것도 아쉬운 점이 있어서 언론매체가 독자적인 기획력으로 취재 보도하고 장애예술인 정책에 관한 아젠다 세팅을 이루는 대안 추구형 보도가 있어야 했다. 무엇보다 이 정책을 위해 많은 장애예술인과 단체들이 투쟁한 결과라는 점을 부각하지 않았다. 심지어 장애인계에서 이러한 점이 언급되는 것조차 전달하지 않았다.



부 록

1. 장애인먼저실천운동 소개
2. 장애인먼저실천 100대 에티켓
3. 장애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

1. 장애인먼저실천운동 소개

○ 장애인먼저실천운동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함께 나눔 운동'으로,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는 장애인을 먼저 배려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시민사회운동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21세기 선진복지공동체를 가꾸어 가자는 취지로 1996년 4월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로 출범하여 다양한 실천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2003년 12월부터는 사단법인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연혁

- 1996. 3. 1대 홍두표 상임대표(前KBS사장) 취임
- 1996. 4. '장애인의 날' 장애인먼저실천운동 선포
- 1996. 4.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 출범
- 1996. 6. 각 시·도 협의회 설립 완료
- 1998. 11. 2대 이수성 상임대표(前국무총리) 취임
- 2003. 12. 사단법인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설립
- 2003. 12. 이수성 이사장(前국무총리) 취임
- 2004. 8. 사단법인 장애인먼저실천 전남운동본부 설립
- 2005. 5. 사단법인 장애인먼저실천 대구, 부산, 대전운동본부 설립
- 2009. 3. 사단법인 장애인먼저실천 광주운동본부 설립

○ 사업 내용

인식개선센터운영

교육기관·장애인관련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보급하여 긍정적인 장애인식 형성

▷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1999~)

매년 4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와 관련된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여 학령기 때부터 올바른 장애인식을 심어 주고 장애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문화 형성

▷ 유아를 위한 장애인식개선 콘텐츠(2018~)

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장애이해교육 자료를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한 후 보급하여 장애이해교육과 함께 또래 친구들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

▷ 초등학생을 위한 ‘대한민국 1교시’(2005~)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장애이해교육 방송을 제작하고 현장에서의 활용도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교수-학습 지도자료를 함께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통합교육에 기여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통합 기반 마련

▷ 청소년을 위한 교육 영상물(2008~)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의 올바른 장애이해를 위하여 장애인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식개선 영상물을 제작하여 “장애인의 날” 방송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배포

▷ 교육과정연계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 공모전(2023~)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재직 교사 대상 교육과정 연계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한 우수사례 선정과 사례집 배포로 교육현장의 장애이해수업 내실화와 학생들의 장애인식개선 함양을 도모

사회통합지원사업

언론 및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에 대한 올바른 용어를 발굴·보급하고, 장애인먼저실천운동과 인식개선에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성공적인 사회통합 환경 조성에 기여

▷ 모니터 사업(1997~)

대중매체 모니터를 통한 장애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올바른 용어를 발굴·보급하고 장애관련 이슈에 대해 신속하게 모니터하고 분석하여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과 용어 순화 캠페인 지속적 실시

- 장애관련 기획모니터
-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발표
- 올해의 좋은 방송 선정·발표
- 올해의 좋은 유튜브 선정·발표
- 장애 차별용어 모니터와 용어 개선
- 모니터 보고서 제작·배포

▷ 장애인먼저실천캠페인(2000~)

탤런트 정선경, VJ 김형규, '용하다 용해' 만화작가 강주배, 앵커 오수현, 탤런트 백승도, 아나운서 장웅을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전국민에게 장애인식개선에 관한 파급효과 극대화

▷ 장애인먼저실천상 시상식(1996~)

장애인식개선과 권익증진에 앞장 선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장애인먼저실천운동을 확산시키고 긍정적인 우수사례를 널리 알려 사회통합에 기여

▷ 기업 및 사회단체 연계 캠페인(1996~)

장애인식개선과 역량강화에 관심있는 기업 및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생활 및 역량강화

장애인역량강화사업

장애인의 음악 재능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사회 진출의 기회 확대

▷ ‘뽕꼬 아 뽕꼬’ 캠프(2009~)

음악에 재능이 있는 장애학생과 음악멘토와 각 분야 음악 교수진이 참여하여 장애학생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예비 음악가로 진출하는데 음악 경험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

▷ ‘뽕꼬 아 뽕꼬’ 음악회(2010~)

‘뽕꼬 아 뽕꼬’ 캠프에 참가했던 장애학생과 비장애인이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음악회를 개최하고 이를 지상파 및 케이블 채널 또는 라디오로 송출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역량강화와 비장애인의 장애인식개선의 장 마련

▷ 비바챔버앙상블(2015~)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연주의 기회를 제공하여 음악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청소년 우수작품 초청전(2022~)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술 우수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미술 능력을 향상하고, 전문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2. 장애인먼저실천 100대 에티켓

ver. 2019년 3차 개정

기본적인 에티켓

1.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가집니다.
2. 장애인도 다양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3. 자기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4. '장애를 앓다'가 아닌 '장애를 갖다'가 바른 표현입니다.
5. 주춤하거나, 힐끗거리며 바라보지 않습니다.
6. 동정 어린 격려나 호기심 어린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7.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8. 무조건 칭찬하는 것도 편견일 수 있습니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봐야합니다.
9. 장애인에 관련된 용어는 정확하게 사용합니다.
10.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입니다.
11.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 유형을 15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2. 장애는 유형마다, 개인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13. 장애를 갖게 된 경위는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다.
14. 비하 발언은 무의식중에 나오므로 항상 주의합니다.
15. 장애 상태를 부각하는 농담은 장애 비하로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16. 무조건적 도움보다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며,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하고 먼저 물어봅니다.
17. 부모가 장애인이라고 그 자녀도 장애인일 것이라는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18. 장애인이 있는 가족은 장애인이 없는 가족과 다를 것이라는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19. 미(美)에 관심을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20. 성적인 농담을 하지 않습니다.
21. 도와줄 때 신체적 접촉은 줄이고 피치 못할 신체적 접촉 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22. 출산과 육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23. 행사 진행 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합니다.
24. 자원 활동을 할 때는 기본적인 에티켓을 숙지하고, 지시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5. 고용주는 모든 직원에게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해야 합니다.
26. 음식점에 갈 때는 출입구, 화장실 등의 이동 동선과 좌석 배치를 생각하여 선택합니다.
27. 무인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있으면, '제가 도와 드려도 될까요?'라며 물어봅니다.
28. 건물의 현관문(회전문, 여닫이문)을 이용할 때는 주변을 살피고 장애인이 있다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잡아줍니다.
29. 지하철, 저상버스의 휠체어 전용공간은 비워둡니다.
30. 휠체어 사용자가 저상버스 이용 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재촉하지 않고 여유 있게 기다립니다.
31. 승강기 사용 시 휠체어 사용자에게 먼저 양보하며 타고 내리는 동안 열림 버튼을 눌러 안전한 이용을 돕습니다.
32. 휠체어 사용자와 대화를 나눌 때는 눈높이를 맞춥니다.
33. 휠체어 사용자와 함께 근무할 때는 적절한 근무환경을 조성합니다.
34. 길거리에서 휠체어 사용자나 목발(클러치) 사용자를 만나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줍니다.
35.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보행자는 함께 속도를 맞춰 건너고,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차량은 정차합니다.

- 36.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한 대피가 어려우므로 현장에 장애인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37. 복지시책이나 시설이용 등 장애인 생활 전반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차별상담전화 1577-1330,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전화 1577-5364, 장애인 학대신고 및 피해자 지원 상담 1644-8295에 문의합니다.

편의시설

- 38.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 내 편의시설을 잘 안내되어 있어야 합니다.
- 39. 장애인의 참여를 위한 의사소통 편의는 어디서든 필수적으로 제공합니다.
- 40. 장애인용 화장실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잠가두지 않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41.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을 경우 비우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합니다.
- 42. 경사로나 보행공간에 물건을 놓으면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보행공간을 확보합니다.

보조기구

- 43.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보조기구는 신체와 같습니다. 목발(클러치)이나 흰 지팡이를 가져가서 다른 곳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 44.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쉽게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떨어져 있지 않도록 합니다.
- 45. 전동휠체어 뒤에 매달리거나, 사용자 위에 올라타서 함께 운행하지 않습니다.
- 46. 휠체어를 말없이 붙잡거나 기대지 말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휠체어를 밀지 않습니다.
- 47.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함께 걸을 때는 보폭을 맞춥니다.

장애유형별

- 48. 청각장애인은 듣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으로 시각적(표정, 동작 등)으로 정보를 파악하기 때문에 비언어적 표현에 유의합니다.
- 49. 구화가 가능한 청각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얼굴과 눈을 바라보며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여 경청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말하는 것이 힘들어보여도 끝까지 듣고 내용을 함부로 추측하지 않습니다.
- 50. 구화가 가능한 청각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마주보고 약간 느린 속도로 입모양을 또박또박 말하며 짧은 문장을 사용합니다. 어려울 경우에는 필담으로 대화합니다.
- 51. 청각장애인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속삭이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 52. 청각장애인이 대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필담으로 중간중간 내용을 전해주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 53. 청각장애인과 함께 일할 때에는, 시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시범을 보이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 54. 직장 동료 중 청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파티션의 높이를 낮추고, 회의일정 및 주요 공유 내용은 눈에 잘 띄는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 55. 청각장애인은 위급한 상황을 문자로 신고하게 되므로 문자 신고에 유의합니다.
- 56. 청각장애인 가정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시간 약속을 정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시 문자로 안내합니다.
- 57. 차량 뒷면유리에 청각장애인 알림표지가 붙어있으면 경음기를 울리는 대신 전조등을 깜빡거립니다.
- 58. 청각장애인을 부르거나 주의를 환기시킬 때에는 어깨나 손, 팔을 살짝 두드립니다.
- 59. 청각장애인과 통화를 원할 경우 수어통역센터, 통신중계서비스 등을 이용합니다.
- 60. 수어는 나라마다 다르며, 국어와 같이 각 지역마다 사투리도 있습니다.
- 61. 간단한 수어를 익힌다면 더욱 친밀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 62. 한국수어는 국어와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농인의 공용 언어이며,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시각장애인의 문자입니다.

63. 시각장애인과 만났을 때에는 자기소개를 하면서 악수를 합니다.
64. 시각장애인과 대화를 시작할 때는 이름을 부르거나 팔을 가볍게 건드려 줍니다.
65. 시각장애인과 함께 걸을 때 턱이나 계단이 있을 경우 미리 알려줍니다.
66. 시각장애인이 길을 물으면 전후좌우와 주변상황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67.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신호등의 색깔을 알려주며 함께 건넵니다.
68. 시각장애인과 음식점에 가면 메뉴와 가격을 함께 설명하며, 음식의 위치는 시각장애인 기준에서 시계방향으로 설명합니다.
69.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물건은 가까이 놓지 말고, 그런 물건이 있다면 꼭 알립니다. 물건을 살 때 물건에 대한 위치와 용도를 설명합니다.
70. 시각장애인과 함께 있다가 자리를 비울 때는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71. 시각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는 물건의 위치를 함부로 바꾸지 않습니다.
72. 시각장애인이 의자에 앉을 때에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갖다 대고 확인시켜줍니다.
73. 시각장애인에게 돈을 건네 줄 때에는 화폐단위를 설명합니다.
74. 시각장애인과 함께 걸을 때는 흰 지팡이를 사용하는 손의 반대편에서 팔을 잡게 하고, 반보 앞에서 걷습니다. 흰 지팡이 없이 걸을 때는 안내자의 오른팔을 잡을 수 있도록 한 후 반보 앞에서 인도합니다.
75. 시각장애인이 보행하고 있을 때에 흰 지팡이나 옷소매를 잡지 않습니다.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의 안전 지킴이입니다.
76.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어디든지 동반 출입이 가능합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안내견을 만지거나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77. 시각장애인이 대기표를 받고 기다릴 때 자기 순서를 놓칠 때가 있으니 옆에서 차례가 되었을 때 알려줍니다.
78. 시각장애인의 서명이 필요할 때 시각장애인이 손을 잡아 안내해달라고 요청하면 상황에 맞게 지원합니다.
79. 시각장애인과 문자를 주고받을 때는 초성을 많이 사용하거나 이모티콘 사용을 자제합니다.

80. 음식을 먹을 때 뇌병변장애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81. 뇌병변장애인은 불안하거나 긴장하면 경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긴장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82.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쉬운 말로 된 짧은 문장을 사용하며 천천히 말하고, 말을 끝까지 들어줍니다.
83.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애인)에게 특정 음악, 소음, 냄새, 공간 등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84.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애인)이 연상일 경우 존칭어를 사용하며, '-씨'를 붙여줍니다.
85.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애인)이 식당에서 메뉴를 선택하기 어려울 때 음식 사진 등으로 설명하여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86. 자폐성장애인은 특별한 목적없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상동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복적 행동을 비난하거나 흥내 내지 않습니다.
87. 자폐성장애인이 언어적 표현이 안 될 경우 그림, 행동 등 비언어적 의사표현에 집중합니다.
88. 자폐성장애인은 위험한 순간의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뜨거운 물, 전기, 자동차 등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언어적 주의만이 아닌 직접적인 행동으로 도움을 줍니다.
89. 다운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생김새가 비슷한 것이 특징인데 “누구랑 똑같이 생겼네”라고 말하는 것은 실례입니다.
90. 정신장애인은 일부 활동 및 생활영역에 제한이 있을 뿐 지능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91. 혈액 투석중인 신장장애인에게 갑작스럽게 힘을 주어 투석을 받는 팔목이나 복강부분을 밀치면 위험합니다.
92. 언어장애는 청각장애와는 달리 소리는 듣지만, 언어적 표현이 힘든 장애입니다.
93. 언어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이 지적능력까지 낮을 것이라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94.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서두르거나 끼어들지 않고 이해가 어려울 경우 필담을 활용하여 끝까지 관심을 보이며 들어줍니다.

95. 언어장애인이 느리게 쉬어가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대답을 하여 경청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96. 내부기관 장애인은 식단조절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음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97. 장루·요루장애인은 복부에 힘이 들어가면 탈장 가능성이 있으니, 무거운 짐을 들거나 오래 서 있지 않도록 합니다.
98. 호흡기장애인을 만날 때 향수나 스프레이 등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는 화학물질사용을 자제합니다.
99. 호흡기장애인과 함께 걸을 때 천천히 걷고, 계단보다는 경사로를 이용합니다.
100. 뇌전증장애인이 경련을 일으킬 때 당황하지 말고 위험한 물건을 치우며, 경련이 지속될 경우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 장애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

단어

과거용어	비하용어	자제용어	법적용어 (올바른 용어)
	정상인	일반인	비장애인
장애자·심신장애자	애자·불구자·병신·불구		장애인
장님·소경·봉사	애꾸눈·외눈박이	맹인	시각장애인
	귀머거리		청각장애인
	말더듬이·병어리		언어장애인
	언청이		안면장애인
정신지체인·정신박약자	백치·저능아		지적장애인
지체부자유자	찐따·절름발이·앉은뱅이· 불구자·뽕추		지체장애인
간질장애인			뇌전증장애인

관용적 표현

부적절한 표현	대체 표현
장애를 앓다	장애를 갖다
절름발이 ○○	불균형적인·조화롭지 못한
귀머거리 삼년·병어리 삼년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꿀 먹은 병어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말문이 막힌·말을 못하는
병어리 냉가슴 앓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가슴앓이하다
병어리장갑	손모아장갑·엄지손장갑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	일부만 알면서 전체를 알듯이·주먹구구식
눈 뜬 장님	무엇을 보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눈먼 돈	대가없이 얻은 돈·임자(주인)없는 돈
외눈박이의 시각	왜곡된 시각·편파적인 시각
외눈박이 방송	편파 방송

※ 대체 표현은 상황에 맞는 표현을 사용

글쓴이 _____

- 김현정 前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
서문원 한국뇌성마비정보센터 소장
송경재 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신재민 넷마블문화재단 대리
김철환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활동가
이용석 더 인디고 편집장
김헌식 대구대학교 대학원 장애학과 외래교수

기획위원 _____

- 권택환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
백종환 에이블뉴스 대표
이정연 한국방송라디오센터3라디오 PD

2023년 모니터 보고서 한국사회와 고령장애인

-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이수성 이사장
발행처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2504호
(양평동5가, 아이에스비즈타워1차)
전화 02-784-9727
팩스 02-784-9729
홈페이지 www.wefirst.or.kr
디자인 및 인쇄 아임디자인

2023년 모니터 보고서

한국사회와
고령장애인

